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행정학석사학위논문

남북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을 중심으로 -

2012년 8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송 희 경



# 남북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홍 준 형

이 논문을 행정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6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송 희 경

송희경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6월

위	원	장	이	석	원	(	인	)	
부	위	원	장	박	순	애	(	인	)
위		원		홍	준	형	(	인	)

## 국문 초록

본 연구는 1989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남북간 진행된 상업적 거래인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을 중심으로 남북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남북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법제도적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정치적 요인으로는 1989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남북관계에 있어서 긴장의 고조 및 완화 정도를 고려할 수 있으며, 경제적 요인으로는 같은 기간 남한의 경기변동을 고려할 수 있다. 법제도적 요인으로는 남북교역에 있어서 물품의 이동시에 거쳐야 하는 반출·반입 승인제도의 변천이 일반 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연구기간 중에 발생하였던 정치적 사건을 COPDAB 척도를 활용하여 1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발생빈도를 구하였다. 남한의 경기변동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남한의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등락률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법제도적 요인으로는 물품의 반출·반입 승인을 규율하는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의 개정을 검토하였다.

세 가지 독립변수 외에 남북교역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남북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로서 2006년 10월에 단행된 일본의 대북경제제재와 북한의 내부적인 경제정책의 변화인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09년 화폐개혁을 함께 고려하였다.

월별 교역액과 교역품목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해 보았을 때, 일반교역 반입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북간 정치적 사건,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화폐개혁이었다. 일반교역의 반출액에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었는데 이는 일반교역이 남한의 반입 위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반교역의 반입품목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한의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등락률, 일본의 대북제재, 북한의 7.1조치였다. 일반교역의 반출품목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남북간 정치적 사건과 경제

성장률 및 소비자물가등락률이였다. 즉 일반교역에 있어서는 법제도적 요인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이 일부 영향을 미치며, 특히 통제변수에 해당하는 일본 요인과 북한 요인의 영향력이 컸다.

위탁가공교역에 있어서는 반입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한의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등락률, 일본의 대북경제제재,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였다. 위탁가공교역의 반출액에는 소비자물가등락률과 일본의 대북경제제재,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였다. 위탁가공교역의 반입품목수에는 정치적사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등락률, 일본의 대북경제제재,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화폐개혁이 포함되었다. 위탁가공교역의 반출품목수에는 정치적사건, 소비자물가등락률, 반출입고시의 개정, 일본의 대북경제제재, 화폐개혁이었다. 위탁가공교역에 있어서는 정치적요인, 경제적요인, 법제도적 요인이 모두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적 요인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 요인과 북한 요인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일단 남북교역이 시작되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적으로는 남북간 정치적 긴장완화 여부도 일부 영향을 미치지만, 국내의 경기변동 및 법제도적 변동도 영향을 미친다. 국제적으로는 북한을 둘러싼 무역환경의 변화, 북한 내부적인 경제정책의 변화도 남북교역을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현재 잠정중단된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을 향후 재개할 때에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남북교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남북교역, 일반교역, 위탁가공교역, 남북관계, 경기변동, 법제도  
**학번 :** 2004-22843

##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1
2. 문제의 제기와 연구의 목적 .....	4
제2절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	8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	8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	10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11
제1절 남북교역에 관한 논의 .....	11
1. 남북교역의 절차 .....	11
2. 남북교역의 현황 및 특징 : 1989년부터 2010년까지 .....	14
3. 남북교역의 법제도 .....	20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38
1. 남북교역의 ‘정치적 측면’에 관한 연구 .....	38
2. 남북교역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연구 .....	39
3. 남북교역의 ‘법제도적 측면’에 관한 연구 .....	41
제3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	45

제1절 연구 문제의 선정 .....	45
제2절 연구 설계 .....	48
1. 변수의 선정 및 조작적 정의 .....	48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의 틀 .....	56
3. 연구의 가설 설정 .....	57
4. 분석모형 .....	59
 <b>제4장 연구분석 결과 및 해석 .....</b>	<b>59</b>
제1절 기술적 해석 .....	59
제2절 실증 분석 .....	63
1. 일반교역의 경우 .....	63
2. 위탁가공교역의 경우 .....	69
 <b>제5장 결론 .....</b>	<b>75</b>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75
제2절 연구의 정책적 함의 .....	78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80
 ■ 참고문헌 .....	82
■ 부록 .....	85
■ Abstract .....	136



## 〈표 차례〉

<표 1> 남북교역 통계의 구성 .....	8
<표 2> 남북물자교류 운영제도 .....	21
<표 3> 남북교류협력 세부시행지침 중 남북교역제도 .....	22
<표 4> 남북교류협력법의 남북교역 조문체계 변천 .....	25
<표 5> 「반출입 고시」 제4조 및 제5조 .....	28
<표 6> 「반출입 고시」 개정 경과 .....	31
<표 7> 「반출입 고시」 개정의 성격 .....	36
<표 8> 주요 선행연구 결과 .....	44
<표 9> 변수 선정 및 측정 방법 .....	55
<표 10> 종속변수의 기술통계 .....	60
<표 11> 독립변수 - 남북간 주요사건 발생빈도 .....	61
<표 12> 독립변수 -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등락률 .....	62
<표 13> 독립변수 - 「반출입 고시」 개정 기술통계 .....	62
<표 14> 통제변수 기술통계 .....	63
<표 15> 일반교역 반입액 회귀분석 .....	64
<표 16> 일반교역 반출액 회귀분석 .....	65
<표 17> 일반교역 반입품목수 회귀분석 .....	67
<표 18> 일반교역 반출품목수 회귀분석 .....	68
<표 19> 위탁가공교역 반입액 회귀분석 .....	70
<표 20> 위탁가공교역 반출액 회귀분석 .....	71
<표 21> 위탁가공교역 반입품목수 회귀분석 .....	72
<표 22> 위탁가공교역 반출품목수 회귀분석 .....	73

## <그림 차례>

<그림 1> 남북관계와 남북교역 .....	4
<그림 2> GDP성장률과 남북교역 .....	5
<그림 3> 「반출입 고시」 개정 성격 .....	7
<그림 4> 남북교역 절차 .....	12
<그림 5> 연도별 광의의 남북교역액 .....	14
<그림 6> 연도별 일반교역액 .....	15
<그림 7> 연도별 위탁가공교역액 .....	16
<그림 8> 일반교역 품목별 현황 .....	17
<그림 9> 위탁가공교역 품목별 현황 .....	18
<그림 10> 연도별 교역업체 현황 .....	19
<그림 11> 개념적 분석틀 .....	47
<그림 12> 연구의 분석틀 .....	56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남북교역은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sup>1)</sup>과 그 후속조치인 「대북한 경제개방조치」를 계기로 1989년부터 시작되어 2010년 「5.24조치」<sup>2)</sup>로 잠정 중단될 때까지 20년간 지속되었다.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은 초기에는 북한산 물품을 남한으로 반입하는 일반교역만 존재하였으며, 1992년부터는 남한 사업자가 원부자재와 설비를 제공하고, 북한에서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완제품을 가공하여 들여오는 위탁가공 교역이 시작되었다. 북한 지역에 대한 직접 투자인 경제협력사업은 1995년 대우의 남포공단 합영사업을 최초로 「5.24조치」 이전까지 총 48건이 승인되었다. 한편 1998년 11월에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되었고, 2003년 6월 착공된 개성공단은 2004년 12월부터 입주기업들의 조업을 시작하여 2012년 3월 현재 총 123개 기업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

1) 1980년대 말 세계적인 탈냉전의 흐름 속에서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의 일환으로서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을 발표하였다. 7.7선언에서 정부는 남북 상호교류와 자유왕래, 이산가족의 서신왕래와 상호방문, 남북교역과 문화개방, 국제사회에서 남북한 협조 등을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간 경제협력은 1988년 11월에 대우가 홍콩 중개상을 통해 북한도자기 519점에 대한 반입 승인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통일부, 「남북교역 실무안내 2006」 p347)

2)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정부는 북한에 도발의 대가를 인식시키고, 호전적 태도에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5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여 체계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5월 2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북한에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선언했다. 같은 날 통일·외교통상·국방 3부 장관의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따른 분야별 대응조치를 발표하였으며, 통일부장관은 5대 남북교류협력 중단조치를 발표하였다.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을 불허하고, 남북교역을 중단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방북을 불허하고, 또한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를 불허하기로 하였으며, 취약계층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을 원칙적으로 보류하기로 하였다. (통일부, 「통일백서 2010」 p42~43)

이처럼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은 일반교역, 위탁가공교역, 직접투자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직접투자도 평양·남포 등 내륙투자에서 금강산지구·개성공업지구 등 특구투자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경제교류협력행위는 법률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sup>3)</sup>에 근거하지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하위 행정규칙은 다르며<sup>4)</sup>, 참여 기업의 성격, 정부의 관리·지원정책도 또한 다르게 전개되어 왔다. 그런데 남북간 경제교류협력행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인도적 지원과 경제교류협력사업을 세분하지 않고 ‘교류협력’이라는 범주로 다루었으며, 경제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도 남북교역과 경제협력사업을 구분하는 연구는 드물었다. 이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또는 남북경협에 대해서 ‘정책이 상황적 조건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고 있다’<sup>5)</sup>라는 평가가 별다른 논증 없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 중에서도 가장 오래 지속되고, 가장 많은 이해관계자<sup>6)</sup>를 가지고 있는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의 현황과 본질에 대해서도 ‘정치·안보상황 및 남북한 당국간 관계개선 여부가 남북교역의 결정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sup>7)</sup>고 분석되어 왔다. 이러한 남북교역에 대한 상식적인 이해는 남북교역 장애요인으로 ①남북간 높은 물류비용, ②경제외적 불확실성(남북간 대결구도, 대북포용정책의 지속성 여부, 북한 체제의 불확실성, 불안정한 대외환경 변화), ③대북사업 정보 부족, ④대북교역 제도 정비의 미비 등 모든 요인이 포괄적으로 지적되고, 남북교역 활성화 방안도 ①고물류비 지원대책 마련, ②경제외적 불확실성 최소화 ③법제도 정비(남북교류협력법 정비, 투자보장·이중과세·상사 분쟁조정 제도 마련) ④실무분야 지원강화(대북사업 전문가 양성, 북한산 제품의 시장확보 지원) 등이 광범위하게 제시되곤 하였다<sup>8)</sup>.

3) 개성공단의 경우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다.

4) 대북 직접투자자와 관련해서는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처리지침」이 적용된다.

5) 이석기(2006), 「남북경협 15년의 평가와 과제」 p57

6) 남북교역 업체는 1989년에는 32개 업체에 불과하였으나, 20년이 지난 2009년에는 개성공단 관련 업체를 제외하고도 800여개에 이르게 되었다. (김병대 「북한경제리뷰 2010년 11/12월」 p21, KDI)

7) 김진섭(2011), 「남북교역의 대금결제 관행과 대응방안」 p391

8) 최상래(2000), 「남북교역의 활성화 방안」 (한국무역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537~557)

그러나 남북교역은 인도지원이나 사회문화교류사업과 달리 민간사업자 주도로 이루어지는 분야이다. 한편, 대북 직접투자에 참여하는 기업에 비해서 남북교역에 참여하는 기업은 소규모이며, 거래에 따른 매몰비용이 작거나 거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에 해당하는 남북교역은 대북 인도지원이나 대북 직접투자, 개성공업지구·금강산관광지구 투자와 다른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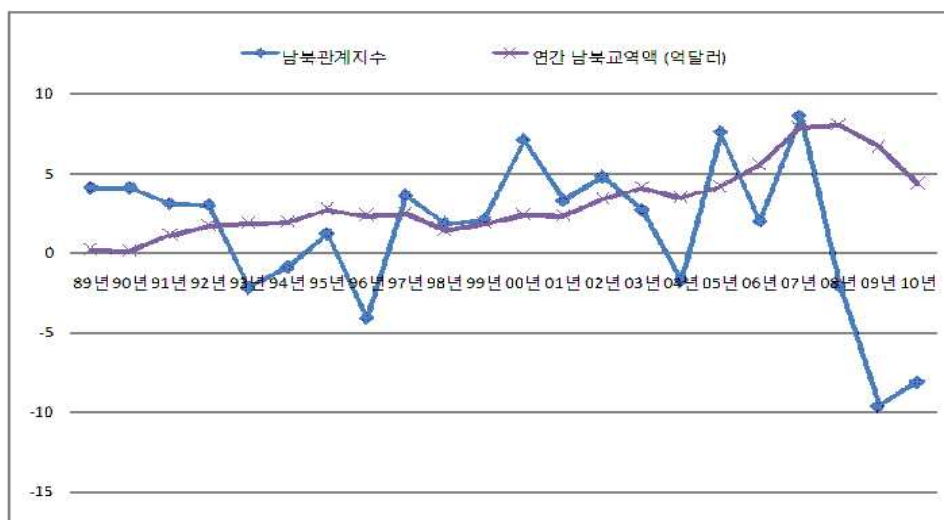
즉, 남북교류협력은 그 하위분야별로 다양한 성격을 가질 수 있으나, 남북경제교류협력 중에서 남북교역만을 분리한 연구는 드물었으며, 남북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 남북교역의 통계자료를 통하여 남북교역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지난 20년간 진행된 남북교역이 과연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인지, 다른 국제무역처럼 여러 경제적 요인이나 ‘규제’라고 하는 법제도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한편, 지금 남북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2010년 6월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이 모두 잠정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적실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5.24조치」는 잠정적인 조치이며, 남북한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이므로 언젠가는 남북교역이 재개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난 20년간 남북교역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향후 남북교역이 재개되는 시점에서 남북교역을 활성화에 필요한 요인들을 적절하게 제도적으로 배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남북교역이 정치적 요인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남북교역의 재개 여부와 시점은 남북간 정치적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책적 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남북교역의 양상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 2. 문제의 제기와 연구의 목적

역사적으로 보면 남북교역의 시작은 「7.7선언」이라고 하는 정책적 결정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5.24조치」라고 하는 남북교류협력 중단조치로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남북교역도 ‘남북관계’라고 하는 정치적 요인이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대통령이라고 하는 최고지도자의 통일 및 대북정책, 북한의 대남정책, 한반도 주변정세가 남북교역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남북관계와 남북교역



\* 남북관계지수 : COPDAB척도(붙임2 참조)에 따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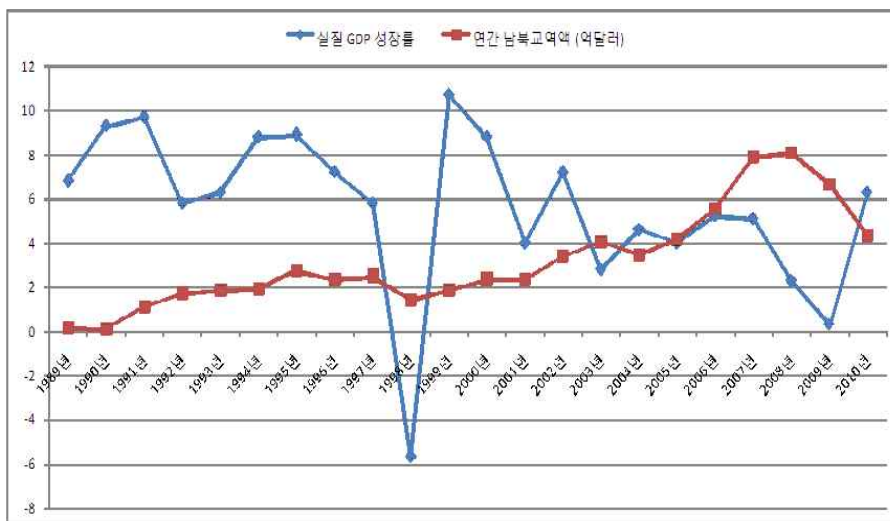
\* 연간 남북교역액 :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재구성

그런데 <그림1>을 보면 남북간 정치적 관계와 남북교역의 상관관계가 항상 긴밀하게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남북간 정치적 관계를 계량적으로 평가하여 지수화한 남북관계지수와 연간 남북교역금액을 비교해보면 2008년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남북교역도 하락하고 있어 일견 남북관계와 남북교역은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1년부터 1997년 사이에는 남북관계가 요동을 쳤음에도, 남북 교역규모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03년 사이에는 남북 관계가 급격하게 좋아졌지만 남북교역액에서 획기적인 증가는 보이지 않는다. 2004년에서 2007년간에도 남북관계는 긴장과 완화를 반복하지만 남북교역은 급증하고 있다. 즉, 남북교역이 지속되었던 지난 20년간 자료를 보면 남북교역규모가 남북간 정치적 관계가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남북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치적 요인 이외에 경제적 요인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반교역이나 위탁가공교역도 민간사업자의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상업적 거래이고, 남한에서 북한의 물품을 소비하는 구조이므로 경제적 측면이 남북교역에서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

<그림 2> GDP성장률과 남북교역



- \* 실질 GDP 성장률 : 한국은행 발표자료 재구성,
- \* 연간 남북교역액 :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재구성

<그림2>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남한의 연간 경제성장률과 연간 남북 교역규모를 비교한 것이다. 19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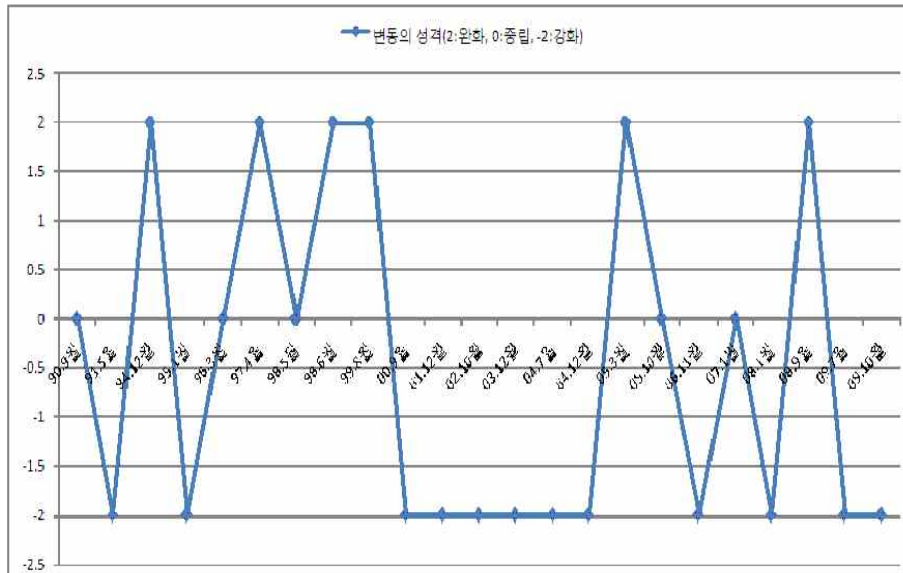
금융위기'때 남북교역도 하락되는 등의 상관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남한의 연간 GDP성장률이 호황과 불황의 변동폭이 컸지만 남북교역은 지난 20년간 성장세를 이어왔다. 즉, 경제적 요인이 남북교역에 영향을 미칠 지라도, 그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한편, 남북교역은 남한의 사업자와 북한의 주민이 만나 교역상담을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의 반출·반입 승인을 얻어 운송을 하고, 세관을 통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때 '반출반입 승인(통일부)'과 '북한산 원산지 확인 및 관세면제 판정(관세청)' 등은 관련 법률 및 하위 행정규칙에 따라 집행되는 행정행위로서 일종의 규제에 해당한다. 1989년 일반교역이 시작된 이래로 「남북교류협력법」부터 및 통일부 소관 하위 행정규칙에 이르기까지 남북교역을 규율하는 각종 법제도가 생성되어 발전해 왔다. 이러한 행정법적 제도는 담당공무원이 승인업무를 함에 있어서 재량을 구속하고 결과적으로 민간사업자를 규율함으로써 남북교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책결정이 법률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로 위임되고 세분화될수록 정치적 역동성과는 구별되는 법치행정의 논리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아래의 <그림3>은 남북교역에서 물품의 반출·반입 승인을 규율하는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의 개정시기와 개정의 성격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반출입 고시」는 1990년 9월에 제정된 이래로 2010년 9월까지 총 23차례 개정되었다. 임의적으로 일종의 명목 척도로서 규제가 완화된 경우에는 (+)2값을 부여하고, 규제가 강화된 경우에는 (-)2값을, 규제가 특별히 강화되거나 완화되지 않은 중립적인 개정인 경우에는 (+)0값을 부여하였다. 1990년대 고시개정은 규제강화와 완화, 중립이 순차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규제가 연속해서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로 대북포용정책이 진전되고 있었음에도, 행정적으로는 규제 강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의 강화 또는 완화가 남북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그림 3〉 「반출입 고시」 개정 성격



\* 자료 :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연구자가 작성

1989년부터 2010년까지 남북교역금액과 남북관계의 변화 동향, 남한의 GDP성장률의 변화 동향을 직관적으로 살펴보면 긴밀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시기도 있지만, 기본적인 추세치는 상관관계가 낮아 보인다. 또한 남북교역에서 물품의 반출·반입 승인을 규율하는 「반출·반입 승인대상 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는 지난 20년간 빈번하게 개정되었지만 실제로 남북교역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는 분석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정치적, 경제적, 법제도적 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남북관계와 남한의 경기 호·불황, 규제 변화가 남북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는 남북교역을 대상으로 한다. 남북교류협력법 제2조<sup>9)</sup>는 남북교역을 그 원인 또는 목적에 관계없이 물품등이 제3국 단순경유<sup>10)</sup>를 포함하여 남한과 북한을 이동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남한과 북한을 이동하는 모든 물품등이 남북교역에 해당된다. 즉,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반출반입이나 인도지원을 위한 반출반입도 포함되어 남북간 교류협력이 모두 남북교역에 수렴되게 된다. 현재 통일부에서 매월 발표하는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은 이러한 정의를 사용하여 <표 1>에서처럼 상업적 거래와 비상업적 거래를 모두 '남북교역 통계'로 발표하고 있다.

<표 1> 남북교역 통계의 구성

상업적 거래		비상업적 거래	
교역	일반교역	대북지원	정부지원
	위탁가공교역		민간지원
경제협력사업	개성공단	사회문화협력사업	사회문화협력
	금강산 관광	경수로사업	경수로 건설
	기타 협력사업		KEDO 중유
경공업협력사업	경공업협력사업	에너지지원	에너지지원

9) 「남북교류협력법」 제2조(정의) "2.'교역'이란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3.'반출·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0) "제3국을 단순히 경유한다"는 의미는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에서 환적 등만 이루어지고, 수출·수입통관절차는 거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통일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설집, p42)

본 연구는 남북간 교류협력 중에서 가장 상업적인 부분의 활성화와 침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남북교역을 ‘대외 무역<sup>11)</sup>’에 준하여 이루어지는 반출반입으로서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으로 한정<sup>12)</sup>하고, 「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 및 제17조의2<sup>13)</sup>에 따른 협력사업<sup>14)</sup>을 위한 반출반입은 제외한다. 따라서 <표1>에서 비상업적거래 및 상업적거래 중에서도 경제협력사업과 경공업협력사업도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반교역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상품거래로서 대가의 지급을 전제로 물품을 북에서 남으로 보내거나 남에서 북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남한과 북한간에는 주로 남한에서 일방적으로 북한 상품을 반입하여 소비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위탁가공교역은 임가공료 지급을 전제로 주문자(남한의 사업자)가 원부자재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북한의 생산공장에서 가공한 이후 그 완성품을 다시 반입하는 사업형태이다<sup>15)</sup>. 남북교

- 
- 11) 서로 상이한 경제권에 속한다 할지라도 남한과 북한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이기에 ‘대외무역’ 대신에 ‘교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12) 실무적으로는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에 대해서는 ‘순수교역’ 또는 거래성 남북교역으로 언급하기도 한다. 이러한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통일부는 2011년 ‘반출·반입’과 별도로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을 ‘교역사업’으로 정의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안으로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 13) 「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 “①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의2(협력사업의 신고) “①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와 제5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신고한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14) 「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는 협력사업에 관한 규정으로서 거래말큰사전 발간 같은 사회문화협력사업은 물론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사업도 모두 동 조항에 근거한 협력사업이다. 그 중 제17조의2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지구와 같은 특구에서의 소액투자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제협력사업에 포함된다.
  - 15)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위탁가공무역’과 수탁가공무역’을 별개로 정의하고 있다.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제7호에 따르면 ‘수탁가공무역이란 가득액을 영수(領收)하기 위해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그 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등을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역과 관련하여서는 「남북교류협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이외에 「반출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이하 「반출입 고시」라 한다)가 중요한 법제도이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일반교역이 시작된 1989년 1월부터 잠정적으로 중단된 2010년 5월까지로 하며, 월별 단위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기초자료는 통일부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 및 연간 「통일백서」, 행정규칙 개정과 관련된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여 일반교역·위탁가공교역 연혁과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기존 선행 학술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남북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볼 것이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법제도적 요인의 특성을 검토하고, 관련 통계 자료를 확보하여 이들 개별 변수들이 남북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SPSS 회귀분석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총 다섯 부분으로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지난 20년간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 현황을 교역규모 및 교역품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남북교역의 주요 제도에 해당하는 「반출입 고시」의 연혁 및 변천 과정도 개괄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분석틀을 설계하고, 이에 근거하여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3장의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인 함의와 한계를 도출할 것이다.

##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제1절 남북교역에 관한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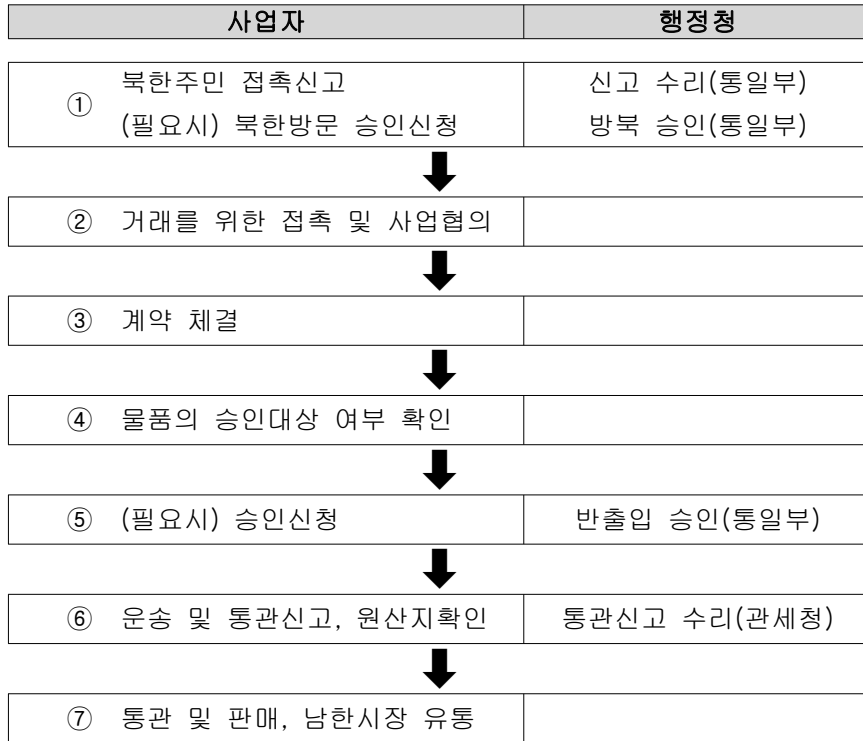
#### 1. 남북교역의 절차

「남북교류협력법」에서는 북한 주민과 일반교역이나 위탁가공교역을 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한 주민간의 접촉을 신고수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남북한 주민간 접촉’에 대해 북한주민을 직접 만나는 회합 외에 통신수단(전화, 우편, 이메일, 팩스 등) 및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의사교환을 모두 접촉으로 해석<sup>16)</sup>하고 있다. 교역은 거래 과정에서 북한 주민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의사교환을 해야 하므로, 결국 남북교역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전에 ‘북한주민접촉신고’<sup>17)</sup>를 해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접촉자, 접촉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접촉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북한 주민과의 사업협의를 개성공단,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나 금강산지구 등에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북한방문승인신청을 하여 방북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협의를 목적으로 방북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북한주민접촉신고’가 면제된다.

16)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해설집, p32

17)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1항의 접촉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에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④제1항 본문에 따른 접촉신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이거나,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그림 4> 남북교역 절차



북한의 거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해당 물품, 거래형태, 대금결제방법 등이 통일부장관의 승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것을 규정한 것이 바로 「반출입 고시」의 제4조와 제5조이다. 사업자가 거래하고자 하는 물품이 반출반입 승인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통일부에 반출·반입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반출·반입의 목적을 고려하여 최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반출·반입을 승인한다.

남한과 북한간 화물은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는 자동차를 통해서 육로로 운송되지만, 남북교역에서는 주로 선박을 이용해서 해로로 운송되었다.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항공기·자동차 등을 운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sup>18)</sup>. 「5.24조치」 이전에는

18) 「남북교류협력법」 제20조(수송장비의 운행) “①남한과 북한 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서해에서는 인천-남포항간에는 ‘트레이드포춘호’와 ‘동남1호(북한선박)’이 각각 주1회 운항되었으며, 동해에서는 부산-나진항간에 ‘단결봉호(북한선박)’이 월 2~3회 정기적으로 운항되었다.

운송된 화물이 세관을 통관할 때 사업자는 일반적인 수입·수출절차에 준하여 통관서류를 제출하여야 있다. 즉, 관세청에서는 「수입통관사무처리예관한고시」 및 「수출통관사무처리예관한고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신고서를 받고(수입신고서 또는 수출신고서 양식 사용), 물품검사를 실시한다. 반입물품검사는 반입물품 규격과 수량을 확인하여 그 물품의 HSK를 확인하고, 세율을 결정하여 밀수품이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반출물품검사는 원칙적으로 생략하나 전략물자 등에 해당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점심사를 실시한다<sup>19)</sup>.

북한산 물품은 남북교류협력법 제12조 및 제26조<sup>20)</sup> 등에 의하여 내국간 거래로 간주되어 관세 및 수입부과금은 면제된다.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사업자는 원산지를 증명해야 하는데,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sup>21)</sup>에 따라 북한산 물품은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원산지 확인기관이 되며, 남한산 물품은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원산지 확인기관이 된다. 관세청은 해당 물품이 북한에서 전부 생산·가공·제조된 경우이거나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과정이 북한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북한산으로 인정하여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이라도 북한산이 아닌 물품은 관세부과의 대상이 된다.

---

자동차 등(이하 “수송장비”라 한다)을 운행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강홍중(2006), 「남북교류활성화를 위한 관세제도 효율화방안」 p114~117

20) 남북교류협력법 제12조(남북한 거래의 원칙)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남북교류협력법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②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과 관련된 조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등을 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따른 과세 규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수입부과금(輸入賦課金)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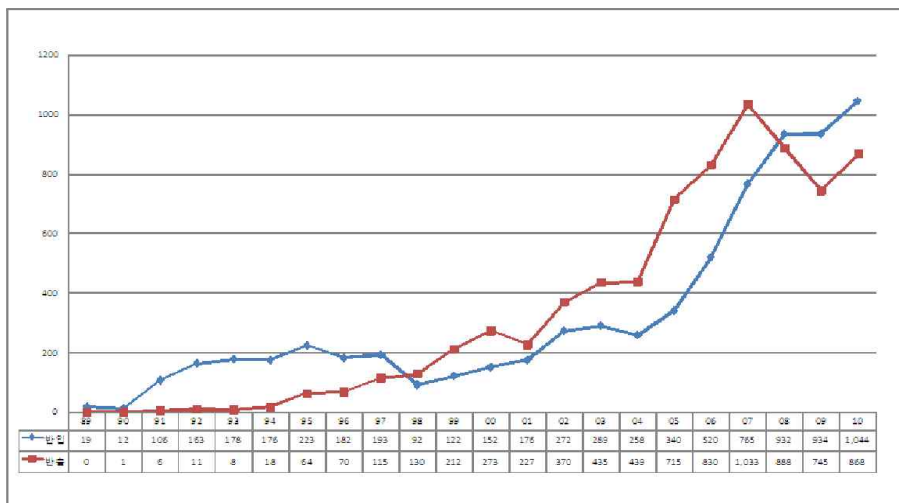
21) 2003.7.31일에 채택(2003.9.29발효)된 남북합의서로서 통일부는 동 합의서를 근거로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2003.9.29)를 제정·시행하였다.

## 2. 남북교역의 현황 및 특징 : 1989년부터 2010년까지

### 1) 남북교역 규모

<그림 5>에서 광의의 남북교역통계<sup>22)</sup>를 살펴보면 1989년 1,872만달러에 불과했던 전체 교역액은 2010년에는 19억 1,225만달러로 100배 이상 증가하였다. 광의의 남북교역통계는 2005년을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2004년 12월에 개성공업지구 시범단지가 가동하면서 반출·반입의 기본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광의의 남북교역통계에서 초기에는 반입이 반출보다 컸으나, 1998년 이후에는 2007년까지 줄곧 반출 금액이 반입 금액보다 많다. 이는 남한이 북한에 대하여 일방적인 흑자구조를 시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북 인도지원 및 각종 협력사업 추진과정에서 남한에서 북한으로 물품 이동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림 5> 연도별 광의의 남북교역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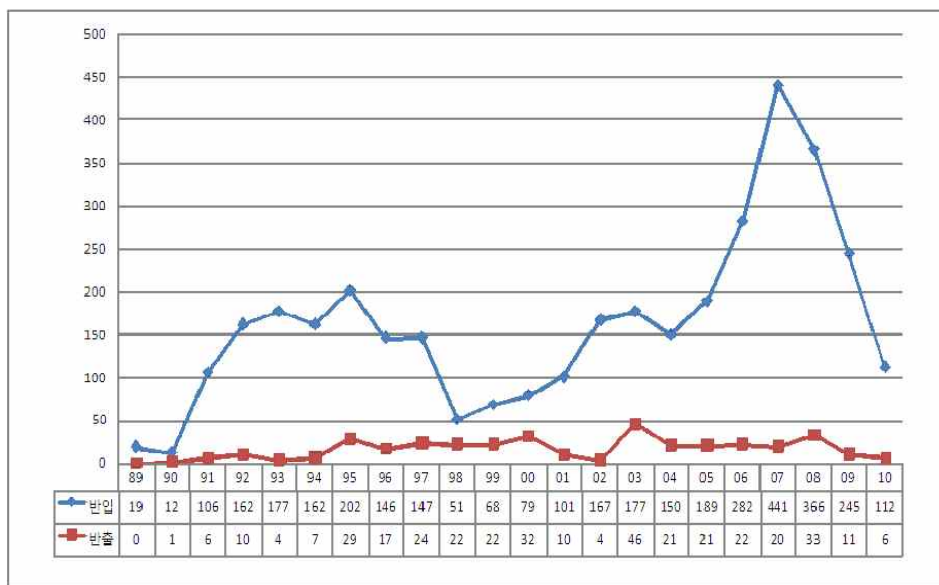
\* 통일부 : 월간 교류협력동향 재구성(단위 : 백만달러)

22) 용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월간교류협력동향」으로 발표되는 남북교역통계를 광의의 남북교역통계로 언급하겠다.



<그림 6>은 광의의 남북교역통계에서 일반교역액 통계만을 분리한 것으로 일반교역액은 1989년 1,872만 달러<sup>23)</sup>로 시작하였고, 가장 많았던 2007년에는 4억 6,141만 달러로 1989년에 비해 24배 이상 증가하였다. 1991년 약 1억달러를 기록하고 1995년에는 약 2억 3천만달러 규모까지 성장하였으나, 199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8년과 1999년에는 1억 달러 미만으로 하락하였다. 2002년 이후 다시 안정적으로 성장하였으며 2006년과 2007년에는 전년보다 약 1억~1억 5천만달러 이상 급증하였다. 2010년은 「5.24」조치 이후 이미 대금이 결제된 경우만 반입이 허용되면서 교역액이 급감하고 있다. 1989년부터 2010년까지 일반교역액은 총 39억 2,909만 달러로 광의의 남북교역액의 26.9%를 차지한다.

<그림 6> 연도별 일반교역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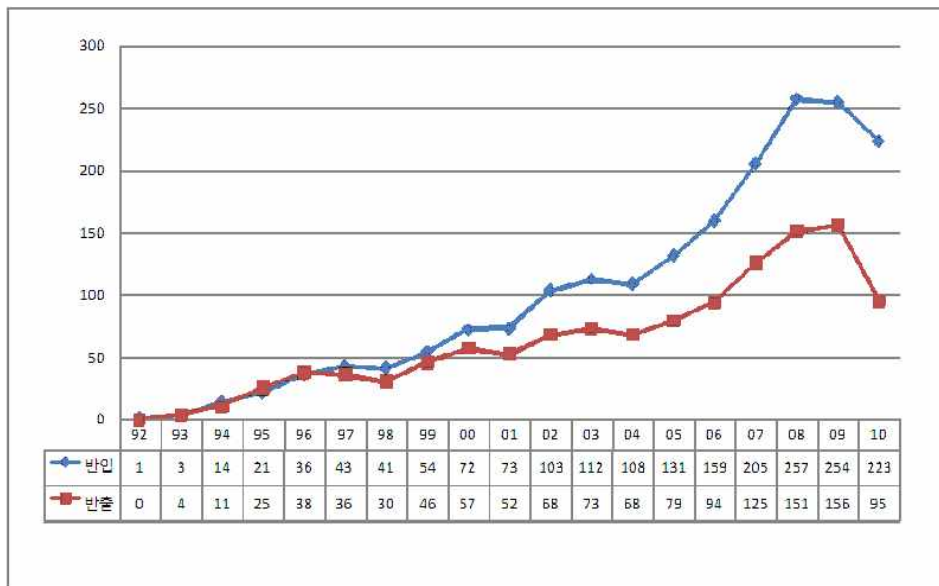


\* 통일부 : 월간 교류협력동향 재구성(단위 : 백만달러)

23) 최초의 반입 승인은 1988년 11월 14일 대우가 신청한 북한산 도자기 519점<sup>1)</sup>이었지만, 북한산 물품이 실제 남한으로 들어와 교역통계에 잡힌 것은 1989년이다.(통일부, 「남북교역 실무안내 2006」, p347)

위탁가공교역은 1992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림 7>를 보면 1992년 84만 달러로 시작한 위탁가공교역은 2009년 4억 971만 달러로 487배나 증가하였다. 위탁가공교역은 일반교역보다 작은 규모로 시작되었으나, 동아시아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과 1999년, 개성공단이 조성되던 2004년을 제외하고는 더 빠르게 더 안정적으로 성장하였다. 2010년에는 위탁가공교역도 「5.24조치」 이전 시점에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원부자재의 반출과 완성품의 반입이 이루어지면서 교역액이 하락하고 있다. 1992년부터 2010년까지 위탁가공교역액은 총 31억 18백만 달러로 광의의 남북교역액의 21.3%에 달한다.

<그림 7> 연도별 위탁가공교역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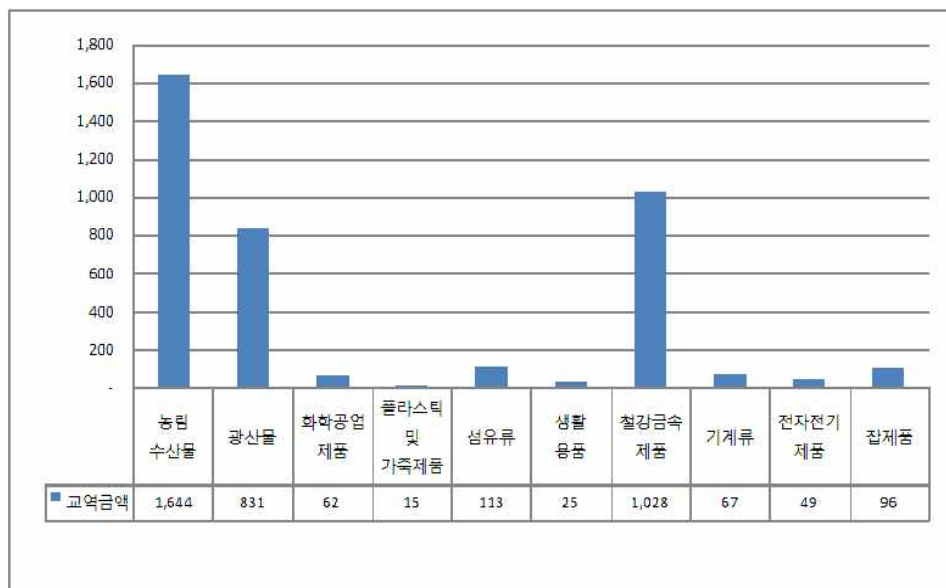
\* 통일부 : 월간 교류협력동향 재구성(단위 : 백만달러)

1989년부터 2010년 5월까지 교역금액을 보게 되면 일반교역액과 위탁가공교역액 총 합계는 70억 4천 7백만달러로 광의의 남북교역통계액 146억 7백만달러의 약 48%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 2) 남북교역 품목

<그림 8>에서 1989년부터 2010년까지 일반교역의 품목별 비중을 보면 농림수산물 41.8%, 철강금속제품 26.2%, 광산물 21.1%로서 약 89%가 1차 산품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아연도, 철광석 등이 주로 반입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무연탄, 모래 등 광산물 및 북한산 농림수산물이 주로 반입되었다. 농림수산물 중에서는 특히 바지락, 가리비 등 어패류의 반입 비중이 높았다.

<그림 8> 일반교역 품목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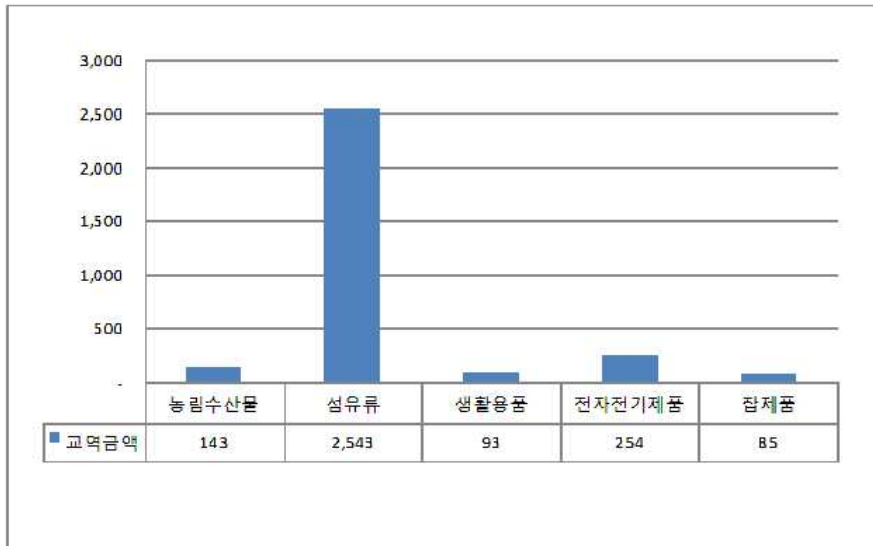


\* 통일부 : 월간 교류협력동향 재구성(단위 : 백만달러)

<그림 9>에서 위탁가공교역 품목을 보게 되면 의류 및 신발 등 섬유류가 약 81.6%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라디오·카세트류의 간단한 조립식 전기전자 제품이 약 8.1%의 비중을 차지한다. 농림수산물은 주로 2006년부터 원자재에 해당하는 남한산 통마늘이 반출되어 북한에서 간

마늘로 가공되어 반입되면서 위탁가공교역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림 9> 위탁가공교역 품목별 현황



\* 통일부 : 월간 교류협력동향 재구성(단위 : 백만달러)

남한과 북한간의 교역이 20년간 지속되었지만, 일반교역은 농림수산물 및 철광금속제품, 광산물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위탁가공교역은 석유류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거래품목이 지극히 단순함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일반교역에서는 북한산 1차산품을 반입하는 거래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위탁가공교역에서는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는 단순가공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남한과 북한간의 경제력 격차<sup>24)</sup>에 의해서 북한이 남한 상품을 소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북한산 제조품이 남한에서 경쟁력을 가지기에는 아직은 품질 및 마케팅 면에서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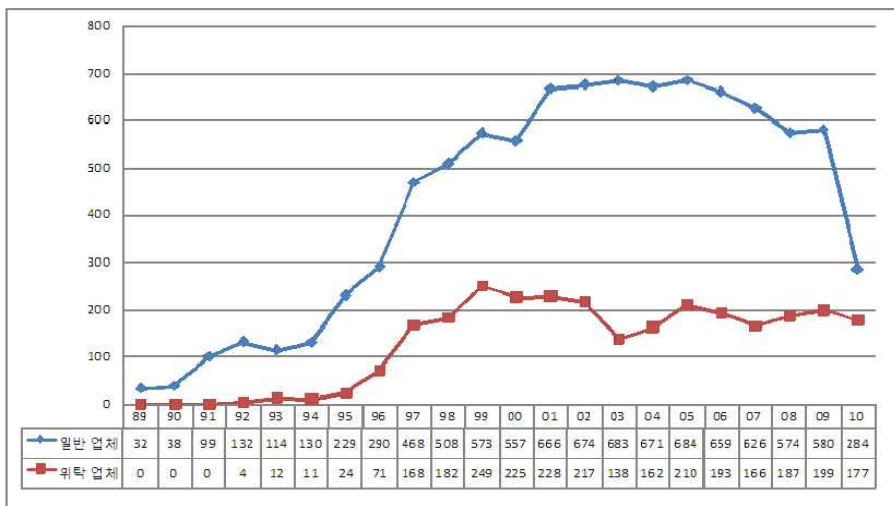
24) 2010년 1인당 명목GNI를 보면 남한은 20,759달러, 북한은 1,074달러로 19.3배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통계청,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2011, p78)

### 3) 남북교역 업체

남북교역은 승인제나 신고제 없이 운영되었기 때문에 교역업체의 수가 정확하게 확정되기는 어렵다. 통일부에서는 매년 반출반입 통관신고 실적이 있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사후적으로 교역업체의 숫을 보면, 남북교역업체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일반교역업체는 500~600여개, 위탁가공업체는 대략 150~250여개 범위 내에서 유지되었다. 특히 2005년 이후를 보면 일반교역업체는 점차 감소한 반면 위탁가공교역업체는 2005년~2007년 사이에 감소하다가 2008년부터 다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년은 「5.24조치」로 남북교역이 중단되면서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 실적이 있는 업체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일반교역업체 수는 전년 대비 50%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어, 일반교역이 위탁가공교역에 비해서도 매몰비용이 낮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남북교역을 하였다가 철수하는 업체,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을 동시에 하는 업체, 대북 직접투자를 하면서 일반교역이나 위탁가공교역을 하는 업체 등을 고려할 때, 남북교역을 안정적으로 하였던 업체는 대략 700개 내외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0> 연도별 교역업체 현황



\* 통일부 : 월간 교류협력동향 재구성

### 3. 남북교역의 법제도

#### 1) 제도의 형성 및 연혁

1990년에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한 주민간 접촉, 상호 왕래, 교역 및 통신업무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작용<sup>25)</sup>한다. 「남북교류협력법」은 1988년 7월 7일 노태우 대통령의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에서 시작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결정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으로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집행되는 것이 행정법체계에는 부합하나, 남북교역에 관해서는 「정책결정 → 행정규칙」으로 실제 정책집행이 구현되고 난 이후에 해당 법률이 제정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7.7선언」에는 ①남북한 주민간의 자유왕래, ②이산가족간 서신교환 및 상호방문, ③남북한 교역의 문호 개방, ④북한과 우방국 교역 不반대, ⑤국제사회에서의 남북한 협력, ⑤북한과 우방국의 외교관계 개선 협조 및 북방외교 추진이라는 6개항의 정책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7.7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당시 경제기획원은 1988년 10월 7일 「대북한 경제개방조치」를 발표하였다.<sup>26)</sup> 「대북한 경제개방조치」는 민간사업자의 북한교역을 허용하고, 간접교역도 직접교역에 준하여 민족 내부거래로 간주하여 관세 및 수입부과금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직접교역을 위해서는 교역품목, 대금결제, 교역절차 등에 대해서 남북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남북경제회담이 개최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한에서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업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하 ‘남북교류·협력’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26) 통일부 남북대화 제47호 p52~p54

「대북한 경제개방조치」에 따라서 당시 상공부는 1988년 10월 18에 「남북물자교류 운영제도」를 발표하였다.<sup>27)</sup> 동 발표문에서 비로소 ①민간상사 북한물자 교역허용 ②민간상사 북한물자 중계허용 ③북한 원산지 표시상표 부착허용 ④직간접 교역물자 관세 비부과 ⑤남북경제인 상호 접촉방문허용 ⑥북한선적 상용선박 입항허용 등 남북교역에서 제기되는 절차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정부의 처리방침이 확정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남북물자교류 운영제도」는 당시 상공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해당하므로 행정법상의 법규성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 <표 2> 남북물자교류 운영제도

1. **민간상사 북한물자 교역허용** : 우리측 민간상사나 국내 외국무역상사에 의해 간접교역 형태로 군사물자를 제외한 남북물자의 국내로의 반입과 북한으로의 반출 및 이의 재반출입을 허용함.
2. **민간상사 북한물자 중계허용** : 우리측 민간상사가 북한의 물자를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제3국 물자의 대북한 수출을 중계하는 행위를 허용함.
3. **북한원산지 표시상표 부착허용** : 북한의 원산지 표시나 상표가 부착된 북한 물자의 국내 반입시 원산지 표시 또는 상표를 제거하지 아니함.
4. **직간접 교역물자 관세 비부과** : 간접교역에 의해 우리측으로 직접 인도되거나 단순히 제3국을 경유한 북한원산지 물자에 대해서는 내국간 거래로 간주하여 관세 기타 수입물자에만 부과되는 제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우리측 물자의 대북반출 시에도 수출에 준하여 각종 수출관련제도를 인정함.
5. **남북경제인 상호 접촉방문허용** : 우리측 민간상사가 제3국에서 상담을 목적으로 북측 인사를 접촉하거나 북한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하며 북한 경제인이 상담목적으로 방한을 희망할 경우 이를 환영하고 이들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과 신변보장 등을 약속함.
6. **북한선적 상용선박 입항허용** : 북한선적의 선박이 남북한 또는 제3국의 교역물자를 싣고 국내 입항을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함.
7. **남북경제교류 관련법제 보완** : 상기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한 경제교류에 관련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며 이러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남북한 간접교역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상의 특수지역 교역에 관한 제 규정 등에 준하여 처리할 예정임.

27) 통일부(1991), 「통일백서 1990」, p180

따라서 정부는 「7.7선언」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발표 이후 7개월 뒤인 1989년 2월 13일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동시에, 동 법률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남북간의 교류협력추진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89년 3월 31일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다<sup>28)</sup>,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는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7월 21일 「남북교류협력 세부시행지침」을 제정하였다. 「남북교류협력 세부시행지침」에서 마련된 물자교역 등에 대한 제도 등은 이후에 제정되는 「남북교류협력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반영됨으로써 남북교역제도의 골격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표 3> 남북교류협력 세부시행지침 중 남북교역제도

#### (3) 물자교역

##### (가) 물자교역의 승인신청

대외무역법에 의해 무역업허가를 받은 자 중 남한으로부터 북한으로 또는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물자를 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신청함.

##### (나) 승인신청의 처리

승인기관의 장은 상공부장관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함.

승인기관의 장은 반출입을 승인한 경우 승인서장에 남북한교역 대상물품임을 표시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함.

##### (다) 교역물품의 관세 및 방위세 비과세

남북한간 직교역(제3국 단순경유 포함) 물품에 대해서는 내국 물품이동으로 간주하여 관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지 않음.

제3국으로 수출된 후 남한에 반입되는 북한물품이 관세법 제34조 규정의 재수입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원용함.

28) 통일부(1991), 「통일백서 1990」, p178~180



한편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한 이후 1989년 5월 15일 당시 평화민주당에서는 「남북교류촉진법안」을 발의하였으며, 민주자유당에서도 1990년 3월 14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안」을 별도로 발의하였다. 이에 국회에서는 3개 법안을 폐기하고, 외무통일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여 1990년 7월 14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남북교류협력법」은 1990년 8월 1일에 공포·시행되었으며<sup>29)</sup>, 통일부는 후속 조치로 남북한 주민간 왕래시 발생하는 휴대품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남북한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을 1990년 8월 13일에 고시하고,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1990년 9월 25일 제정하였다.

##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남북교류협력법은 총 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sup>30)</sup>의 구성과 운영, 남북한 방문 절차, 남북한 주민 접촉절차, 남북한 물품의 반출·반입 절차, 협력사업의 승인 및 신고절차, 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수송장비 운행 승인, 통신역무의 제공, 검역 등을 규율하고 있다. 이중 남북교역과 관련해서는 제12조(남북한 거래의 원칙),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제14조(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 제15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등이 직접 관련된다.

남북교류협력법은 1990년 제정 이후 2009년까지 총 13차례 개정되었으나, 타법개정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 개정된 것은 2005년과 2009년 2차례<sup>31)</sup>이다. 2005년에는 북한주민접촉 “승

29) 통일부, 「통일백서 1990」 p180~183

30)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된 민관합동 심의·의결 위원회이다.

인제”를 북한주민접촉 “신고제”로 변경하였으며,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를 「민족내부의 거래」로 명문화하였다. 2009년에는 북한주민접촉신고 면제의 근거를 신설하고, 교역대상자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협력사업자 승인제도도 함께 폐지하였다. 또한 개성공업지구와 같이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특구에서 50만달러 미만의 소액투자사업에 대한 절차 간소화를 위해 협력사업 신고제도를 신설하였다. 더불어 남북간 교류협력이 복잡화·세분화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행정조사제도를 신설하고 업무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다.<sup>32)</sup>

2005년과 2009년 법률개정에서 남북교역과 관련해서 개정된 조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2005년의 민족내부거래 조문의 명문화, 둘째는 2009년의 교역당사자제도 폐지이다. 민족내부거래 조문은 2005년에 처음 제시된 것은 아니다. 다만 「7.7선언」 제3항에서 명시된 원칙을 법률로 명문화시킴으로서 좀 더 대내외적인 규범력을 부여했다는 데 의의를 갖는다.

교역당사자제도는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당시 대외무역법의 무역업 허가제와의 조화를 위해서 도입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에는 남북교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대외무역허가를 받은 자’ 및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는 원칙적으로 부여하고,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대외무역에서 무역업에 대한 규제가 WTO가입 등을 계기로 허가제에서 완전 자유화로 완화되면서 사실상 모든 국민이 대외무역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역당사자 지정제도는 그 취지상 통일부장관이 ‘대외무역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 특별히 그 필요성이 인정될 때 남북교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대외무역을 완전히 자유화되면서 그 실익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2009년에 「남북교류협력법」에서도 사문화된 교역당사자제를 폐지하게 된다.

---

31) 통일부(200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설집」 p6

32) 통일부(200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설집」 p6

<표 4> 남북교류협력법의 ‘남북교역’ 조문체계 변천

1990년	2005년	2009년
<p><b>제12조(교역당사자)교역</b> (북한과 제3국간에 물품의 중계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로 하되, 국토통일원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역당사자중 특정한 자를 지정하여 교역을 하게 할 수 있다.</p>	<p><b>제12조(교역당사자 등)</b> ①교역(북한과 제3국간에 물품의 중계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 또는 통일부장관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로 한다.</p> <p>②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p>	<p><b>제12조(남북한 거래의 원칙)</b>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p>
<b>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b>		
<b>제14조(반출·반입 승인 대상 물품등의 공고)</b>		
<b>제15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b>		
<b>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b>		

남북교역을 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교역업체는 물품·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 등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제14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승인 대상 품목 및 승인절차에 대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이에 근거하여 「반출입 고시」가 운영되고 있다.

남북교역과 관련해서 남북교류협력법의 실질적인 변화는 거의 없었던 반면에 하위 행정규칙인 「반출입 고시」는 1990년 제정 이후 2010년 5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따라서 남북교역에서 반출반입 승인제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반출입 고시」의 변천 과정과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3) 「반출입 고시」의 주요 내용 및 개정

1989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의 시간적 범위 중 가장 최근에 개정된 2009년 10월 27일 「반출입 고시」를 보면 총 9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sup>33)</sup> 이 중 제9조는 재검토기한에 대한 규정이므로 실질적으로는 8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조는 고시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는 남북한 교역대상 품목을 규정하고, 제3조는 적용범위를 밝히고, 제4조는 승인이 필요한 반출·반입을 정하고, 제5조는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을 정하고, 제6조는 승인절차, 제7조는 한도물량, 제8조는 교역보고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빈번한 개정이 이루어진 조문이 바로 제4조와 제5조이다.

남북교역은 일반적인 대외무역과는 달리 당초에 ‘금지’에서 출발<sup>34)</sup>하였다. 또한 남한과 북한간의 상호 합의에서 시작되지 않고, 1988년의 「7.7선언」과 「대북한 경제개방조치」라는 남한의 일방적이고 선제적인 조치에서 출

33) 상세 조문은 (부록 1) 참조

34) 7.7선언 이전에는 남한과 북한간의 관계는 국가보안법의 영역에서 다루어졌다.

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간의 교역을 위한 물품, 거래형태, 대금결제 방법에 있어서 정부가 승인대상을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방식’과 ‘포괄적 열거하는 방식’을 동시에 취하고 있다<sup>35)</sup>. 또한 기존 대외무역제도를 준용함으로써 남북교역과 대외무역간의 상충을 피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 5>에서 「반출입 고시」 조문을 보면 제4조는 개별적인 반출·반입 승인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포괄적인 승인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제4조 제1항은 반출·반입을 할 때 승인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2항은 승인이 필요한 거래형태와 대금결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4조 제1항의 제1호와 제2항 제2호는 대외무역의 수출입 규제제도 및 외국환거래의 규제제도를 준용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남북교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문이 제4조 제1항 제2호~7호, 제2항 제1호와 제3호에 해당한다. 즉, 제4조 제1항에서는 도서·그림 등 「국가보안법」과 충돌될 여지가 큰 물품(2호), 운송과정에서 위장반입의 여지가 큰 경우(3호, 5호),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 이행과 연계된 경우(4호, 6호, 7호) 등은 개별적 승인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북한 상대방에게 단순히 임대하거나 무상 증여하는 경우(1호), 청산결제<sup>36)</sup>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제3호) 등도 승인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35) 규제형식 면에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사항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와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특정한 사항을 열거하여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동시에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규제방식의 유형과 개선방안 연구, 김유환 p63)

36) 청산결제란 양국간 무역에서 대금을 거래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양국의 지정은행에 설치된 청산계정에 수출과 수입을 기록하였다고 일정기간마다 대차잔액만을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남한과 북한은 2000년 12월에 청산결제합의서를 비롯한 상사분쟁해결, 이중과세방지, 투자보장 등 4개 분야의 경험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동 합의서는 2003년 6월 국회동의를 거쳐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청산결제와 관련하여 남한과 북한은 한국수출입은행과 조선무역은행을 지정하였으나, 청산결제 대상품목에 대하여 상호간에 합의하지 못함으로써 청산결제는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제성호(20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p167-197)

<표 5> 「반출입 고시」 제4조 및 제5조

조문	규정
제4조 (승인이 필요한 반출· 반입)	<p>①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등 중 반출·반입함에 있어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은 다음 각 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에서 수출·수입에 금지·허가·승인·추천·확인·증명 등의 제한이 있는 물품. 다만, 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li> <li>2. 반입하는 물품등으로서 도서(전자우편물, 전자출판물, 모사전송물 등을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미술품, 도예·공예작품, 우표, 화폐 등 유가증권(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거나 유통되었던 것), 사진, 필름(노광한 사진필름 및 영화를 포함한다), 엽서·연하장</li> <li>3.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별표1에 따른 품목</li> <li>4.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컴퓨터</li> <li>5.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포괄적 승인대상물품 중 제3국의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을 하여 반입하는 물품. 다만, 광물과 위탁가공에 의해 반입되는 섬유류는 제외한다.</li> <li>6.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 8(a)(i), (ii)에 따라 지정된 물품</li> <li>7.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 8(a)(iii)와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이 별도 공고하는 물품</li> </ol> <p>② 물품등을 반출·반입함에 있어 물품등에 대한 그 승인여부와는 별도로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거래형태와 대금결제 방법은 다음 각 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임대 또는 무상으로 반출·반입하는 경우</li> <li>2. 「외국환거래법」 제4장 지급과 거래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지급과 거래</li> <li>3. 청산결제를 통해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li> </ol>

제5조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 반입)	<p>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반출·반입을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등,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li> <li>2. 법 제17조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법 제17조의2에 따라 협력사업의 신고 수리를 얻은 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그 사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등을 반입하는 경우. 다만,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등은 제외한다.</li> <li>3.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출하는 원·부자재 및 그 위탁가공으로 생산하여 반입하는 물품등. 다만,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등은 제외한다.</li> <li>4.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여행자 휴대품·별송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li> <li>5.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기술수출입 통합고시」에서 수출·수입에 신고를 요하는 물품</li> <li>6. 남북당국 합의 및 그 위임에 의한 남북회담·행사·사무소 운영 등을 지원·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li> </ol>
------------------------------------	---

한편, <표 5>의 제5조를 보면 통일부장관이 ‘고시’ 형태로 포괄적으로 승인한 경우로서,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1호), 협력사업과 관련된 경우(2호), 위탁가공교역과 관련된 경우(3호), 여행자 휴대품(4호), 대외무역에서 신고 정도의 규제만 받는 물품(5호), 당국간 회담행사 물품(6호) 등을 나열하고 있다.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에 한정해서 적용 방식을 살펴보자면, 위탁가공교역은 「반출입 고시」 제5조 3호에 의하여 포괄적인 승인대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4조 제1항에서 열거하는 것처럼 대외무역규정에 의한 규제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부자재를 반출하거나 완제품을 반입함에 있어서 통일부장관의 개별적인 반출·반입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앞의 <그림 9>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탁가공교역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섬유류 등은 대외무역에서 금지·허가·승인 등의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반출과 반입이 용이하였다. 다만 임가공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한국은행 신고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도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대금결제 방법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교역의 경우에는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물품이 대외무역 규정에서 수출입 ‘신고’이상의 규제를 받는 품목은 「반출입 고시」 제5조 제5호와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해서 통일부장관의 개별적인 반출·반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외무역 관련 규정에서 특별한 규제가 없더라도 도서·그림류를 반입하거나(2호), <별표1>의 품목을 반입하거나(3호), 제3국을 통해서 반입하는 경우(5호)에는 통일부장관의 개별적인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컴퓨터를 반출하거나(4호),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안 1718호 및 1874호를 이행하기 위하여 WMD 등 무기 관련 물자를 반출하거나(6호), 통일부장관이 공고한 사치품을 반출하려는 경우(7호)에는 개별적인 승인이 필요하다. 물론 대금결제 방식에 있어서도 한국은행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1990년 제정 이후 2010년 5월까지 「반출입 고시」가 개정된 횟수는 총 23회이며, 대부분의 개정이 제4조와 제5조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특히 제4조 제1항의 <별표1> 개정이 가장 빈번한 개정사유에 해당한다. 당초 <별표1>은 1995년 남한의 WTO가입을 계기로 관세장벽이 높은 농림수산물에 북한산으로 위장반입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 200여개 농림수산물의 HSK코드를 지정한 것이었다. 그런데 일반교역이 1990년대 후반 이후 주로 북한산 농림수산물 반입 위주로 진행되면서 비록 북한산 농림수산물이 남한의 전체 농림수산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했지만, 품목에 따라 남한의 농어민 생산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별표1>을 개정하여 특정 품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작동하였다.

실제로 <표 6>에서 「반출입 고시」 개정경과를 보면 <별표1> 품목만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이 7회이며, 다른 조문의 개정과 더불어 <별표1>을 개정한 경우가 6회에 이르고 있어 <별표1>의 도입 이후 「반출입 고시」 개정과 <별표1>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반출입 고시」 개정 경과

개정 차수	개정 일자	개정내용 및 개정사유
제정	1990.9.25 제90-2호	○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
개정1	1991.5.6 제91-2호	【개정 내용】 ○ 미술품·도예품, 우표, 화폐등을 제한승인품목으로 규정
개정2	1994.12.1 제94-4호	【개정 내용】 ○ 위탁가공용 생산설비를 반출승인대상으로 규정  【개정 사유】 ○ 위탁가공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기계설비 반출을 허용 하되 승인을 받도록 함.
개정3	1995.1.3 제95-1호	【개정 내용】 ○ 승인 대상 품목으로 225개 농림수산물을 <별표1>로 명시 ○ 자동승인품목이라도 무상 반출입의 경우에는 제한승인품 목을 분류  【개정 사유】 ○ 95년 WTO체제 출범에 따른 교역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승인품목과 제한승인품목의 구분을 재조정
개정4	1996.3.5 제96-1호	【개정 내용】 ○ <별표 1> : 반입승인대상 품목 조정
개정5	1997.4.1 제97-1호	【개정 내용】 ① 자동승인품목과 제한승인품목을 「포괄승인품목」과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변경 ② 외국환은행의 장이 해 오던 자동승인품목에 대한 반 출입 승인제도 폐지 ○ 전략물자 반출입 절차 신설

		o <별표 1> : 반입승인대상 품목 조정
개정6	1998.5.12 제98-1호	【개정 내용】 o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행정기관 명칭 변경
개정7	1998.6.19 제98-2호	【개정 내용】 ① 기계·장치 등 생산설비 반출승인제도 폐지 ②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는 도서, 음반, 비디오필름 등을 ‘남북교역대상 물품’으로 명시하여 반입승인절차를 명확히 규정 ③ 협력사업 물자의 반출·입 절차 간소화 ④ <별표 1> : 반입승인대상 품목 조정 - 29개 품목을 삭제(돔, 농어, 갈치, 조기, 옥수수 등), 2개 품목(냉동 민어, 냉동 가리비)을 추가  【개정 사유】 o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하여 반출반입 승인대상 완화
개정8	1999.8.16 제99-2호	【개정 내용】 ① 위탁가공교역의 반출입 절차 간소화 ② ‘북한물품반입승인신청서’ 등 4종 서식 제정 ③ <별표 1> : 반입승인대상 품목 조정 - 민어 삭제, 꽃게 추가 등
개정9	2000.9.28 제2000-1호	【개정 내용】 o <별표 1> : 반입승인대상 품목 조정 - 냉동마늘 추가  【개정 사유】 o 국내산업 피해 구제조치(긴급관세 30% → 315%)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냉동마늘 등에 대해 반입승인대상 물품으로 분류
개정10	2001.12.31 제2001-6호	【개정 내용】 o 전자출판물, 팩스 및 컴퓨터 등도 승인대상품목으로 변경 o <별표 1> : 반입승인대상 품목 조정 - 게, 들깨, 인삼, 고추장 등 추가  【개정 사유】 ① 『전력물자수출입공고』 개정(2001.7.20)으로 컴퓨터의 수출입 통제수준이 완화됨에 따른 대북한 컴퓨터 반출 제한의 근거 마련 ② 어업협정의 발효,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 총허용어획량제도 도입 등 국내외적 수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수산물 반입제한품목 조정 필요

개정 11	2002.10.24 제2002-2호	<p>【개정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국 경유 물품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반입승인을 신설</li> <li>○ 관계법령상 ‘신고’ 품목, 남북회담 등을 위한 물품의 반출반입을 포괄승인대상으로 조정</li> </ul> <p>【개정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간 거래되는 일부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북한산 물품」으로 위장반입되는 사례 증가에 따른 제3국 경유물 품에 대한 통일부장관 승인 절차 필요</li> </ul>
개정 12	2003.12.22 제2003-5호	<p>【개정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별표 1&gt; : 반입승인대상 품목 조정 - 건명태, 미꾸라지, 붉은 대게, 녹용, 냉동밤·대추·호두 등을 추가</li> </ul> <p>【개정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자원보호령 개정(2003.8.27) 규정의 반영, 동·식물검역 상의 문제로 수입이 금지된 품목의 위장반입 방지, 반입에 따른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국내외적 농·림·수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반출입 물품 조정</li> </ul>
개정 13	2004.7.8 제2004-5호	<p>【개정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입승인대상에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명시</li> <li>○ 승인을 요하는 대금결제방법으로 ‘청산결제를 통한 경우’를 신설</li> </ul> <p>【개정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 물품에 음반과 비디오물만 규정 되어 있고, 게임물 규정이 미비하여 도서에 준하여 처리 하던 것을 게임물을 추가</li> <li>○ 2003.8.20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li> </ul>
개정 14	2004.12.30 제2004-9호	<p>【개정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별표 1&gt; : 반입승인대상 품목 조정 - 오징어 추가</li> </ul> <p>【개정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자원보호령 개정(2003.8.27) 규정의 반영, 위장반입 방지, 반입에 따른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국내외적 농·림·수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반출입 물품 조정</li> </ul>
개정 15	2005.3.23 제2005-5호	<p>【개정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사업자가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물품을 반출·반입하는 경우에는 포괄승인대상으로 규정</li> </ul>

		<p><b>【개정 사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성공단 입주업체 등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사업범위 내에서 물품의 반출입시 통일부와 세관에 이중으로 신고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li> </ul>
개정 16	2005.10.31 제2005-11호	<p><b>【개정 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시의 제명을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로 개정</li> <li>○ 반입승인을 요하는 물품에 소프트웨어 명시(안 제3조 제1항)</li> <li>○ 민원처리절차 간소화 : 승인신청 처리기간 단축 및 첨부서류 간소화</li> </ul> <p><b>【개정 사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소프트웨어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어 반입승인시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소프트웨어를 반입승인 대상물품에 명시</li> <li>②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처리기간 단축제출서류 간소화를 하려는 것임.</li> </ul>
개정 17	2006.11.10 제2006-4호	<p><b>【개정 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별표 1&gt; : 반입승인대상 품목 조정 - 표고버섯 지정, 냉동호두 HSK 코드 조정</li> </ul> <p><b>【개정 사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제3국산 표고버섯의 북한산으로 위장반입을 방지 ② HSK 품목분류 개정사항을 반영</li> </ul>
개정 18	2007.1.29 제2007-1호	<p><b>【개정 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별표 1&gt; : 반입승인대상 품목 조정 - 돼지고기, 닭고기, 고추류의 HSK 코드 세분</li> </ul> <p><b>【개정 사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반출입고시 개정</li> </ul>
개정 19	2008.1.8 제2008-1호	<p><b>【개정 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 범위(제3조) △반출·반입 승인 신청(6조)·승인 절차(7조) △교역보고(9조) 등을 신설</li> <li>○ 제3국 경유 위탁가공 섬유류는 개별승인 대상에서 제외 및 서식정비</li> <li>○ &lt;별표 1&gt; : 반입승인품목 조정 - 단호박 추가</li> </ul> <p><b>【개정 사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출입고시 조문 정비</li> <li>○ 제3국산 단호박의 위장반입 우려 제기 대응</li> </ul>
개정20	2008.9.17 제2008-9호	<p>【개정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입승인대상에서 제3국 경유 '광물' 제외 △반입승인절차 간소화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 △한도물량운영 규정 보완</li> </ul> <p>【개정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지하자원 교역활성화 도모를 위해 무연탄, 아연괴 등의 제3국경유시 반입승인대상에서 제외</li> </ul>
개정21	2009.7.10 제2009-3호	<p>【개정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물자 및 사치품을 개별승인대상으로 추가 지정</li> </ul> <p>【개정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1874호 이행</li> </ul>
개정22	2009.7.31 제2009-8호	<p>【개정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따라 조문 조정</li> <li>○ &lt;별표 1&gt; : 반입승인품목 추가</li> </ul> <p>【개정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교류협력법('09.1.1)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li> <li>○ 위장반입 우려가 제기된 '조미오징어' 별표1에 추가</li> </ul>
개정23	2009.10.27 제2009-21호	<p>【개정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표 1 : 반입승인품목 추가</li> </ul> <p>【개정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교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모래, 무연탄, 송이버섯을 &lt;별표1&gt;에 추가</li> </ul>

위의 「반출입 고시」 개정 내용을 규제 완화, 규제 강화 측면에서 평가하면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제 강화의 경우가 13회(56.5%)에 달하며, 규제 완화가 6회(26.1%)에 해당한다. 기존 반출반입 승인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특별히 규제가 강화되거나 완화되지 않은 중립적인 경우는 총 5회(17.3%)에 달하고 있다.

<표 7> 「반출입 고시」 개정의 성격

구분	횟수(비율)	사례
규제 완화	6회(26.1%)	개정2, 개정5, 개정7, 개정8 개정15, 개정20
중립적	4회(17.3%)	개정4, 개정6, 개정16, 개정18
규제 강화	13회(56.5%)	개정1, 개정3, 개정9, 개정10, 개정11, 개정12, 개정13, 개정14, 개정17, 개정19, 개정21, 개정22, 개정23

먼저 규제 완화를 보면 위탁가공교역 분야와 관련이 된다. 개정2(1994년 12월)에서 위탁가공용 설비반출을 기존의 ‘금지’에서 ‘승인’대상으로 허용하였고, 개정7(1998년 6월)에서 생산설비를 개별승인대상에서 제외하고 포괄승인으로 규정함으로써 위탁가공교역을 촉진하고 있다. 자본재가 부족한 북한에서는 임가공비를 상계하는 조건으로 남한의 사업자로부터 가공설비의 투자를 유치하고, 남한의 사업자로서는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종의 설비투자를 하려는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위탁가공교역을 단순히 원부자재만 제공하는 경우가 78.7%, 가공설비까지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21.3%에 달하며, 설비제공규모는 50만달러 이하가 78.6%에 이르고 있다<sup>37)</sup>. 한편 개정5(1997년 4월)는 시중은행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던 자동승인을 폐지하고 포괄승인형태로 변경하였다.

이렇게 위탁가공교역에 대해서 규제완화 입장을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은 위탁가공교역이 대부분 섬유류에 해당하고, 국내 생산자와 이익갈등이 없었기 때문이다. 즉, 남한 내에서 이미 가격경쟁력

37) 중소기업진흥공단(2009) 「2009 대북 위탁가공사업 추진현황 조사 보고서」 p13

을 상실하고 중국·동남아시아 등 제3국으로 섬유류 위탁가공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한산의 반입에 대하여 국내 생산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았던 것이다.

반면 규제가 강화된 경우는 일반교역과 관련이 깊다. 개정3(1995년 1월)에서 WTO가입을 계기로 위장반입 우려가 높은 225개 농림수산물에 반입승인대상으로 특별히 명시한 이후, <별표1>에서 적실성이 떨어지는 품목을 대폭 삭제한 경우도 있지만(개정7), 냉동마늘(개정9), 표고버섯(개정17), 단호박(개정19), 조미오징어(개정22), 송이버섯 등(개정23)을 추가하여 북한산 농림수산물의 반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개정11(2002년 10월)에서 제3국을 단순경유하여 오는 물품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의 개별승인 절차를 도입한 이후에 위탁가공한 섬유류(개정19) 및 광산물(개정20)은 규제가 완화되고 있으나,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반출입 승인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교역 물품, 특히 북한산 농림수산물에 대한 반입 규제가 강화된 배경은 북한산 농림수산물의 위장반입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농산물 수입품은 평균 44.2%의 관세가 부과<sup>38)</sup>되지만, 북한산으로 반입되는 농산물은 관세가 면제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북한산은 제3국산보다 소비자들에게 선호되기 때문에,<sup>39)</sup> 국내산보다는 저렴하지만 수입산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팔리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제3국산을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하려는 유인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특정 품목이 단시일내에 집중적으로 반입될 경우, 해당 품목을 재배·생산하는 국내 생산자들은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판매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위장반입 사례가 적발되거나 위장반입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별표1>의 반입승인대상 품목으로 추가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게 된 것이다.

38) 정재호 외(2003), 「관세율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국제비교 및 일반균형모형의 응용」, p32

39) 이상수 외(2003), 「남북 수산물 교역에 관한 제도적 고찰」, p222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1. 남북교역의 ‘정치적 측면’에 관한 연구

안홍(2007)은 1989년부터 2006년까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별로 대북 교류협력정책을 비교하고 있다. 교류협력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국제변수, 북한변수, 국내변수, 경제환경변수, 최고지도자변수를 구분하고 있다. 국제변수로는 북핵위기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구체화하고, 북한변수는 북한의 경제위기, 체제유지전략, 한중경제의 존도 심화를 고려하고 있으며, 국내변수로는 정치지지연합, 대북정책관련 제도와 기구의 증감, 대북정책 관련 기능의 변화로 구체화하고 있다. 경제환경변수로는 국제적으로 글로벌경제와 국제분업화의 확산이 대북 교류협력에 미치는 영향, 국내 경기변화가 대북교류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고지도자변수로는 대통령의 정치이념 및 대북 인식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독립변수들이 남북교류협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경제분야 협력사업 승인건수, 북한의 지역별 수출 추이, 북한의 원유도입 실적, 북한의 대외무역 추이, 북한의 한국과의 교역추이, 연도별 한국 GDP의 변화 추이, 위탁가공교역액의 변화 추이, 한국 사회의 이념 지형 변화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남한의 대북 교류협력정책결정과정은 최고지도자가 다양한 국제변수, 북한변수, 경제환경 변수 등 대내외적 변수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안홍의 연구는 정치적 요인 중에서 남한의 최고지도자가 어떠한 대북 정책관을 가지고 있는가가 남북간 교류협력에 중요한 변수라는 시사점을 준다. 다만, 안홍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으며, 더욱이 종속변수로서 남북교역과 경제협력사업, 인도적 지원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남북경제교류협력으로 묶어서 연구<sup>40)</sup>하고



있다. 따라서 최고지도자의 대북정책결정이 대북 인도적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남북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적 요인이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

## 2. 남북교역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연구

이석(2009)<sup>41)</sup>은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전후 거래성 남북교역<sup>42)</sup> 통계를 분석하여 외환위기 이후 연간 최대 40%까지 하락하는 등 침체를 면치 못했고 이러한 침체는 2002년 초반까지 4~5년간 지속된다는 결론을 얻고 있다. 이러한 이석의 연구에 따르면 남한의 국내경기는 국제경기의 영향을 받고, 남한의 국내경기에 따라 남북교역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가설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북한산 물품의 반입이 주를 이루는 일반교역 및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는 위탁가공교역에서는 남한의 반입수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석은 남북교역에서 북한이 얻는 경제적 이득의 증감이 북한의 대남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렇게 남북간 경제적 관계를 독립변수로, 남북한 정치적 관계를 종속변수로 보는 관점은 김진수 및 한충영의 연구에서도 제시되고 있다.

한충영(2005)<sup>43)</sup>의 연구에 따르면 남북간 경제교류는 남북간 긴장, 분쟁 또는 협력 등의 정치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경제교류의 규모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남북한 간에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한충영은 광의의 남북교역통계를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 등 목적에 따라 분류하지 않고 품목에 따라서 농림광수산물교역액, 화학공업품교역액, 섬유류교역액, 철강금속류교역액,

40) 역대 정권별 대북교류협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로 광의의 남북교역금액을 분석하고 있다.

41) 이석(2009), 「남북교역의 변화와 남북관계 경색의 경제적 배경」, (KDI 정책포럼 제212호)

42)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을 의미한다.

43) 한충영(2005), 「남북한 경제교류가 한반도 평화증진에 미치는 효과 분석」

기계류교역액 등으로 분류하여 남북관계와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품목별 교역액 중에서 화학공업품교역액 및 전자전기류교역액만이 남북한간 정치적 평화관계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남한 정부의 비료지원(대북 인도적 지원)이 북한의 식량난 완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농림광수산물교역액 및 섬유류교역액과 관련된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은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시사한다.

김진수(2007)<sup>44)</sup>도 남북간 경제적교류협력이 남북한간 분쟁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도 광의의 남북교역통계를 사용하여 있는데, 총 교역액, 일반교역액이 증가하면 남북한 관계가 협력관계로 전환되며, 위탁가공교역액 변화율이 증가하면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광의의 남북교역통계 중에서 상업적 교역액 변화율, 교역소계액 변화율, 개성공단 투자액, 금강산관광 사업액, 기타 경제협력 사업액, 경제협력소계액 변화율 등은 남북한 분쟁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충영과 김진수의 연구는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이 남북간 긴장완화에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분석자료로서 광의의 남북교역통계를 활용하고 있어서 본래적 의미의 상업적 거래가 남북간 정치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와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반대로 설정하고 있어서, 남북간 긴장완화 정도가 경제교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

남북교역은 남한에서 민족내부거래로 취급되고, 대외무역에 비해서 그 비중이 현격히 낮아서 대외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북한의 경우 비록 정책적으로는 민족내부거래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북한의 대외무역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남북교역의 규모와 북한의 대외무역은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북한 대외무역에 대한 연구에서 이석(2010)<sup>45)</sup>은 2000년대 이후 북한의

---

44) 김진수(2007), 「남북교역과 대북 경제지원이 남북한 분쟁완화에 미치는 효과 분석」,

대외거래는 남한과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 대외무역의 80% 이상, GDP의 최대 35%가 중국과 남한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과의 교역에서는 석유 수입 등으로 발생하는 적자를 남한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흑자로 보전하고 있다. 북한이 이러한 대외무역구조를 가지게 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하여 2006년 10월 일본이 대북 경제제재를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2006년 11월 이후 북일무역은 중단되었는데, 북한은 일본의 경제제재에 직면하여 대일 수입을 남한이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대체하지는 않았으나, 대일 수출은 대한민국 수출, 즉 남북교역으로 상쇄해 왔다<sup>45)</sup>. 이는 북한의 대일 수입품은 주로 기계류, 자동차류에 해당되는데 중국은 이들 제품의 수출국가에 해당되지 않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술 수준을 요하는 물품을 수입하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주요 대일 수출품은 어패류, 농산물, 저가의 의류와 전기전자제품이었는데, 중국은 바로 이들 제품군의 수출국가로서 수입 수요가 낮았던 반면 남한은 이들 제품에 대한 소비 수요가 존재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남북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통제변수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북중무역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남북교역에 의한 북한의 실질적인 외화수입액이 중요한 요인이지만, 남북교역에 있어서는 북중무역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추론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오히려 북일무역의 변화가 남북교역의 규모와 품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3. 남북교역의 ‘법제도적 측면’에 관한 연구

남북교역의 법제도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주로 「남북교류협력법」차원

45) 이석(2010),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 남북교역, 북중무역으로 대체 가능한가」(KDI 북한경제리뷰, 2010.5월)

46) 고일동 외(2008), 「북한의 무역구조 분석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KDI, 2008)

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효원(2006)은 남북분단 이후 헌법현실과 헌법규범 간의 괴리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남북한특수관계론을 주장하고 있다. 즉,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로서 남북한간 발생하는 사안에 따라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바탕으로 국내법 또는 국제법 원칙을 상이하게 적용되는 관계'라는 것이다. 남북교역과 관련해서는 남북한특수관계론을 국제법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주체로 활동하기 때문에 남북교역을 국내거래로 간주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WTO체제에서 국제통상규범 위반이 제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있다. 즉, WTO체제는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비차별원칙(Non-Discrimination Principle)'으로서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를 앞세워 남북한 경제교역에 대하여 국제통상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민족자결주의를 바탕으로 '남북한 교역의 민족내부거래성'을 주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민족내부거래성'의 법적 근거로서 「남북기본합의서」<sup>47)</sup>와 「남북교류협력법」 제12조<sup>48)</sup> 등을 들고 있다.

최성근(2009)은 통일전 동서독간에 활성화되었던 '내독거래'의 의의와 법적 장치를 분석하고 이를 남북교역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그는 남북교역의 민족내부거래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교류협력법 제26조에서 무역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다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직교역 형태의 남북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북한의 교역당사자간 자유로운 접촉과 통신, 물류체계 개선, 거래은행간 환거래망 형성 등을 충족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민족내부거래로서 남북간 무관세교역이 국

47)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1992.2.19 발효)

4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북한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제안하고 있다. 그 밖에 민족내부거래의 활성화 방안으로 청산결제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에 대한 세금 감면조치 및 손실보조 제도를 강화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신현윤(2008)은 남북 교역 및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남북한 경제협력강화약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CEPA)을 제안하고 있다. CEPA는 국가간 협정(Agreement)가 아니라 통일로 가는 잠정적 특수관계에 있는 남북한 간의 약정(Arrangement)로서 남북한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무역 및 투자의 편리화 조치를 매년 확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정의 FTA라고 규정하고 있다. CEPA를 체결하면서 남북교역이 민족 내부교역으로서 무관세임을 문서로서 선언한다면, 이는 남북한간의 쌍무협정에 근거한 것으로 무관세거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김진섭 등(2011)은 남북교역의 인프라 관점에서 상호결제시스템의 미비를 주요한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남북한간의 대금결제는 제3국 은행 계좌로의 송금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밖에 현금결제, 상계 및 물물교환 등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대금결제제도의 위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교역업체에게 교역보험을 적극 활용하고, 제품인수 이후 사후결제방식으로서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효원·최성근·신현윤 등 남북간 교류협력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는 주로 남북교역에 있어서 민족내부거래성의 국제적 확립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즉, 남북한이 동시 유엔가입으로 국제법적으로 별개 국가로서 인정받는 상황에서 국내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법에 근거한 관세면제의 규범조화 문제를 주요한 문제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거시적인 맥락에서 남북교역 제도 발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나, 미시적으로 국내에서 남북교역이 이루어지는 절차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결과적

으로 국제적으로 또는 남북한간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협정의 체결에만 주목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남북교역에 영향을 미치고, 남한 당국의 의지에 의해서 손쉽게 개정 가능한 「반출입 고시」는 논의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다. 즉 연간 20억달러 규모의 남북교역에서는 다소 성급한 문제인식으로 여겨지며, 남북교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의 정비 등에 대한 연구가 좀더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표 8> 주요 선행연구 결과

논문 저자	연구 주제	연구 결과
안홍	역대정부의 남북교류협력정책 비교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교류협력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국제 변수, 북한변수, 국내변수, 경제환경변수, 최고지도자변수가 있음.</li> <li>o 최고지도자가 다양한 국제변수, 북한변수, 경제환경 변수 등 대내외적 변수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짐.</li> </ul>
이석	남북교역의 변화와 남북관계 경색 (2009,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남북교역은 남한의 국내경기에 영향을 받음.</li> <li>o 남북교역이 축소될 때 북한은 더 강경한 태도로 나왔음.</li> </ul>
	남북교역과 북일무역, 북중무역의 대체효과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북일무역은 남북교역과 대체관계가 있음. 일본의 대북제재는 남북교역으로 대체되면서 제재효과가 약화되었음.</li> <li>o 북중무역은 남북교역과 대체관계가 없음. 남북교역의 흑자가 북중무역의 적자를 메워주는 역할을 함.</li> </ul>
한충영	남북한 경제교류가 한반도 평화증진에 미치는 효과 분석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남북간 경제교류는 아직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남북간 긴장 또는 협력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li> </ul>

김진수	남북교역과 대북 경제지원이 남북한 분쟁완화에 미치는 효과 분석 (2007)	o 일반교역액이 증가하면 남북간 협력관계로 전환되며, 위탁가공교역액 변화율이 증가 하면 남북관계가 악화됨.
이효원	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 (2006)	o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로서 상황에 맞는 규범체계 정립이 필요함  o WTO체제 하에서 남북교역이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족자결주의 주장 및 관행이 확립을 통하여 국제관습법화 시키는 방안이 중요함
최성근	민족내부거래활성화를 위한 법적 방안에 관한 연구(2009)	o 민족내부거래의 활성화 방안으로 청산결 제제도 시행 및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에 대한 세금 감면조치 확대, 손실 보조 제도 강화 등이 필요함.
신현윤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정비방안(2008)	o 민족내부거래로서 남북간 무관세교역이 국제적 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북한간 경제협력 강화약정(CEPA) 체결을 검토해 볼 수 있음.
김진섭	남북교역의 대금결제 관행과 대응방안 (2011)	o 교역업체의 대금결제 위험을 완화하기 위 해서 교역보험을 적극활용하고, 물품인수 후 사후결제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 람직함.

## 제3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 제1절 연구 문제의 선정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간 경제협력 중에서 가장 상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의 품목과 교역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7.7선언」에 의해 시작된 이후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은 다른 경제분야의 교류협력사업에 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별로 없이 민간사업자인 교역업체들의 자체 결정에 의해서 진행되어온 분야이다. 철도·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 조성, 금강산 관광사업의 경우 정부가 직접 협상 당사자로 나서거나 남북협력기금에서 정책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다.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에 대해서는 사업자금 대출이나 교역보험<sup>49)</sup> 등이 도입되었으나, 이는 개별 교역업체의 신청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사업성 평가가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수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민간이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남북교역이 실제로 남북관계 등 정치적 요인에 얼마나 민감한지 여부, 남한의 국내 경기 등 경제적 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지 여부, 남북교역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경제적 요인보다는 반출·반입 승인절 등 제도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아직 실증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정치적 요인은 기존 연구에서 많이 주목해온 요인이다. 정부의 대북정책, 최고지도자의 정책적 결정 등에 의해 남북관계가 안정적일 때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남북교역이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49) 「남북협력기금법」(1990.8.1 제정) 제8조에 따라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에서 교역·경협보험을 두고 있다. 교역보험에는 ‘일반 교역보험’ 외에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이 있다. 일반 교역보험은 북한과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을 하는 남한의 사업자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비상위험에 대해서 손실을 입을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반출보험, △반입보험, △위탁가공설비 보험이 있다. 다만, 보험의 가입이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남북교역에 대한 위험담보에 한계가 있다. (장웅, p1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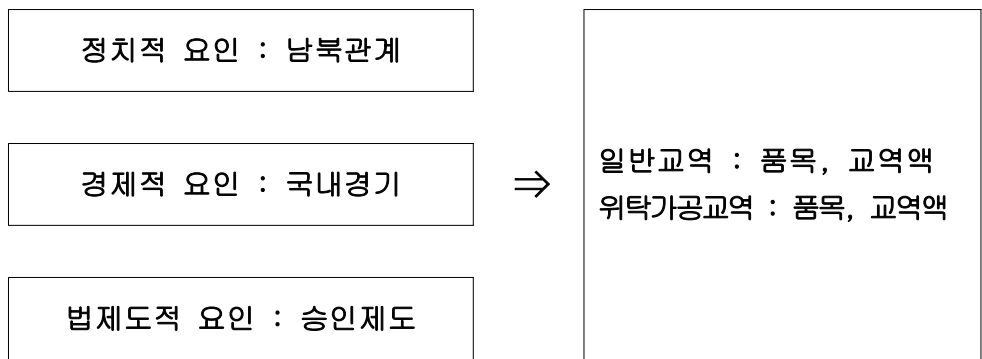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지 않은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 분야에서 남북 관계가 미치는 영향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못하였다.

일반교역은 주로 북한산 농림수산물 등 1차 생산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소비하여 왔고, 위탁가공교역도 국내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북한에서 가공하여 다시 국내로 반입하여 소비하는 형태였다. 따라서 북한산 물품에 대한 국내 수요, 즉 소비자들의 지불능력이라는 경제적 변수가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정치적 요인보다 더 클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산 상품이 고가의 사치품이 아니고, 국내 시장점유율이 충분히 높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수요 등 경제적 요인이 영향은 미미할 수 있다. 오히려 제3국산이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되어 국내 시장을 교란시키는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반출반입 승인 및 원산지 확인 절차 강화 등이 사업자들에게 규제영향으로 작용하여 교역 품목과 교역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법제도적 요인 중에서 민간의 상업적 거래인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의 품목 및 교역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로 하고자 한다.

**<그림 11> 개념적 분석틀**



## 제2절 연구 설계

### 1. 변수의 선정 및 조작적 정의

####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액, 교역액과 교역품목이다. 실제로는 일반교역은 1989년 1월부터 시작되었고, 위탁가공교역은 1992년 3월부터 이루어졌으나 통계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1989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로 시간적 범위를 통일하고자 한다. 교역품목의 개수는 가장 세분화된 단위인 HSK코드<sup>50)</sup> 10단위로 집계하고자 한다. 월별 자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독립변수의 변동에 따라서 남북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남북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법제도적 요인 3가지이다. 독립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정치적 요인 : 남북관계

---

50) HS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자로서 대외무역에서 상품을 숫자코드로 분류한 체계이다. 국제협약에 따라 HS코드는 8~10자리까지 사용하며,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이다. 우리나라는 HS코드를 10자리까지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충영(2005) 및 김진수(2007)가 활용한 COPDAB<sup>51)</sup> (Conflict and Peace Database) 척도를 이용하여 남북관계를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고자 한다. COPDAB척도는 국가간의 사건을 자발적인 통합부터 전면전쟁까지 1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92점부터 (-)102점까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국제적인 긴장완화 정도를 수치화한다.

한충영은 1997년 1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월별 남북한 분쟁지수를 구하여 남북한 경제교류가 한반도 긴장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마찬가지로 김진수는 1989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월별 남북한 분쟁지수를 활용하여 남북교역과 대북 경제지원이 분쟁완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한충영이나 김진수는 남북한 분쟁지수를 만들기 위해서 국내 언론사인 연합뉴스나 조선일보 등의 보도기사, 통일부의 발표자료 등을 수집·관찰하였다. 한충영은 0점을 기준으로 남북간 평화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최고 (+)0.1에서 최고 (+)3점까지 부여하고,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최고 (-)0.1에서 (-)3점까지 부여하였다. 김진수도 동일한 방법을 취하였으며, 다만 최고점을 (+)10점과 (-)10점으로 상향조정한 점이 다르다.

본 연구는 COPDAB 척도를 사용하여 1989년부터 2010년 5월까지의 남북관계를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통일백서를 참고하여 가능한 매주 남북관계에서 발생한 대표사건을 추출하고, COPDAB척도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연구기간 중의 총 발생횟수를 구하였다. 다만 한충영이나 김진수의 연구처럼 유형별로 척도에 따른 사건 점수의 평균값을 구하여 남북관계지수를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

51) Edward E. Azar가 자유주의적 시각에 기초한 기능주의 관점에서 개념화한 것으로 국제 정치 분야에서 주로 언론의 주목을 받는 특별한 사건 자료(data base)에 초점을 맞추어 행위자간 혹은 국가간의 평화 수준을 측정한다. Edward E. Azar는 1948년부터 1978년까지 135개국의 국제관계지수를 구하였으며, 국내에서는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에서 남북관계를 계량화하는 ‘한반도 평화지수’ 연구프로젝트를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진행하였다. [http://www.hanyang.ac.kr/code\\_html/H5EAKB/indexC2.htm](http://www.hanyang.ac.kr/code_html/H5EAKB/indexC2.htm). 검색일 2012.4.14

## (2) 경제적 요인 : 국내 경기

본 연구에서 국내 경기는 1989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기대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소비자물가등락률을 활용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다만 한국은행은 국내총생산(GDP) 및 소비자물가등락률을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분기에 속하는 달(month)은 동일한 경제성장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 (3) 법제도적 요인 : 제도 개선

본 연구에서는 남북교역과 관련한 법제도적 요인으로서 「반출입 고시」의 개정 여부를 활용하고자 한다. 남북교역에 관한 가장 상위제도인 남북교류협력법은 1990년 제정 이후 실질적으로 개정되었던 것은 2005년과 2009년 2차례이다. 동 개정과정에서 남북교역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반출 반입 승인제도 및 대금결제 승인제도 등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았다. 대신 「반출입 고시」는 1990년 제정 이후 2010년 5월까지 총 23차례, 평균 10개월마다 한번씩 개정하였다.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기도 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기도 하였다. 특히 제3국산 농림수산물의 원산지 위장반입을 축소하기 위하여 「반출입 고시」의 <별표1> 190개 품목 리스트에 특정 품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번하게 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일반교역이 북한산 농림수산물 및 광산물의 반입 위주로 구성되어 왔기에 남북교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법제도적 요인에 대해서는 고시의 개정 여부를 측정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 3) 통제변수

## (1) 북한 내부 요인에 대한 고려

남북교역과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는 북한 내부 요인은 정치적 요인보다는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다. 특히 ‘대외무역’에 있어서 북한의 경제정책이 변화하였는가 여부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정치적 관점에서 남북교역에 대한 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가정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정치적으로 인한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는 남한 당국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면서 양자간 상호작용을 일으켜 남한과 북한간의 긴장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북한 당국이 정치적으로 대남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남북관계”변수에 반영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체제 수립 이후에 경제정책으로 소위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자립’을 위하여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과 설비, 원자재, 기술 등을 외부에서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원천으로부터’ 동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북한은 1956년 1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부원천의 동원을 통한 경제발전을 천명하고, 그 수단으로 ‘천리마운동’을 발기하였으며, 1990년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제기한 것도 기본적으로 자력갱생과 ‘제2의 천리마운동’이었다<sup>52)</sup>. 자립경제 정책 기조 하에서 무역은 대외의존도를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수입은 자체 조달할 수 없는 최소한의 생산재에 한정되었으며 수출은 수입에 필요한 외화획득을 위해 추진되었다<sup>53)</sup>. 이러한 관점은 남북교역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북한 경제 지탱에 필수적인 석유 등 최소한의 전략물자를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필요한 경화를 획득하기 위해 남한과 교역을 하기는 하나, 남한과의 교역증대를 위해 북한 내부

52) 임수호(2008), 「계획과 시장의 공존」 p40-42

53) 이영훈(2004), 「북한무역 및 남북교역이 북한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p106~109

적인 경제제도를 남한 사업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지는 않았다<sup>54)</sup>. 오히려 북한 당국은 남한 사업자와 북한 주민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남북교역의 창구를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로 일원화<sup>55)</sup>시켰다.

1989년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변동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09년 ‘화폐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조치라 한다)는 (1)식량, 생필품 등의 배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 이들 가격을 농민시장 가격 수준으로 하고, (3)임금은 직종, 노동생산성, 노동시간, 성과 등에 따라 현실화하고, (4)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sup>56)</sup>. 7.1조치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베트남 사례처럼 경제 개혁·개방의 사전조치보다는 북한 당국이 1990년대 사회주의국가의 붕괴이후 공식배급망 붕괴 속에서 주민들 사이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장마당’을 공식화함으로써 시장경제적 요소를 일부 수용함으로써 경제회생을 도모한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7.1조치는 2005년경부터 다시 계획경제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후퇴하였으며, 2007년 4월 당시 내각총리인 박봉주가 해임되면서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9년에 단행된 화폐개혁은 7.1조치 이후 시장의 확산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2009년 11월 30일 (1)화폐를 ‘100:1’의 비율로 교환 (2)7.1조치 이후 합법화되었던 종합시장을 폐쇄하고 과거 10일장 형태의 농민시장으로 전환 (3)외환사용금지 (4)모든 유통거래를 국영상점을 통해서만 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는 화폐유통량을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장마당’의 합법화 이후 시장에서 부를 쌓은 신흥부유층의 부를 흡수함으로써 계획경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물가와 환율이 폭등하면서 상품거래가 위축됨에 따라 종합시장

54) 김진섭(2011), 「남북교역의 대금결제 관행과 대응방안」 p392

55) 김병수(2008), '개별기업 대신 민경련 산하 총회사가 계약 주체' p106-107

56) 이현경(2011), 「북한의 경제조치와 사회경제적 실태」 p41~46

폐쇄를 단행한 지 불과 보름 만에 통제를 철폐<sup>57)</sup>하는 등 화폐개혁은 사실상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렇듯 2002년의 「7.1조치」가 시장경제적 요소를 확산하는 정책이라면 2009년의 화폐개혁은 시장경제적 요소를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상반된 정책은 북한 내부에서 주민들의 상행위와 공식 배급망의 복원,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력과 관련되어 있고, 대외무역에 있어서 ‘대외무역 자유화나 금지’ 같은 가시적인 정책변동은 담고 있지 않다. 그러나 「7.1조치」와 2009년의 화폐개혁은 분명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주었으며, 따라서 간접적으로 남북교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7.1조치」는 2002년 7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화폐개혁 조치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하겠다.

## (2) 제3국 요인에 대한 고려

2000년대부터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이라는 목표 하에 경제운영의 실리를 강조하면서 무역사업의 발전·경제합영 및 합작사업의 강화·과학기술교류의 발전 등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목표와는 달리 2000년대 들어 북한의 핵개발 지속 및 북·미 관계 개선의 지연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대북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더욱 심화<sup>58)</sup>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제1의 무역상대국인 중국이 남북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교역과 북중무역의 대체관계 또는 보완관계 여부이다. 즉, 북중무역 증가로 남북교역이 위축되

---

57) 양문수(2010), 「북한의 화폐개혁 : 실태와 평가」 p84~85

58) 홍익표(2011), 「북한의 대외경제 10년 평가(2001~10년)」 p195~199

거나 혹은 남북교역이 증가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남북교역은 주로 북한이 남한으로 반출하는 구조로서 이석(2009)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남북교역에서 얻은 외화수입을 기반으로 중국으로부터 북한경제에 필요한 원부자재 및 기계류를 수입하면서 발생하는 적자를 메우고 있다. 따라서 무역의 측면에서 북중무역은 남북교역의 증가 또는 감소에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중국요인이 남북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남북교역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하여 중국을 통하여 북한산 물품이 중국산으로 수입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또는 민족내부거래에 따른 무관세혜택을 누리기 위해 중국산이 북한산으로 원산지가 위장되어 반입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남북교역의 무관세혜택을 포기하고 평균 40~50% 내외의 관세를 부담하는 경우<sup>59)</sup>로서 1차산품을 주로 반입하는 남북간 교역구조에서 발생하기 어렵다. 후자의 경우는 빈번한 반출입고시의 개정의 원인이 되어서 법제도 요인 분석에 그 효과가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교역에 있어서 중국요인을 제외하도록 하겠다.

한편 일본은 북한과 오래도록 무역을 해 왔고, 조총련이 활동함으로써 북일무역의 중개자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06년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일본이 대북한 경제제재를 결의하기 전까지 북일무역은 북한 무역의 1/3의 비중을 차지해 왔다. 이석(2009)의 연구를 보면 2006년 이후 북일무역은 남북교역으로 대체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북일무역은 통제변수로서 고려하도록 하겠다. 일본은 2006년 이후 매년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각의결정으로 연장해 오고 있으므로 2006년을 기점으로 대북제재 유무를 0,1의 더미변수로 처리하고자 한다.

---

59) 강홍중(2006), 전제서, p121



<표 9> 변수 선정 및 측정 방법

구분	변수	조작적 정의	변수명
종속 변수	교역액	1989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월별 일반 교역 반입액	GTV1 (general trade volume)
		1989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월별 일반 교역 반출액	GTV2
		1989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월별 위탁 가공교역 반입액	PCTV1 (Processing on Commission Trade Volume)
		1989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월별 위탁 가공교역 반출액	PCTV2
	교역 품목	1989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HSK 10단위 기준 월별 일반교역 반입물품의 수	GTC1 (General Trade Composition)
		1989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HSK 10단위 기준 월별 일반교역 반출물품의 수	GTC2
		1992년 3월부터 2010년 5월까지 HSK 10단위 기준 월별 위탁가공교역 반입물품의 수	PCTC1 (Processing on Commission Trade Compositon)
		1992년 3월부터 2010년 5월까지 HSK 10단위 기준 월별 위탁가공교역 반출물품의 수	PCTC2
독립 변수	정치적 요인	1989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월별 남북 관계 관계지수	SNCI (South -North Korea Conflict Index)
	경제적 요인	1989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한국은행 발표한 남한의 분기별 실질 GDP 성장을 및 분기별 소비자물가등락률	GDP CP
	법제도적 요인	1990년 「반출입 고시」 제정 이후 이루어진 개정 여부	RR (Regulation Revision)
통제 변수	일본 요인	2006년 10월 대북 무역중단 각의결정	JNK (Japan-Nor th Korea)
	북한 요인	1989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북한 내부적 으로 발생한 주요 경제적 사건	NKA

##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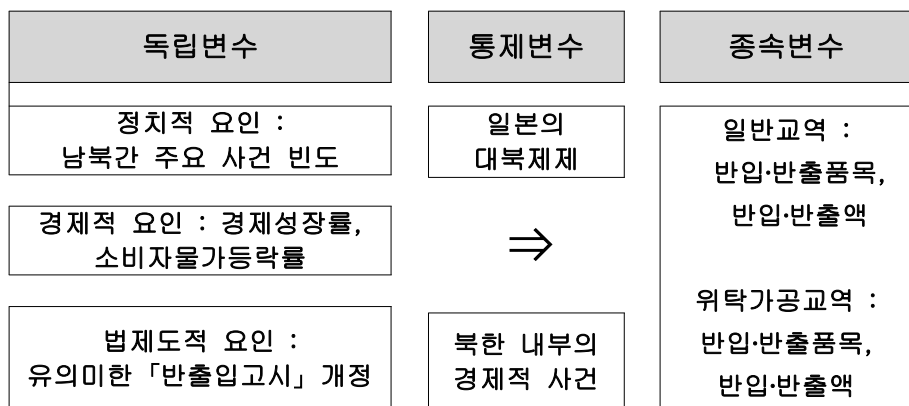
###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중에서 종속변수는 통일부에서 발표하는 월간 교류협력동향 및 내부자료를 활용하였다. 독립변수 중에서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김진수의 연구,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방식을 활용하여 남북관계지수를 직접 작성하였다. 남한의 국내경기에 대한 자료는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의 국민계정 자료를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법제도개정지수는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의 개정을 활용하였는데, 「반출입 고시」의 개정은 통일부 홈페이지 공고, 관보게재, 통일부 내부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 2)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법제도적 요인 중에서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종속변수로는 북일무역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2> 연구의 분석틀



### 3. 연구의 가설 설정

분석틀에 따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세 가지 독립변수에 대해서 각각 분리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는다면,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 모두 품목과 교역액이 증가할 것이다. 남북관계가 나쁠 때는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의 거래품목과 교역액이 감소할 것이다.

가설 1-1 : 남북관계는 일반교역의 반입액과 반출액, 반입품목수와 반출품목수에 영향을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 남북관계는 위탁가공교역의 반입액과 반출액, 반입품목수와 반출품목수에 영향을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은 주로 북한이 남한에 물품을 반출하고 남한으로부터 외화를 획득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경기가 좋아지면 국민들의 소비지출이 증가할 것이므로 북한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따라서 남북교역도 증가할 것이다.

가설 2-1 : 남한의 경기변동은 일반교역의 반입액과 반출액, 반입품목수와 반출품목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 남한의 경기변동은 위탁가공교역의 반입액과 반출액, 반입품목수와 반출품목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반출입 고시」의 개정은 때로는 남북교역의 승인절차를 완화하거나 엄격하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반출입 고시」의 개정은

반출과 반입의 승인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남북교역의 품목과 교역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총 23차례 개정 중 13회(56.5%)가 규제강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므로 「반출입 고시」의 개정은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가설 3-1 : 「반출입 고시」의 개정은 일반교역의 반입액과 반출액, 반입품목수와 반출품목수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 「반출입 고시」의 개정은 위탁가공교역의 반입액과 반출액, 반입품목수와 반출품목수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으로 세 가지 독립변수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에도, 세 독립변수가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다를 것이다. 따라서 고일동(2009)의 연구는 일반교역이 위탁가공교역에 비해 남북간 정치적으로 요인에 영향을 더 민감하게 받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석의 연구는 남북교역이 국내 경기가 변동할 때 그 영향을 장기간에 걸쳐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반영한 가설은 아래와 같다.

가설 4-1 : 세 독립변수 중에서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의 교역액과 교역품목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남북관계이다.

가설 4-2 : 세 독립변수 중에서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의 교역액과 교역품목의 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남한의 경기이다.

## 4. 분석모형

앞의 가설에 따른 분석 모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법제도적 요인 중에서 남북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text{가설 : } Y = \alpha + \text{GTV}_t + \text{GTC}_t + \text{PCTV}_t + \text{PCTC}_t + \text{SNCI}_t + \text{GDP}_t \\ + \text{CPI}_t + \text{RR}_t + \text{JNK}_t + \text{NKA}_t + \varepsilon$$

Y는 종속변수를 의미하는데, GTV는 ‘월별 일반교역액’, GTC는 ‘월별 일반교역의 품목수’, PCTV는 ‘월별 위탁가공교역액’, PCTC는 ‘월별 위탁가공교역의 품목수’를 의미한다. SNCI는 정치적 요인으로서 남북간 주요 사건의 발생빈도를 나타낸다. GDP는 경제적 요인으로서 남한의 월별 실질GDP 성장율을 의미하며, CPI는 남한의 월별 소비자물가증률이다. RR는 법제도적 요인으로서 「반출입 고시」의 개정여부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반출입고시가 개정된 달과 개정되지 않은 달을 구분하여 가변수화하였다. JNK는 통제변수로서 북일무역의 중단여부를 가변수화하였으며, NKA는 북한 내부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사건인 ‘7.1 조치’와 화폐개혁을 가변수화한 것이고,  $\alpha$ 는 위 모형의 절편,  $\varepsilon$ 는 오차항이다.

## 제4장 연구분석 결과 및 해석

### 제1절 기술적 해석

먼저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을 살펴보면, 1989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관측치수는 257개에 해당한다. 월별 일반교역의

평균 반입액은 약 1,379만달러이며, 월별 일반교역의 반출액은 대략 1/10에 해당하는 143만달러 규모이다. 일반교역을 월별 반입품목은 평균 47개이며, 월별 평균 반출품목은 26개이다.

위탁가공의 경우에도 월별 평균 반입액은 약 701만달러, 월별 평균 반출액은 454만달러이다. 월별 평균 반입품목은 41개, 월별 평균 반출품목은 57개인데, 반출품목의 수가 더 많은 것은 남한에서 의류 등의 원부자재를 반출하여 북한에서 완성품을 들여오기 때문이다.

<표 10> 종속변수의 기술통계

(단위 : 금액\_천달러, 품목\_개)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일반_반입액	257	9	56069	13793.66	9729.247
일반_반출액	257	0	36393	1437.85	2513.950
일반_반입품목수	257	1	112	47.30	26.247
일반_반출품목수	257	0	89	26.72	20.247
위탁_반입액	257	0	38333	7014.92	7986.097
위탁_반출액	257	0	24960	4542.41	4550.008
위탁_반입품목수	257	0	108	41.86	32.550
위탁_반출품목수	257	0	155	57.62	39.225

독립변수 중에서 <표 11>에서 정치적 요인에 해당하는 남북간 주요 사건을 보면 1989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민간 및 실무급 차원의 준공식적 교류가 537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남북간 별다른 교류가 없이 상투적인 비난과 대응을 반복하는 경우가 128건에 해당한다. 장관급 회담이나 새로운 대북정책 발표 등은 116건이며, 남북간 민간행사 연기 등 낮은 수준의 긴장 조성 행위도 100건에 달하고 있다.

<표 11> 독립변수 - 남북간 주요 사건 발생빈도

(단위 : 건)

사건 범주	COPDAB 척도	남북관계 적용	발생 빈도
1	자발적 국가 통합		0
2	전략적 동맹		0
3	경제적 또는 군사적인 지원		3
4	비군사적 협약	o 식량 차관 등	39
5	문화·과학적인 협정	o 정상 회담 o 시범 철도·도로·통신 연결 등	49
6	공식적인 구두적 지원	o 장관급 회담/ 경추위 o 새로운 대북정책 발표 등	116
7	준공식적 교류	o 실무급 회담 등	537
8	중립적 태도	o 대화제의 거부 등	128
9	국가간 불화에 대한 약한 표현	o 남북간 민간행사 연기 등	100
10	국가간 불화에 대한 강한 표현	o 남북간 당국행사 연기 등	60
11	외교·경제적 적대행위 :	o 간첩 적발 등	24
12	정치·군사적 적대행위	o 비무장지대 군사적 도발 등 o 무장간첩, 잠수함 사건	32
13	육해공에서의 제한적 충돌, 국경봉쇄	o 서해교전 등	6
14	군사적 도발 행위		0
15	전면적 전쟁		0

<표 12>에서 경제적 요인을 보면, GDP성장율은 평균이 1.37이고 최대값은 4.1이며, 최소값은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7을 기록한 바

있다. 소비자물가등락률은 평균 4.4이고, 최소값은 0.2, 최대값은 10.1이다.

<표 12> 독립변수 - GDP성장률과 소비자물가등락률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GDP성장률	257	-7.00	4.10	1.37	1.54021
소비자물가등락률	257	0.2	10.1	4.4	2.24800

법제도의 변화는 반출입고시 개정유무로 측정하였다. 다만 중립적인 고시 개정은 제외하고 반출반입 승인제도를 완화했거나 반출반입 승인제도를 강화했던 성격이 분명한 18<sup>60)</sup>건만을 반영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1989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중 고시개정이 없었던 개월은 239개월로 92.9%이며, 고시개정이 있었던 개월은 18개월로 6.6%에 해당한다.

<표 13> 독립변수 - 「반출입 고시」 개정 기술통계

구분	빈도(건)	비율(%)
반출입 고시개정 무(0)	239	92.9
반출입 고시개정 유(1)	18	7.0
합계	257	99.9

<표 14>에서 일본 변수를 보면 2006년 10월 일본 내각의 각의결정으로 대북제재가 시행되어 2010년 5월까지 진행되므로 대북제재는 44개월간으로 17.1%이다. 한편 북한 내부 변수 중에서 7.1조치는 2002년 7월부터 2007년 4월까지 58개월간 진행되므로 22.6%의 비중을 차지하며, 화폐개혁은 2009년 11월 30일에 시작되므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6개월간 진행되어 2.3%이다.

60) 「반출입 고시」에서 규제 완화가 7건, 규제 강화가 11건이나 2009년 7월달에 개정이 2차례(개정21, 개정22)이 이루어져, 통계분석 상에서는 17건으로 처리되었다.



<표 14> 통제변수 기술통계

구분		빈도(건)	비율(%)
일본	대북제재 무(0)	213	82.9
	대북제재 유(1)	44	17.1
	합계	257	100.0
북한	7.1조치 무(0)	199	77.4
	7.1조치 유(1)	58	22.6
	합계	257	100.0
북한	2009년 화폐개혁 무(0)	251	97.7
	2009년 화폐개혁 유(1)	6	2.3
	합계	257	100.0

## 제2절 실증 분석

### 1. 일반교역의 경우

<표 15>에서 회귀분석 결과 일반교역의 반입액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사건범주4, 사건범주6, 사건범주9, 일본의 대북경제제재, 북한의 7.1조치, 북한의 화폐개혁으로( $p < 0.05$ ) 나타났다. 일본의 대북경제제재는 일반교역 반입액 증가에 0.688(표준화계수 베타)의 가장 높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북관계에서는 사건범주4(남북간 식량차관 등)는 0.112(표준화계수 베타), 사건범주6(장관급 회담 등)는 0.098(표준화계수 베타), 사건범주9(민간 행사 연기 등) 0.088(표준화계수 베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 요인 중에서 시장화를 수용했던 7.1조치는 0.224(표준화계수 베타)의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화폐개혁은 -0.129(표준화계수 베타)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일반교역의 반입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치적 요인이며, 경제적 요인이나 법제도적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적 요인과 중에서는 낮은 수준의 경색(사건범주 9)도 일반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치적 요인의 영향이 일반인의 상식보다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한편 통제요인 중에서 일본요인은 북한의 대일수출이 중단되면서 북한이 해당 품목을 적극적으로 남한으로 대체 수출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북한 내부적인 경제조치는 비록 남북교역이나 대외무역을 가시적으로 변경시키지 않더라도 북한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반교역의 반입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5> 일반교역 반입액 회귀분석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한계	VIF
(상수)	9539.125	1670.561		5.710	.000		
남북간 사건범주3	863.076	3081.196	.012	.280	.780	.922	1.085
<b>남북간 사건범주4</b>	2728.256	1083.187	<b>.112</b>	2.519	<b>.012</b>	.902	1.109
남북간 사건범주5	977.345	972.941	.044	1.005	.316	.925	1.082
<b>남북간 사건범주6</b>	1167.890	533.429	<b>.098</b>	2.189	<b>.030</b>	.890	1.124
남북간 사건범주7	-260.749	255.356	-.048	-1.021	.308	.804	1.244
남북간 사건범주8	-289.007	573.589	-.023	-.504	.615	.891	1.122
<b>남북간 사건범주9</b>	1292.278	646.660	<b>.088</b>	1.998	<b>.047</b>	.919	1.088
남북간 사건범주10	1545.728	800.603	.087	1.931	.055	.892	1.121
남북간 사건범주11	761.424	1385.954	.026	.549	.583	.815	1.227
남북간 사건범주12	-1742.955	1141.440	-.067	-1.527	.128	.926	1.080
남북간 사건범주13	-3940.889	2889.896	-.061	-1.364	.174	.888	1.126
경제성장률	255.484	292.204	.040	.874	.383	.838	1.193
소비자물가등락률	-263.813	221.837	-.061	-1.189	.236	.683	1.465
반출입고시 개정	-225.622	1682.541	-.006	-.134	.893	.917	1.090

일본의 대북제재	17745.843	1342.495	.688	13.219	.000	.661	1.512
북한의 7.1조치	5193.409	1136.201	.224	4.571	.000	.750	1.334
북한의 화폐개혁	-8288.394	3009.633	-.129	-2.754	.006	.819	1.221
F 유의확률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18.738 .000				.756 .571 .541			

<표 16>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교역의 반출액에 대해서는 모든 요인이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 즉 남북간 정치적 사건, 남한의 경기 호불황 여부, 반출입 고시의 개정 여부 및 일본의 대북경제제재 모두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일반교역 반출액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남북교역에서 북한이 남한산 제품에 대한 소비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16> 일반교역 반출액 회귀분석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한계	VIF
(상수)	2432.390	645.042		3.771	.000		
남북간 사건범주3	604.834	1189.721	.034	.508	.612	.922	1.085
남북간 사건범주4	-259.700	418.244	-.041	-.621	.535	.902	1.109
남북간 사건범주5	67.143	375.675	.012	.179	.858	.925	1.082
남북간 사건범주6	56.516	205.969	.018	.274	.784	.890	1.124
남북간 사건범주7	-39.740	98.599	-.028	-.403	.687	.804	1.244
남북간 사건범주8	-47.701	221.476	-.014	-.215	.830	.891	1.122
남북간 사건범주9	-284.255	249.690	-.075	-1.138	.256	.919	1.088
남북간 사건범주10	-84.707	309.131	-.018	-.274	.784	.892	1.121

남북간 사건범주11	85.498	535.149	.011	.160	.873	.815	1.227
남북간 사건범주12	-187.832	440.737	-.028	-.426	.670	.926	1.080
남북간 사건범주13	-25.855	1115.856	-.002	-.023	.982	.888	1.126
경제성장률	-74.897	112.827	-.046	-.664	.507	.838	1.193
소비자물가등락률	-160.601	85.656	-.144	-1.875	.062	.683	1.465
반출입고시 개정	-341.294	649.668	-.035	-.525	.600	.917	1.090
일본의 대북제재	-41.741	518.368	-.006	-.081	.936	.661	1.512
북한의 7.조치	431.672	438.713	.072	.984	.326	.750	1.334
북한의 화폐개혁	38.438	1162.089	.002	.033	.974	.819	1.221
F 유의확률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628 .868				.207 .043 -.025			

<표 17>에서 일반교역의 반입품목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한의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등락률, 일본의 대북제재, 북한의 7.1조치였다( $p < 0.05$ ). 남한의 경제성장률은 일반교역 반입품목수에 -0.148(표준화계수 베타값)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물가등락률은 -0.536(표준화계수 베타값)의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일본의 대북제재요인은 0.301(표준화계수 베타값)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의 7.1조치는 0.318(표준화계수 베타값)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교역의 반입품목수는 경제적요인과 일본요인, 북한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남한의 경기가 호황일 때 북한산 물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농림수산물 등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국내산보다는 낮고 제3국 수입산보다는 높은 것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의 대북제재로 대일수출이 차단된 북한은 해당 물품을 비슷한 소비수요가 있는 남한으로 대체하였고, 이것이 일반교역의 품목수를 다양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7> 일반교역 반입품목수 회귀분석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한계	VIF
(상수)	70.424	3.348		21.037	.000		
남북간 사건범주3	3.097	6.174	.016	.502	.616	.922	1.085
남북간 사건범주4	3.675	2.171	.056	1.693	.092	.902	1.109
남북간 사건범주5	1.565	1.950	.026	.803	.423	.925	1.082
남북간 사건범주6	1.514	1.069	.047	1.416	.158	.890	1.124
남북간 사건범주7	-.459	.512	-.031	-.896	.371	.804	1.244
남북간 사건범주8	-.283	1.149	-.008	-.246	.806	.891	1.122
남북간 사건범주9	-.584	1.296	-.015	-.451	.653	.919	1.088
남북간 사건범주10	-1.618	1.604	-.034	-1.008	.314	.892	1.121
남북간 사건범주11	-.629	2.777	-.008	-.226	.821	.815	1.227
남북간 사건범주12	.864	2.287	.012	.378	.706	.926	1.080
남북간 사건범주13	8.341	5.791	.048	1.440	.151	.888	1.126
경제성장률	-2.527	.586	<b>-.148</b>	-4.316	<b>.000</b>	.838	1.193
소비자물가등락률	-6.253	.445	<b>-.536</b>	-14.066	<b>.000</b>	.683	1.465
반출입고시 개정	.576	3.372	.006	.171	.864	.917	1.090
일본의 대북제재	20.899	2.690	<b>.301</b>	7.769	<b>.000</b>	.661	1.512
북한의 7.1조치	19.928	2.277	<b>.318</b>	8.753	<b>.000</b>	.750	1.334
북한의 화폐개혁	-7.465	6.031	-.043	-1.238	.217	.819	1.221
F 유의확률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45.385 .000				.874 .763 .747			

<표 18>에서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반출품목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북간 정치적 사건 중에서 사건범주6, 사건범주7, 사건범주9,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등락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확률 < 0.05) 사건 범주6의 영향은 0.148(표준화계수 베타), 사건범주7는 -0.125(표준화계수

베타), 사건범주9는 -0.148(표준화계수 베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의 영향은 -0.157(표준화계수 베타)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물가 등락율은 -0.346(표준화계수 베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교역의 반출품목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으로 판단된다. 정치적 요인은 사건에 따라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복합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한의 국내경기와 반출품목수가 역의 관계를 가지는 것은 <표 17>의 반입품목수 증가와 연관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경기가 불황일 때 북한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북한산 물품의 반입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교역대금의 일부는 경화가 아니라 현물로 결제됨으로써 북한으로 물품 반출이 증가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대북제재로 일부 필수품의 조달이 곤란해진 북한이 남한과의 구상교역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을 가능성도 내포한다.

<표 18> 일반교역 반출품목수 회귀분석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한계	VIF
(상수)	43.826	4.322		10.141	.000		
남북간 사건범주3	1.206	7.971	.008	.151	.880	.922	1.085
남북간 사건범주4	3.872	2.802	.077	1.382	.168	.902	1.109
남북간 사건범주5	3.274	2.517	.071	1.301	.195	.925	1.082
<b>남북간 사건범주6</b>	3.663	1.380	<b>.148</b>	2.654	<b>.008</b>	.890	1.124
<b>남북간 사건범주7</b>	-1.409	.661	<b>-.125</b>	-2.133	<b>.034</b>	.804	1.244
남북간 사건범주8	-.999	1.484	-.038	-.673	.501	.891	1.122
<b>남북간 사건범주9</b>	-4.500	1.673	<b>-.148</b>	-2.690	<b>.008</b>	.919	1.088
남북간 사건범주10	-.915	2.071	-.025	-.442	.659	.892	1.121
남북간 사건범주11	5.588	3.586	.091	1.558	.120	.815	1.227
남북간 사건범주12	-2.437	2.953	-.045	-.825	.410	.926	1.080
남북간 사건범주13	1.046	7.476	.008	.140	.889	.888	1.126
<b>경제성장률</b>	-2.060	.756	<b>-.157</b>	-2.725	<b>.007</b>	.838	1.193

소비자물가등락률	-3.113	.574	<b>-.346</b>	-5.424	<b>.000</b>	.683	1.465
반출입고시 개정	3.401	4.353	.043	.781	.435	.917	1.090
일본의 대북제재	2.875	3.473	.054	.828	.409	.661	1.512
북한의 7.1조치	4.301	2.939	.089	1.463	.145	.750	1.334
북한의 화폐개혁	4.099	7.786	.031	.526	.599	.819	1.221
F 유의확률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7.163 .000				.581 .338 .290			

## 2. 위탁가공교역의 경우

<표 19>에서 보는 것처럼 위탁가공교역에서 반입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등락률, 일본의 대북제재, 북한의 7.1조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 남한의 경제성장률 -0.105(표준화계수 베타)의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물가등락률은 -0.159(표준화계수 베타)의 영향을 미치며, 일본의 대북제재는 위탁가공교역 반입액에 0.680(표준화계수 베타)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북한의 7.1조치는 0.238(표준화계수 베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간 위탁가공교역의 대표적 품목인 의류는 국내 소비시장에서 가격면에서는 중저가 제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반교역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에서 위탁가공으로 생산된 의류도 국내경기가 불황일 때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는 열등재라 할 수 있다.

한편, 북일무역에서도 위탁가공의 주된 품목은 의류였으며, 일본의 대북제재로 일본산 의류 주문이 격감하면서 생긴 북한 의류공장의 생산능력이 남한의 의류위탁가공수요로 채워지면서 남북교역에서 위탁가공교역의 반입액을 성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7.1조치는 비록 남북교역에 대한 정책적 변화를 담고 있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시장화를 촉진시키면서 위탁가공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위탁가공교역 반입액 회귀분석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베타			공차 한계	VIF
(상수)	6581.294	1494.021		4.405	.000		
남북간 사건범주4	-9.709	794.475	-.001	-.012	.990	.912	1.097
남북간 사건범주5	143.238	746.277	.008	.192	.848	.872	1.147
남북간 사건범주6	571.178	406.049	.060	1.407	.161	.882	1.134
남북간 사건범주7	58.776	212.979	.012	.276	.783	.827	1.209
남북간 사건범주	571.167	488.422	.051	1.169	.244	.873	1.146
남북간 사건범주9	658.592	511.472	.054	1.288	.199	.914	1.094
남북간 사건범주10	-457.934	610.884	-.033	-.750	.454	.856	1.168
남북간 사건범주11	167.976	1014.788	.007	.166	.869	.818	1.223
남북간 사건범주12	403.156	845.710	.020	.477	.634	.931	1.074
남북간 사건범주13	152.714	2109.893	.003	.072	.942	.887	1.127
경제성장률	-535.539	241.661	<b>-.105</b>	-2.216	<b>.028</b>	.721	1.386
소비자물가등락률	-724.745	238.427	<b>-.159</b>	-3.040	<b>.003</b>	.599	1.671
반출입고시 개정	2521.810	1303.072	.082	1.935	.054	.915	1.092
일본의대북제재	13625.935	998.191	<b>.680</b>	13.651	<b>.000</b>	.658	1.520
북한의 7.1조치	4334.590	849.475	<b>.238</b>	5.103	<b>.000</b>	.749	1.335
북한의 화폐개혁	4322.918	2198.653	.088	1.966	.051	.817	1.224
F 유의확률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25.692 .000				.819 .671 .644			

<표 20>에서 위탁가공교역의 반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비자물가등락률, 일본의 대북제재,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 경제적 요인 중에서는 소비자물가등락율만 위탁가공



교역의 반출에 영향을 미치며, 영향의 크기는 -0.140(표준화계수 베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대북제재의 영향은 0.636(표준화계수 베타)이며, 7.1조치는 0.204의 영향 (표준화계수 베타)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가공은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주문자가 조달하기 때문에 위탁가공교역에서 반출액은 위탁가공교역의 반입액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위탁가공교역의 반입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반출액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0> 위탁가공교역 반출액 회귀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한계	VIF
(상수)	4250.716	908.270		4.680	.000		
남북간 사건범주4	750.572	482.990	.072	1.554	.122	.912	1.097
남북간 사건범주5	-513.404	453.689	-.053	-1.132	.259	.872	1.147
남북간 사건범주6	356.470	246.852	.068	1.444	.150	.882	1.134
남북간 사건범주7	171.639	129.478	.064	1.326	.186	.827	1.209
남북간 사건범주8	82.978	296.930	.013	.279	.780	.873	1.146
남북간 사건범주9	-396.383	310.942	-.059	-1.275	.204	.914	1.094
남북간 사건범주10	-391.952	371.379	-.050	-1.055	.293	.856	1.168
남북간 사건범주11	-278.602	616.927	-.022	-.452	.652	.818	1.223
남북간 사건범주12	685.009	514.138	.061	1.332	.184	.931	1.074
남북간 사건범주13	1272.858	1282.681	.046	.992	.322	.887	1.127
경제성장률	-61.936	146.914	-.022	-.422	.674	.721	1.386
소비자물가등락률	-355.784	144.949	-.140	-2.455	.015	.599	1.671
반출입고시변동	1416.872	792.185	.082	1.789	.075	.915	1.092
일본의대북제재	7101.917	606.837	.636	11.703	.000	.658	1.520
북한의 7.1조치	2065.151	516.427	.204	3.999	.000	.749	1.335
북한의 화폐개혁	1700.599	1336.642	.062	1.272	.205	.817	1.224
F 유의확률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19.504 .000	.779 .607 .576
----------------	----------------------

회귀분석결과 <표 21>에서 위탁가공교역의 반입품목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건범주6,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등락율, 일본의 대북제재, 북한의 7.1조치, 북한의 화폐개혁으로 나타났다( $p < 0.05$ ). 남북간 정치적 사건 중 사건범주6의 영향은 0.078(표준화계수 베타), 경제성장률의 영향은 -0.158(표준화계수 베타), 소비자물가등락율의 영향은 -0.397(표준화계수 베타), 일본의 대북제재 영향은 0.464(표준화계수 베타), 7.1조치의 영향은 0.304(표준화계수 베타), 화폐개혁의 영향은 0.118(표준화계수 베타)으로 나타났다.

<표 21> 위탁가공교역 반입품목수 회귀분석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한계	VIF
(상수)	64.993	5.008		12.978	.000		
남북간 사건범주4	2.072	2.663	.030	.778	.438	.912	1.097
남북간 사건범주5	.650	2.501	.010	.260	.795	.872	1.147
<b>남북간 사건범주6</b>	2.727	1.361	<b>.078</b>	2.003	<b>.046</b>	.882	1.134
남북간 사건범주7	-.356	.714	-.020	-.498	.619	.827	1.209
남북간 사건범주8	1.281	1.637	.031	.783	.435	.873	1.146
남북간 사건범주9	-2.641	1.714	-.059	-1.541	.125	.914	1.094
남북간 사건범주10	-3.836	2.048	-.074	-1.873	.062	.856	1.168
남북간 사건범주11	-.771	3.401	-.009	-.227	.821	.818	1.223
남북간 사건범주12	2.414	2.835	.032	.852	.395	.931	1.074
남북간 사건범주13	6.709	7.072	.037	.949	.344	.887	1.127
<b>경제성장률</b>	-2.965	.810	<b>-.158</b>	-3.661	<b>.000</b>	.721	1.386
<b>소비자물가등락률</b>	-6.699	.799	<b>-.397</b>	-8.382	<b>.000</b>	.599	1.671
반출입고시 개정	7.351	4.368	.064	1.683	.094	.915	1.092

일본의 대북제재	34.377	3.346	.464	10.274	.000	.658	1.520
북한의 7.1조치	20.471	2.847	.304	7.189	.000	.749	1.335
북한의 화폐개혁	21.405	7.370	.118	2.904	.004	.817	1.224
F 유의확률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33.971 .000				.854 .729 .708			

<표 22>에서 위탁가공교역의 반출품목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북간 주요사건 중 사건범주9, 사건범주10, 사건범주12이며,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등락율, 고시개정여부 및 북한의 화폐개혁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 사건범주9의 영향은 -0.132(표준화계수 베타), 사건범주10의 영향은 -0.138(표준화계수 베타), 사건범주12의 영향은 0.112(표준화계수 베타), 경제성장률의 영향은 -0.152(표준화계수 베타), 소비자물가등락율의 영향은 -0.485(표준화계수 베타), 「반출입 고시」 개정여부의 영향은 0.105(표준화계수 베타)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북한의 화폐개혁이 0.241(표준화계수 베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위탁가공교역 반출품목수 회귀분석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상수)	102.299	7.668		13.340	.000		
남북간 사건범주4	1.254	4.078	.016	.308	.759	.912	1.097
남북간 사건범주5	1.429	3.830	.020	.373	.709	.872	1.147
남북간 사건범주6	3.921	2.084	.100	1.882	.061	.882	1.134
남북간 사건범주7	-1.056	1.093	-.053	-.966	.335	.827	1.209
남북간 사건범주8	3.357	2.507	.071	1.339	.182	.873	1.146

남북간 사건범주9	-6.662	2.625	<b>-.132</b>	-2.537	<b>.012</b>	.914	1.094
남북간 사건범주10	-8.073	3.136	<b>-.138</b>	-2.575	<b>.011</b>	.856	1.168
남북간 사건범주11	1.562	5.209	.016	.300	.765	.818	1.223
남북간 사건범주12	9.399	4.341	<b>.112</b>	2.165	<b>.032</b>	.931	1.074
남북간 사건범주13	12.544	10.830	.061	1.158	.248	.887	1.127
남북간 경제성장률	-3.214	1.240	<b>-.152</b>	-2.591	<b>.010</b>	.721	1.386
소비자물가등락률	-9.234	1.224	<b>-.485</b>	-7.546	<b>.000</b>	.599	1.671
반출입고시 개정	13.497	6.688	<b>.105</b>	2.018	<b>.045</b>	.915	1.092
일본의 대북제재	8.808	5.123	.105	1.719	.087	.658	1.520
북한의 7.1개선조치	6.050	4.360	.080	1.388	.167	.749	1.335
화폐개혁	49.471	11.285	<b>.241</b>	4.384	<b>.000</b>	.817	1.224
F 유의확률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12.671 .000				.708 .501 .461			

## 제5장 결론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1989년부터 2010년 5월까지 월별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 통계를 활용하여 남북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째 정치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남북간 발생한 주요 사건을 COPDAB척도를 활용하여 유형범주를 구분하고 발생빈도를 관찰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가 남북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했을 때, 유의확률  $p < 0.05$  수준에서 남북관계는 일반교역의 반입액과 반출품목수에 영향을 미치고, 위탁가공교역의 반입품목수와 반출품목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1]과 [가설 1-2]를 모두 부분적으로 채택하는 바, 남북관계는 사건 유형에 따라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건범주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른데, 사건범주6(장관급회담 등) 일반교역의 반입액과 반출품목수, 위탁가공교역의 반입품목수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건범주4(대북지원 등)은 일반교역의 반입액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건범주10(남북당국간 행사 연기)은 반출품목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당국간 회담의 진척이나 연기 등 남북관계 중에서도 공식적인 관계가 남북교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건범주8(중립적 수준, 남북간 상투적 비난 등)은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북관계라고 하는 정치적 요인의 영향이 일반인의 상식보다는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한편, 사건범주9(남북간 민간행사 연기, 북한에 불리한 국제환경 조성 등)가 일반교역의 반입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일반교역의 반출

품목수와 위탁가공교역의 반출품목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사건 범주7(실무급 회담, 북한에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이 일반교역의 반출품목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 사건범주12(비무장지대 군사적 도발 등)가 위탁가공교역의 반출품목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경제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남한의 경기가 남북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왜냐하면 남한은 북한산 물품의 주요 소비시장이므로 남한 소비자들의 경제사정에 따라 북한산에 대한 수요가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한의 경기 호황과 불황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등락율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경제성장률은 일반교역의 반입품목수와 반출품목수, 위탁가공교역의 반입액과 반입품목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비자물가등락률은 경제성장률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물론 위탁가공교역의 반출액과 반출품목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소비자물가등락률이 남북교역의 경제적 측면을 측정하는 데 보다 대표성 있는 지표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가설2-1]과 [가설2-2]를 부분적으로만 채택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남한의 경기가 이들 종속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산 물품이 남한의 소비시장에서 남한산에 비기는 고급시장을 차지하지 못하고, 국내산보다는 낮고 제3국산보다는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열등재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법제도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반출입 고시」의 개정 여부가 남북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해 보았다. 1990년 「반출입 고시」가 제정된 이후에 2010년 5월까지 「반출입 고시」는 총 23회 개정되었으며, 그 중에서 반입 또는 반출승인 절차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개정은 18회 이루어졌다. 「반출입 고시」의 개정은 일반교역에 대해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위탁가공교역에서도 반출품목수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반출입 고시」 개정과 일반교역의 인과적 관계를 가정한 [가설 3-1]을 기각하고, [가설 3-2]를 부분적으로 채택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까닭은 위탁가공교역 품목은 비교적 남북교역 초기인 1994년부터 규제완화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규제완화 기조가 2010년 5월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이어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일반교역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일반교역에서는 위장반입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해당 품목을 승인대상으로 추가하는 규제강화는 빈번하게 이루어졌지만, 해당 품목이 남북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반출입 고시」 개정이 남북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넷째, 남북관계, 남한의 경기, 「반출입 고시」 개정 3가지 요인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일반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북관계와 남한의 경기이며, 「반출입 고시」의 개정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남북관계는 일반교역의 반입액과 반출품목수에 영향을 미치고, 남한의 경기는 일반교역의 거래품목수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위탁가공교역에서는 남한의 경기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남북관계는 반입품목수와 반출품목수에 영향을 미치고, 「반출입 고시」개정은 반출품목수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북관계가 남북교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가정한 [가설 4-1]은 일반교역에서 부분적으로 성립하며, 남한의 경기가 남북교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가설 4-2]는 위탁가공교역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성립한다. 즉, 일반교역은 남북관계, 특히 당국간 공식적 관계가 진척이 될 때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위탁가공교역은 남한의 국내경기가 불황일 때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에 가장 크게, 그리고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은 통제변수로 취급한 일본의 대북제재요인이었다. 일본의 대북제재요인은 일반교역의 반입액과 반입품목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위탁가공교역의 반입액과 반출액, 반입품목수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즉, 위탁가공교역에서는 반출액과 반입액이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를 단순화하면, 일본의 대북제재는 일반교역의 반입과 위탁가공교역의 반입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이는 북일무역 중단이후 북한의 수출에 대한 인과적 영향력이 북중무역이 아니라 남북교역에서 나타났다는 이석(2009)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남북교역이 훨씬 더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2007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던 남북교역의 성장은 ‘남북관계’라고 하는 국내정치적 요인보다는 ‘일본의 대북제재’라고 하는 국제적 측면의 외생변수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2006년 10월 이후 일본의 무역제재로 농림수산물 및 의류 위탁가공교역의 수출 판로를 잃은 북한은 남북교역의 확대를 통해서 손실을 보충하고자 했던 것이고, 국내적으로는 북한산 물품이 저가의 틈새시장을 형성함으로써 남북교역의 성장을 이끌었던 것이다. 역으로 일본의 대북무역제재가 장기화되지 않았다면 2007년과 2008년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의 급증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다.

여섯째, 북한이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내부적인 경제정책의 변동은 남북교역에 영향을 미친다. 시장화 요소를 담고 있던 7.1조치는 일반교역의 반입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위탁가공교역의 반입액과 반출액, 반입품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반시장적인 화폐개혁은 일반교역의 반입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위탁가공교역의 거래품목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제2절 연구의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남북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남북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이후에 남북교역을 활성화하거나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먼저, 1989년부터 2010년 5월까지의 통계치를 검토해 보았을 때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요인은 의외로 국내적인 요인이 아니라 일본의 대북무역제재라고 하는 국제적인 요인이었다. 이



러한 결과는 북한의 입장에서 남북교역과 중국이나 일본 등과의 무역은 대체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가 남북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접근하더라도, 남북교역을 위한 제도설계에 있어서는 국내 요인 외에 ‘북한’의 대외무역 현황 및 동북아시아의 국제 무역환경을 둘러싼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한중 FTA, 한중일 FTA의 체결<sup>61)</sup>은 남북교역의 전개 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북한산 물품이 국내에서 경쟁력을 가졌던 부분은 남한에서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광물을 제외하면 수입산에 대하여 관세장벽이 높았던 일부 농림수산물 및 북한의 저임금노동력을 활용하는 섬유류 위탁가공교역이었기 때문이다. FTA의 체결과정에서 제3국산 농림수산물에 대한 관세장벽이 사라진다면 이는 북한산 농림수산물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한중 또는 한중일 FTA 체결 과정에서 농림수산물 개방이 확대되고, 그 이후에 남북교역이 재개될 경우에 일반교역은 과거와 같은 활력을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둘째, 「반출입 고시」 개정이라고 하는 법제도적 요인은 위탁가공교역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반출입 고시」를 통해서 정부가 남북교역 물품의 승인절차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위탁가공교역이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북교역도 다른 경제규제분야와 마찬가지로 규제의 강화 또는 완화를 통해서 남북교역 규모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반출입 고시」 등 제도적 요인의 영향력은 향후 한·중 FTA, 한·중·일 FTA가 체결된 이후에 약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남한에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특정 품목에 대한 반출이나 반입을 규제하더라도 FTA 체결로 관세장벽과 거래비용이 낮아지면 제3국으로 우회하여 국내의 남북교역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것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FTA가

61)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는 2010년 5월 개시되어 2011년 12월에 완료되었고, 한국과 중국정부는 2012년 5월 2일 북경에서 양국통상장관간 공동성명을 통해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하였다.(외교통상부 보도자료 : [www.mofat.go.kr/news/briefing](http://www.mofat.go.kr/news/briefing))

체결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제3국을 우회하는 거래비용이 크기 때문에 위반자가 거의 없지만 FTA가 체결될 경우에 제3국에 수출하는 형태로 해당 물품을 북한으로부터 반입하거나 북한으로 반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남북교역이 재개되는 시점에서는 남북교역과 동북아시아의 국제무역 질서를 조화시킬 수 있는 법제도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교역이 남한과 북한간의 통일에 대비한 경제공동체 건설에 목적이 있음을 고려할 때 지난 20년간 남북교역을 지탱해왔던 무관세 혜택 외에 남북교역을 국제무역과 구별하고 활성화시키는 장치를 고안하는 것은 앞으로의 남북교역에서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셋째로 남북간 긴장 완화나 고조는 남북교역에서 일반교역의 반입액과 위탁가공교역의 거래품목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북간 모든 정치적 사건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사건에 한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한의 경기 요인도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20년간 남북교역에서 남한이 북한산 물품의 주요 소비시장이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남북관계 또는 정치적 요인이 남북교역을 전적으로 좌우한다는 인식이 지나친 단순화를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남북교역이라고 하는 상업적 거래는 국제경제적 조건, 자체의 경제적 수요, 법제도적 요인 등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남북관계의 틀로만 해석하는 기존의 관행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에 대한 연구는 1989년부터 2010년 5월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한다. 따라서 남북교역의 시작이 「7.7선언」이라고 하는 최고지도자의 정책적 결정에서 시작되었고,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2010.3.26)에서 비롯된 「5.24조치」로 잠정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연구대상

에서 제외하였다. 두 사건은 분명히 정치적 사건이며, 따라서 두 사건을 연구에 포함시킬 경우 남북교역도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에 대한 상위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해서 분석을 시도하지는 못했다.

또한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는 1989년부터 2010년 5월까지 남한과 북한 간에 발생했던 주요한 사건들을 COPDAB척도로 평가하여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남북간 정치적 요인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요인이 남북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요인에 대한 계량화 작업을 달리해서 남북교역에 대한 연구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남북관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사건(사건범주7)이 일반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사건(사건범주9, 12)이 일반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분기별 GDP증가율을 월별 경제성장률 지표로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오류가능성을 내재한다고 할 것이다.

법제도의 변경에 대해서는 통일부 소관인 반출입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반출입 고시」 개정 여부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는데, 「반출입 고시」 외에 관세청이 주관하는 원산지확인 절차나 남북간 교역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들 절차의 규제강화와 완화 정도가 남북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규명되어야만 법제도 요인이 남북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고일동·이석·김상기·이재호(2008). 북한의 무역구조 분석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KDI 연구보고서 2008-05.
- 고일동·김상기·이재호(2009). 남북한 교역구조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KDI 연구보고서 2009-04.
- 김유환(2008). 규제방식의 유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규제개혁위원회
- 이효원(2006). 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 서울: 경인문화사.
- 임수호(2008). 계획과 시장의 공존.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정재호·성명재·이명헌(2003). 관세율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국제비교 및 일반균형모형의 응용. 한국조세연구원 정책보고서 03-03.
- 제성호·안영섭·김영윤·김창근·배성인·이근관·지봉도·제강호(20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통일연구원 협동연구총서 04-04(2004.12).
- 중소기업진흥공단(2009). 2009 중소기업 대북 위탁가공사업 추진현황 조사 보고서
- 통계청(2011).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 통일부(200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설집.
- 통일부(2006). 남북교역 실무안내
- 통일부(1989). 남북대화 제47호(1988.12~1989.5)
- 통일부(각 연도). 통일백서.
- 한홍렬 편(2007). 한반도와 주변4강, 국가간 안정지수 정립과 활용. 서울: 홍익재

홍익표 · 이종운 · 김지연 · 양문수 · 이찬우 · 임수호(2011), 북한의 대외경제  
10년 평가(2001~10년). KIEP 연구자료 11-20.

### <논문 및 정기간행물>

강홍중(2006). 남북교류활성화를 위한 관세제도 효율화방안. 무역학회지,  
제31권 제3호 pp109~130.

김동규(2006). 남북한 교역활성화를 위한 원산지제도에 관한 연구. 관세학  
회지, 제6권 제4호 pp77~104.

김난영 · 조민호(2006). 금강산 관광개발이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공헌도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제30권 제3호(통권 55) pp51~70.

김병수(2008. 6). 개별 기업대신 민경련 산하 총회사가 계약 주체. 민족  
21 p106-107

김진수(2007). 남북교역과 대북 경제지원이 남북한 분쟁완화에 미치는  
효과 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진섭 · 고재길 · 남금천(2011). 남북교역의 대금결제 관행과 대응방안. 관  
세학회지, 제12권 제4호 pp389~415.

박병철 · 박동균(2009),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대북경협의 방향과 과제.  
평화학 연구. 제10권 제1호, 2009

신현운(2008).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저스티스,  
통권 제106호 pp147~168. 한국법학원

안홍(2007). 역대 정부의 남북경제교류협력정책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행  
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양문수(2009). 남북 경협 위축과 활성화 과제. 통일경제, 2009년 여름호

\_\_\_\_\_(2010). 북한의 화폐개혁 : 실태와 평가.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  
제연구, 2010년 상반기(통권 제53호)

- 이기동(2010). 북한 경제개혁의 정치적 조건과 영향 - 화폐개혁 조치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 이상수 외(2003). 남북 수산물 교역에 관한 제도적 고찰, 법제처, 남북법제연구보고서 pp193~228
- 이석(2009.3). 남북교역의 변화와 남북관계 경색의 경제적 배경. KDI정책포럼 제212호. [http://m.kdi.re.kr/front/diagnosis\\_view.jsp?pub\\_no=10779](http://m.kdi.re.kr/front/diagnosis_view.jsp?pub_no=10779). 2012.2.10
- 이석기(2006.10). 남북경협 15년의 평가와 과제. KIET 산업경제, pp48~59
- 이영훈(2004). 북한무역 및 남북교역이 북한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경제분석 제10권 제4호
- 이헌경(2011) 북한의 경제조치와 사회경제적 실태. OUGHTOPIA Vol26 No3. Winter
- 양승함·배종윤(2003). 21세기 국제사회의 안보·평화 개념과 평화지수의 적실성. 국제정치논총 제43집 2호 pp7~26
- 정웅(2010.6). 남북교역 금융지원제도의 현황과 수출보험의 과제. 무역보험연구 제11권 제2호 pp1-27
- 최상래(2000.9). 남북교역의 활성화 방안. 한국무역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537-557
- 한충영(2005). 남북한 경제교류가 한반도 평화증진에 미치는 효과 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Tie-Li LI, Huai-Yu Jiang, Fend Gao(2002). Economy and Trade Cooperation between Dandong, China and D.P.R.Korea. 대한지리학회지 Vol 37. No5 p551~558

## 부록 1

###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등을 공고하고, 반출·반입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남북한 교역대상 품목)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남북한 교역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로 하고, 이를 “물품등”이라 한다.

1. 「관세법」 제50조 별표 관세율표에서 분류하고 있는 물품(동 물품의 세 분류는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의한다.)

2. 영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제3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남한과 북한간에 직접 이동하는 물품 등, 중계무역을 위해 남한과 북한을 단순 경유하는 물품등도 포함한다.

2. 제3국을 단순 경유하여 남한과 북한간에 이동하는 물품 등

제4조 (승인이 필요한 반출·반입) ①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등 중 반출·반입 함에 있어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에서 수출·수입에 금지·허가·승인·추천·확인·증명 등의 제한이 있는 물품. 다만, 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반입하는 물품등으로서 도서(전자우편물, 전자출판물, 모사전송물 등을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미술품, 도예·공예작품, 우표, 화폐 등 유가증권(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거나 유통되었던 것), 사진, 필름(노광한 사진필름 및 영화를 포함한다), 엽서·연하장

3.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별표 1에 따른 품목

4.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컴퓨터

5.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포괄적 승인대상물품 중 제3국의 보세 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을 하여 반입하는 물품. 다만, 별표 1에 해당하지 않는 광물과 위탁가공에 의해 반입되는 섬유류는 제외한다.

6.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 8(a)(i), (ii)에 따라 지정된 물품

7.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 8(a)(iii)와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이 별도 공고하는 물품

② 물품등을 반출·반입함에 있어 물품등에 대한 그 승인여부와는 별도로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거래형태와 대금결제 방법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임대 또는 무상으로 반출·반입하는 경우

2. 「외국환거래법」 제4장 지급과 거래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지급과 거래
  3. 청산결제를 통해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
- 제5조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반출·반입을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등,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2. 법 제17조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법 제17조의2에 따라 협력사업의 신고 수리를 얻은 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그 사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등을 반입하는 경우. 다만,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등은 제외한다.
  3.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출하는 원·부자재 및 그 위탁가공으로 생산하여 반입하는 물품등. 다만,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등은 제외한다.
  4.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여행자 휴대품·별송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5.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에서 수출·수입에 신고를 요하는 물품
  6. 남북당국 합의 및 그 위임에 의한 남북회담·행사·사무소 운영 등을 지원·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 제6조 (반출·반입 승인 절차)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반출·반입을 개별적으로 승인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승인신청서등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2. 북한당국과의 협의
    3. 전략물자 등의 사전판정
- 제7조 (한도물량) ① 통일부장관은 국내시장 및 남북교역 상황을 고려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북한산 물품 반입에 관한 한도물량을 정할 수 있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도물량이 정해진 품목 중 신청물량이 한도물량을 초과하는 품목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신청·접수하여 배정할 수 있다.
  -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영 제25조제1항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 (교역보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출·반입 승인을 받은 물품등을 반출·반입한 자는 통관완료 후 5일 이내에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0일까지로 한다.



[별표 1] 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승인이 필요한 품목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1	0305-30-1000	어류의 피레트(건조/명태에 한함)
2	0305-59-3000	건명태(북어)
3	0306-14-3000	꽃게(냉동) 7.1-8.30 반입제한
4	0306-14-9000	기타게(냉동/붉은대게에 한함), 붉은대게와 대게의 암컷 및 두흉갑장 9cm이하 반입제한, 털게 7cm이하 반입제한
5	0306-23-3000	새우와 보리새우(염장·염수장)
6	0306-24-1010	꽃게(산 것, 신선 또는 냉장) 매년 7.1-8.30 반입제한
7	0306-24-1090	기타게(산 것, 신선 또는 냉장 / 붉은대게에 한함), 붉은대게의 암컷 및 두흉갑장 9cm이하 반입제한, 털게 7cm이하 반입제한
8	0307-29-1000	가리비(냉동)
9	0307-41-2000	오징어(산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10	0307-49-1020	오징어(냉동)
11	0307-59-1020	낙지(냉동)
12	0402-10-1010	탈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13	0402-10-1090	분유(탈지분유 이외/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 지방분 1.5% 이하)
14	0402-10-9000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15	0402-21-1000	전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16	0402-21-9000	분유(전지분유 이외/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17	0402-29-0000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18	0402-91-1000	무당연유
19	0402-91-9000	연유(무당연유 이외)
20	0402-99-1000	가당연유
21	0402-99-9000	연유(가당연유 이외)
22	0403-90-1000	버터밀크
23	0404-10-1011	유장분말(사료용)
24	0404-10-1019	유장분말(기타)
25	0404-10-1091	유장(기타/사료용)
26	0404-10-1099	유장(기타)
27	0405-10-0000	버터(밀크에서 얻어진 것)
28	0405-90-0000	밀크에서 얻어진 기타의 지와유(버터 이외)
29	0409-00-0000	천연꿀
30	0410-00-3000	로알제리
31	0507-90-1110	녹용전지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32	0507-90-1190	녹용기타
33	0507-90-1200	녹각
34	0701-10-0000	감자(종자용)
35	0701-90-0000	감자(종자용 이외)
36	0703-10-1000	양파(신선 또는 냉장)
37	0703-20-1000	마늘/탈피한것(신선 또는 냉장)
38	0703-20-9000	마늘/기타(신선 또는 냉장)
39	0709-59-1000	송이버섯(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40	0709-59-2000	표고버섯(신선 또는 냉장)
41	0709-60-1000	고추류(신선 또는 냉장/단고추/벨타입에 한한다)
42	0709-60-9000	고추류(신선 또는 냉장/기타)
43	0710-80-2000	마늘(냉동)
44	0709-90-3000	호박(신선 또는 냉장)
45	0711-90-1000	마늘(일시저장)
46	0711-90-5091	기타채소(일시저장/고추류)
47	0712-20-0000	양파(건조)
48	0712-39-1020	표고버섯(건조)
49	0712-90-1000	마늘(건조)
50	0713-31-1000	녹두(건조/종자용)
51	0713-31-9000	녹두(건조/종자용 이외)
52	0713-32-1000	팥(건조/종자용)
53	0713-32-9000	팥(건조/종자용 이외)
54	0714-20-1000	고구마(신선)
55	0714-20-2000	고구마(건조)
56	0714-20-3000	고구마(냉장)
57	0714-20-9000	고구마(신선·건조·냉동 고구마 이외)
58	0714-90-9090	서류(기타)
59	0802-31-0000	호두(탈각하지 아니한 것)
60	0802-32-0000	호두(탈각한 것)
61	0802-40-1000	밤(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건조)
62	0802-40-2000	밤(탈각한 것/신선·건조)
63	0802-90-1010	잣(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건조)
64	0802-90-1020	잣(탈각한 것/신선·건조)
65	0810-90-3000	대추(신선)
66	0811-90-1000	냉동밤
67	0811-90-2000	냉동대추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68	0811-90-3000	냉동잣
69	0811-90-9000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기타/호두에 한함)
70	0813-40-2000	대추(건조)
71	0904-20-1000	고추(건조/분쇄하지 아니한 것)
72	0904-20-2000	고추(건조/분쇄한 것)
73	0910-10-1000	생강(신선 또는 냉장)
74	0910-10-2000	생강(건조)
75	0910-10-9000	생강(기타)
76	1003-00-9010	겉보리
77	1003-00-9020	쌀보리
78	1003-00-9090	보리(맥주맥·겉보리·쌀보리 이외)
79	1005-10-0000	옥수수(종자용)
80	1005-90-1000	옥수수(사료용)
81	1005-90-2000	옥수수(팝콘용)
82	1005-90-9000	옥수수(종자용·사료용·팝콘용 이외)
83	1006-10-0000	벼
84	1006-20-1000	메현미
85	1006-20-2000	찰현미
86	1006-30-1000	맬쌀
87	1006-30-2000	참쌀
88	1006-40-0000	쇄미
89	1007-00-1000	수수(종자용)
90	1008-10-0000	메밀
91	1008-90-0000	곡물류(메밀·조·카나리시드 등 이외)
92	1102-90-1000	보리가루
93	1102-90-2000	쌀가루
94	1102-90-9000	곡분(쌀·호밀·옥수수·밀·메슬린·보리가루 이외)
95	1103-11-0000	밀(분쇄물 및 조분)
96	1103-19-2000	귀리(분쇄물 및 조분)
97	1103-13-0000	옥수수(분쇄물 및 조분)
98	1103-19-3000	쌀(분쇄물 및 조분)
99	1103-19-1000	보리(분쇄물 및 조분)
100	1103-19-9000	곡물(기타/분쇄물 및 조분)
101	1103-20-1000	밀(펠리트)
102	1103-20-2000	쌀(펠리트)

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103	1103-20-3000	보리(펠리트)
104	1103-20-9000	곡물(기타/펠리트)
105	1104-19-2000	보리(압착 또는 플레이크)
106	1104-12-0000	귀리(압착 또는 플레이크)
107	1104-19-1000	쌀(압착 또는 플레이크)
108	1104-19-9000	곡물(기타/압착·플레이크)
109	1104-29-2000	보리(압착·플레이크 이외)
110	1104-22-0000	귀리(압착·플레이크 이외)
111	1104-23-0000	옥수수(압착·플레이크 이외)
112	1104-29-1000	율무(압착·플레이크 이외)
113	1104-29-9000	곡물(압착·플레이크 이외)
114	1105-10-0000	감자(분, 조분과 분말)
115	1105-20-0000	감자(압착·플레이크 및 펠리트)
116	1108-11-0000	밀 전분
117	1108-12-1000	옥수수 전분(식품용)
118	1108-12-9000	옥수수 전분(기타)
119	1108-13-0000	감자 전분
120	1108-14-1000	매니옥 전분(식품용)
121	1108-14-9000	매니옥 전분(기타)
122	1108-19-1000	고구마 전분
123	1108-19-9000	전분(밀·옥수수·감자·매니옥·고구마 이외)
124	1108-20-0000	이눌린
125	1201-00-1010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126	1201-00-1020	대두(사료용)
127	1201-00-9010	대두(콩나물용)
128	1201-00-9090	대두(기타)
129	1202-10-0000	낙화생(미탈각)
130	1202-20-0000	낙화생(탈각)
131	1207-40-0000	참깨
132	1207-99-1000	들깨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133	1211-20-1100	수삼
134	1211-20-1210	백삼(본삼)
135	1211-20-1220	백삼(미삼)
136	1211-20-1240	백삼(잡삼)
137	1211-20-1310	홍삼(본삼)
138	1211-20-1320	홍삼(미삼)
139	1211-20-1330	홍삼(잡삼)
140	1211-20-2110	인삼분(백삼)
141	1211-20-2210	홍삼분
142	1211-20-2220	홍삼 타브렛·캡슐
143	1211-20-2290	홍삼분말(홍삼분·타브렛·캡슐 이외)
144	1211-20-9100	인삼잎 및 줄기
145	1211-20-9200	인삼종자
146	1211-20-9900	인삼(인삼근·분말·잎·줄기·종자 이외)
147	1213-00-0000	곡물의 껍질(벼짚에 한함)
148	1214-90-1000	사료용 근채류
149	1214-90-9090	기타 사료용 식품(알팔파 베일 이외)
150	1302-19-1110	인삼엑스(백삼)
151	1302-19-1210	홍삼엑스
152	1302-19-1220	홍삼엑스분
153	1302-19-1290	기타 홍삼의 액즙과 엑스
154	1515-50-0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155	1605-90-9010	조미오징어
156	1702-11-1000	유당
157	1702-19-1000	기타 유당
158	1702-90-1000	인조꿀
159	1806-90-2290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기타 혼합물 및 가루 반죽(보리가루의 것은 제외)
160	1806-90-2999	기타 조제식품(오트밀의 것 및 보리가루의 것은 제외)
161	1901-20-1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쌀가루의 것)
162	1901-20-2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보리의 것)
163	1901-20-9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 (쌀가루·보리가루의 것 이외)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164	1901-90-9091	기타 조제식료품(쌀가루의 것)
165	1901-90-9092	기타 조제식료품(보리가루의 것)
166	1901-90-9099	기타 조제식료품(쌀가루·보리가루의 것 이외)
167	1902-19-2000	당면
168	2001-90-9060	마늘(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한것)
169	2008-11-9000	낙화생 조제품(피넛버터 이외)
170	2008-19-9000	견과류 낙화생 기타의 씨 류
171	2009-31-9000	감귤류 주스(브릭스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것/레몬·라임 이외)
172	2009-39-9000	감귤류 주스(기타/레몬, 라임 이외)
173	2103-90-1030	고추장
174	2103-90-9030	혼합조미료
175	2103-90-9040	메주
176	2103-90-9090	혼합조미,조제품 기타
177	2106-90-3019	인삼류(기타 백삼 제품류)
178	2106-90-3021	홍삼차
179	2106-90-3029	홍삼조제품(홍삼차 이외)
180	2106-90-9091	로얄제리, 벌꿀 조제품의 것
181	2505-90-1090 2505-90-9000	천연모래(기타)
182	2701-11-0000	무연탄
183	3301-90-4520	추출한 올레오레진(홍삼의 것)
184	3505-10-3000	배소전분
185	3505-10-4010	프리젤라티나이즈드 또는 스웰링 전분(식품용의 것)
186	3505-10-4090	프리젤라티나이즈드 또는 스웰링 전분(기타)
187	3505-10-5010	에테르화 및 에스테르화 전분(식품용의 것)
188	3505-10-5090	에테르화 및 에스테르화 전분(기타)
189	3505-10-9010	기타 변성전분(식품용의 것)
190	3505-10-9090	기타 변성전분(기타)
191	3505-20-1000	전분 글루
192	3505-20-2000	덱스트린 글루
193	3505-20-9000	기타 글루

부록 2

COPDAB 남북관계 지수 척도

사건 범주	사건 척도	구체적 상황	남북관계
1	92	자발적 국가 통합	
2	47	전략적 동맹 : 공동 군사합동훈련, 공동시장 형성	
3	31	경제적 또는 군사적인 지원 : 군사고문단 지원, 군사협약의 체결	
4	27	비군사적 경제·기술·산업 협약 : 경제적 차관과 원조, 재해물품 원조, 공동 교통망·통신망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량 차관 등</li> <li>○ 실질적 경제협력 협약</li> </ul>
5	14	문화·과학적인 협정 : 대통령의 방문, 국경의 개방, 문화·학술적인 협정이나 교류, 경제적·군사적 도움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상 회담</li> <li>○ 시범 철도·도로·통신 연결</li> <li>○ 한미군사훈련 중단</li> </ul>
6	10	목표/가치/제도에 대한 공식적인 구두적 지원: 불미스런 사고에 대한 사과, 정책에 대한 공식적지지, 외교적 관계의 복원, 취재기자의 입국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관급 회담/경추위</li> <li>○ 새로운 대북정책 발표</li> <li>○ 북한과 제3국간 관계 개선 지원</li> <li>○ 상호 법제도 정비</li> </ul>
7	6	준공식적 교류 : 하급관료의 방문, 고위관료 회담, 민간교류, 대화제의, 전쟁포로 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급 회담</li> <li>○ 북한에 유리한 국제환경(북미관계 진전 등)</li> </ul>
8	-1	내부문제에 대한 중립적 태도 : 극한 표현이지만 상투적인 표현, 가치중립적인 언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에 유리한 국제환경(미국 이외의 국가)</li> <li>○ 대화제의 거부</li> </ul>

사건 범주	사건 척도	구체적 상황	남북관계
9	-6	국가간 불화에 대한 약한 표현 : 정책에 대한 사소한 반대, 범죄 부인, 항의 통지의 거절, 협약의 실패, 정책변경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에 불리한 국제 환경 (북미관계 악화)</li> <li>○ 남북간 민간행사 연기</li> </ul>
10	-18	국가간 불화에 대한 강한 표현 : 보복경고, 회담 거절, 지원요청의 거절, 대통령의 방문 연기, 국제기구의 제안을 거절하거나 방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간 당국행사 연기</li> </ul>
11	-29	외교·경제적 적대행위 : 경제제재행위, 적국 반대지도자의 피난처 제공, 외국 관료에 대한 SPY, 국경의 이동 제한, 대사 등의 소환, 협약 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첩 적발, 민간인의 우발적 NLL 침범</li> </ul>
12	-44	정치·군사적 적대행위 : 테러행위, 외교행위의 단절, 외국시민 납치·억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무장지대 군사적 도발</li> <li>○ 무장간첩, 잠수함 사건</li> </ul>
13	-50	작은 규모의 군사적 행동 육해공에서의 제한적 충돌, 국경봉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해교전 등</li> </ul>
14	-65	군사적 도발 행위 : 간헐적인 포격이나 폭격, 선박 납치	
15	-102	전면적 전쟁	



# 부록 3-1

## 1989년 남북관계 지수

날짜	사건 개요	사건 법주	사건 척도
1-12	문교부 장관, 남북학생교류 촉진을 위한 민간협의기구 발족 담화	7	6
1-24	대한적십자사 총재, 남북적십자회담 재개 촉구 서한	7	6
2-8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1차 예비회담	7	6
2-15	북한적십자회 위원장, 남북적십자회담 재개거부 서한	9	-6
3-2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2차 예비회담	8	-1
3-9	제1차남북체육회담	7	6
3-23	제2차 남북체육회담	7	6
3-29	통일원장관, 남북당국간 대화 촉구성명	7	6
3-31	통일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설치	6	10
4-11	남북고위당국자회담 북측대표단, 제3차 예비회담을 4.26로 연기 통보	9	-6
4-17	남북고위당국자회담 북측대표단, 제3차 예비회담을 7.12로 재연기 통보	9	-6
4-17	남북체육회담 북측대표, 제3차 남북체육회담을 7.18로 연	9	-6
5-30	북한적십자회, 제2차적십자 실무대표접촉 제의	7	6
6-12	대한적십자사 총재,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제의 서한	7	6
7-7	문화공보부 장관, "7.7선언" 1주년 남북 관계개선 노력 지속 성명	7	6
7-15	남북체육회담 수석대표, 북측의 대화자세 시정촉구 통보	8	-1
7-20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 북측대표단, 제3차 예비회담 8월말 재개제의 성명	7	6
7-23	남북체육회담 북측대표단, 제3차 회담 8.10 재개제의 성명	7	6
8-9	남북체육회담 남한대표단, '남북단일팀' 문제 협의 촉구 성명	8	-1
8-11	대한적십자사 총재, 남북적십자회담 재개 촉구 담화	8	-1
8-15	노태우 대통령, 새 통일방안의 기본구상 제시	6	10
8-26	북한적십자회,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9.9 개최 제의	7	6
9-1	남북체육회담 북측대표단장, 제3차 회담 9.13 재개 제의	7	6
9-11	노태우 대통령, 국회 연설에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천명	8	-1
9-27	제1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7	6
10-6	제2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7	6
10-8	노태우 대통령, 미국 양원합동회의 연설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촉구	6	10
10-16	제3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	7	6
10-20	제3차 남북체육회담	7	6
11-8	제4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	7	6
11-13	제5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	7	6
11-15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4차 예비회담	7	6
11-16	제4차 남북체육회담	7	6
11-21	제6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	7	6
11-24	제5차 남북체육회담	7	6
11-27	제7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	7	6
12-1	남북체육회담 제1차 실무대표 접촉	7	6
12-4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수석대표 개별접촉	7	6
12-6	남북체육회담 제2차 실무대표 접촉	7	6
12-7	대한적십자사 총재,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촉구 담화	8	-1
12-15	남북체육회담 제3차 실무대표 접촉	7	6
12-20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5차 예비회담	7	6
12-22	제6차남북체육회담	7	6

## 부록 3-2

### 1990년 남북관계 지수

날짜	사건 개요	사건 발생 주	사건 척도
1-1	노태우대통령 신년사, 남북 최고당국자간 회담 제의	6	10
1-1	김일성, 신년사에서 남북당국 및 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 제의	6	10
1-10	남북체육회담 제4차 실무대표접촉	7	6
1-15	남북체육회담 제5차 실무대표접촉	7	6
1-18	제7차 남북체육회담	7	6
1-22	남북체육회담 제6차 실무대표접촉	7	6
1-23	남북회담 북측대표단, 당국 및 정당수뇌회의 호응 촉구 성명	9	-6
1-29	제8차 남북체육회담	7	6
1-31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6차 예비회담	7	6
2-1	국무총리, 남북정상회담 개최 호응 촉구	8	-1
2-7	제9차 남북체육회담	7	6
2-8	남북회담 북측대표단, '딤스피리트' 기간 중 남북대화 중단 성명	8	-1
2-9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콘크리트 장벽' 참관단 초청제 의	8	-1
2-21	국토통일원, '콘크리트 장벽' 관련 정치선적 중지 촉구 성명	8	-1
2-26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콘크리트 장벽' 관련 북측제의 거부 비난	8	-1
3-1	대통령 3.1절 기념사: 남북한 경제협력 증진 촉구	7	6
3-3	국방부, 북한의 제4남침용 땅굴발견 발표	12	-44
3-5	통일원장관, 제4땅굴 관련 대남무력 통일포기와 남북대화 재개 촉구	7	6
3-6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수석대표, 제4남침용 땅굴 유감표시 및 남북고위급회담 제7차 예비회담 개최 촉구	7	6
3-9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북한 수석대표, 제4남침용 땅굴 책임회피 대남 전동	9	-6
3-22	북한정부정당대표협의회, 당국및정당수뇌협상회의 호응촉구및'콘크리트 장벽'공동조사실무접촉제 의	8	-1
3-28	대한적십자사 총재, 한필성씨와 북한의 노모 상봉 협조요청	7	6
4-7	국무총리, '콘크리트 장벽' 공동조사 부당성 지적 및 남북고위급회담 조속개최 촉구	8	-1
4-20	북한적십자사, 한필성씨 평양방문 환영 편지제공 의사표시	7	6
4-27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수석대표, 제7차 예비회담 5.22 개최 제 의	7	6
4-30	대한적십자사 총재, 한필성씨 귀환보장 촉구	7	6
5-15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수석대표 : 4.27 제 의 관련 연기통보	7	6
5-18	북한적십자사, 한필성씨 평양방문 환영 및 편지제공 의사표시	7	6
5-31	최고인민회의 및 정부원 연합회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 채택	7	6
6-13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북한 단장, 남북정상회담과 UN가입문제 관련 대남 비난	8	-1
6-20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북한 단장,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6.28 개최 제 의	7	6
6-25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7.3일로 수정제 의	7	6
6-26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7.3일로 수정제 의 수락	7	6
7-3	남북고위급회담 제7차 예비회담, 의제 표기 순서 '정치 군사 및 교류'로 합의	7	6
7-5	조국평화통일위원회 3개기본원칙발표	8	-1

7-6	남북고위급회담 제1차 실무대표접촉, 19개 항목 합의	7	6
7-12	남북고위급회담 제2차 실무대표 접촉	7	6
7-20	노태우 대통령, 특별발표를 통해 '8.15 민족대교류' 선언	6	10
7-20	조국평화통일위원회, '8.15 민족대교류' 비난성명	8	-1
7-23	민족대교류' 실현 위한 3부 장관(통일, 법무, 국방) 합동기자회견	7	6
7-24	조국평화통일위원회, 3부 장관 기자회견 관련 '법무당국자 실무접촉' 및 '군사당국자 실무접촉' 거부 성명	8	-1
7-26	남북고위급회담 제8차 예비회담, 고위급회담 개최합의서 서명	7	6
7-30	국무총리, '민족대교류' 실현위한절차협의촉구	7	6
8-1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장, '전민련'대표자 신변안전 보장 촉구	7	6
8-2	국토통일위원장, '7.20 대통령 특별발표' 관련 기자회견	7	6
8-7	정무원 총리, 제1차 고위급회담 실무접촉 관련 대담 전통문	7	6
8-8	국무총리, 남북고위급회담책임연락통보및통신·항공관계자 실무접촉제의 대북전통문	7	6
8-9	정무원 총리, '민족대교류' 기간 중 방북신청희망자 명단접수 거부	9	-6
8-9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관, 항공통신 실무자 접촉 연기 통보	10	-18
8-15	노태우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군비통제 문제를 '고위급회담'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	6	10
8-23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1차접촉	7	6
8-28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2차접촉	7	6
8-30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3차접촉	7	6
9-4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서울 개최	7	6
9-13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접촉	7	6
9-17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접촉	7	6
9-18	유엔 남북한 단일의식 가입 공동신청 주장	7	6
9-18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제41차 세계탁구선수권 대회 및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문제 협의 제안	7	6
9-19	대한적십자사 총재,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9.24) 제의	7	6
9-20	남북한 축구대표팀간 친선경기 평양개최(10.14) 개최 합의	7	6
10-5	남북고위급회담제2차실무대표접촉	7	6
10-16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 평양 개최	7	6
10-27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접촉	7	6
10-30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접촉	7	6
11-12	정무원 총리,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11.16) 개최 제의	7	6
11-13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접촉	7	6
11-17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접촉	7	6
11-21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서 작성을 위한 실무대표접촉	7	6
12-1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서 작성을 위한 3차 실무대표접촉	7	6
12-5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접촉	7	6
12-7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일정 최종 확정	7	6
12-11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6	10

## 부록 3-3

### 1991년 남북관계 지수

날짜	사건 개요	사건 범주	사건 척도
1-1	김일성 신년사에서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소집 제의	6	10
1-9	국무총리, 북한의 연합회의 제안 편지접수 거부 대북전통문 발송	9	-6
1-15	제2차남북체육회담	7	6
1-30	제3차 남북체육회담	7	6
2-8	국회의장,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IPU 평양총회" 남측 대표단 참석 요청 서한	7	6
2-11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제14차 책임연락관 접촉(2.18) 제의	7	6
2-14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책임연락관 접촉 무기연기 통보	9	-6
2-18	통일원 대변인,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촉구 성명발표	7	6
3-25~ 5-9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참가	7	6
4-8	국무총리, 제4차남북고위급회담개최촉구	7	6
4-10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재개 전제조건 제시	9	-6
4-11	통일부 대변인, 전제조건 없이 고위급회담 재개에 나설 것을 촉구	9	-6
5-6~6 -28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참가	7	6
6-26	북한, 노대통령의 독일통일문제 연구지시' 비난 성명 발표	9	-6
7-11	정무원 총리,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제의(8.27~30)	7	6
7-19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접촉	7	6
7-25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범민족대회 관련 대남비난 성명 발표	9	-6
7-30	한반도 비핵지대화 공동선언 채택 제의 성명발표	7	6
8-1~8 -2	남북고위급회담 실무대표 접촉 대표자 명단 상호교환	7	6
8-5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제1차 실무대표 접촉	7	6
8-10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제2차 실무대표 접촉	7	6
8-12	유도선수 귀순을 문제삼아 남북체육회담 무기연기 통보	10	-18
8-16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제3차 실무대표 접촉	7	6
8-21~ 23	책임연락관 접촉,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합의	7	6
9-7~1 2	외무부 차관을 단장을 하는 대표단, 평양 '77그룹 아주그룹 각료회의' 참석	7	6
9-17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7	6
9-20	적십자사 총재, 적십자회담 재개 촉구 대북전통문 발송	7	6

10-14	책임연락관 접촉,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일정 협의	7	6
10-14	대한올림픽위원회위원장,제5차남북체육회담개최제의	7	6
10-17	책임연락관 접촉	7	6
10-22 ~25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평양) : 남북기본합의서 명칭 합의	7	6
10-30	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제5차 남북체육회담 거부	10	-18
11-8	노태우 대통령,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발표	6	10
11-11 ~20	남북고위급회담 제1차, 제2차, 제3차 대표접촉	7	6
11-20	조국통일평화위원회, 한미연례안보협의회 비난 성명 발표	8	-1
12-2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1차 접촉	7	6
12-5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과 2차 접촉	7	6
12-10 ~13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서울) :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3	31
12-17	한반도 핵문제 협의를 위한 대표접촉(12.23) 제의	7	6
12-18	한반도 핵문제 협의를 위한 대표접촉 날짜 수정(12.26) 제의	7	6
12-18	노태우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선언	7	6
12-20	북한의 수정제의 수락	7	6
12-22	외무부 대변인,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서명 및 핵사찰 촉구	7	6
12-22	외교부대변인,'핵무지전과방지구약서명및사찰수용'의사천명	7	6
12-26 ~31	한반도 핵문제 협의를 위한 제1차, 제2차, 제3차 대표 접촉 :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가서명	3	31

## 부록 3-4

### 1992년 남북관계 지수

날짜	사건 개요	사건 범주	사건 척도
1-7	국방부, 92 팀스프리트훈련 중단 발표	3	31
1-14	비핵화 공동선언' 서명 문건 교환을 위한 제1차 대표접촉	7	6
1-16~1-26	김우중 대우그룹회장 방북, 김일성 면담	7	6
1-21	비핵화 공동선언' 서명 문건 교환을 위한 제2차 대표접촉	7	6
1-23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국무회의에서 의결	6	10
1-30	국제원자력기구와 핵안전협정체결	7	6
2-5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승인	6	10
2-7	남북고위급회담 본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가서명	6	10
2-18~2-21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평양) :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 발효	5	14
2-19~27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제1차, 제2차 대표접촉	7	6
3-3~6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제3차~제5차 대표접촉	7	6
3-9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7	6
3-10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제6차 대표접촉	7	6
3-13	남북군사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7	6
3-14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제7차 대표접촉 : 합의서 가서명	5	14
3-17	정무원 총리, 핵문제를 이유로 합의서 이행 지연 대남 비난	9	-6
3-18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7	6
3-19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교환 및 발효	5	14
3-19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1차회의	7	6
3-27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7	6
3-31	남북군사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7	6
4-1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	7	6
4-18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7	6
4-21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	7	6
4-23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	7	6
4-27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	7	6
4-30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	7	6
5-5~5-8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서울) : 남북연락사무소,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등 구성 합의	6	10
5-10	외교부 대변인, 남북핵사찰 관련 담화발표	10	-16
5-12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4차 회의	7	6
5-19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	7	6
5-22	비무장지대 무장병력 침투사건 발생	12	-44
5-25	남북군사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	7	6
5-27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5차 회의	7	6
5-30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	7	6
5-23~6-5	IAEA 북한 핵사찰- 추가 특별사찰 요구	9	-6
6-1	국무총리, 남북 상호핵사찰 수용측구 대북 전통문	8	-1
6-2	이동북 남북고위급회담 대변인, 상호핵사찰 수용 측구 대북 성명	7	6

6-9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제5차 회의	7	6
6-16~17	기계화를 위한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남북회의(파리) : '한글 로마자 표기안' 합의	5	14
6-19	남북군사분과위원회 제5차 회의	7	6
6-26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5차 회의	7	6
6-26	외교부 대변인, 주한미군의 핵무기에 대한 전면 사찰을 주장	10	-16
6-30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	7	6
7-2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제6차 회의	7	6
7-7	국무총리, 이산가족 생산확인 및 귀환정착사업 추진, 고향방문 정례화 제안	7	6
7-12	7.7 제안한 고령 이산가족 교환 정착사업' 거부	9	-6
7-19~25	북한 김달현 부총리, 최각규 부총리 초청으로 서울 방문	6	10
7-21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7차 회의	7	6
7-28	남북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6차 회의	7	6
8-4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제3차 평양토론회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	7	6
8-7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 :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교환사업 무산	9	-6
8-15	노태우 대통령 경축사 : 핵개발 의혹 우려 표명 및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 불이행 유감 표명	8	-1
8-26	남북군사분과위원회제7차회의	7	6
8-28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제7차 회의	7	6
9-1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제3차 토론회(평양)	7	6
9-3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7차 회의	7	6
9-5	남북군사분과위원회 제8차 회의	7	6
9-17~18	제8차남북고위급회담(평양):분야별3개부속합의서채택·발효및화해공동위원회구성합의	5	14
10-5	국가안전기획부, '조선노동당 사건' 관련 간첩단 62명 구속 발표	11	-29
10-7	통일원장관, 간첩단사건 관련 대북 사과요구 성명 발표	10	-16
10-8	이동북 위원장, 간첩단사건 관련 남북정치분과위원회 개최 요구 대북 전통문 발송	7	6
10-12	정치분과위원회 개최 거부 대남 전통	10	-16
10-12	정부, 부총리 방북연기 통보	9	-6
10-22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9차 회의	7	6
10-28	남북군사당국자간직통전화설치·운영을위한제1차통신실무자접촉	7	6
10-29	대한적십자사총재, 남북적십자회담 개최제의 대북 전통문	7	6
10-31	정무원 총리, '93년 틱스프리트 군사훈련 재개결정 취소요구	9	-6
11-3	적십자 본회담 개최 거부 11월 개최예정인 분야별 공동위원회 제1차회의 거부	10	-16
11-18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10차 회의	7	6
11-27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11차 회의	7	6
12-4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대변인 대남전통문 : 틱스프리트훈련 재개결정 철회시 남북대화 재개 시사	9	-6
12-10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12차 회의	7	6
12-11	남북고위급회담남측대변인대북전통문:북핵문제해결없는한틱스프리트훈련재개 불가피	9	-6
12-12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거부	10	-18
12-17	남북핵통제위원회 제13차 회의	7	6

## 부록 3-5

### 1993년 남북관계 지수

날짜	사건 개요	사건 범주	사건 척도
1-25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1차 위원장 접촉	7	6
1-26	남북연락사무소 소장 전통문 : 팀스프리트훈련 실시 통보 및 북측 참관 초청	9	-6
1-29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성명 : 팀스프리트 훈련 관련 동결상 태에 빠진 남북당국사이에 대화재개 의사 없음	9	-6
1-29~30	두만강지역개발 통신전문가 회의(서울) :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 위원회 관계자 3명 참가	7	6
2-16	IAEA, 북한 핵시설 관련 성명발표 : 북한의 신고서에 중대한 하 자가 있음	10	-16
2-23	주제네바 북한대표, IAEA 특별사찰 강행시 핵안전협정파기 경고	9	-6
3-12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성명	12	-44
3-19	이인모 노인, 판문점 통해 방북	7	6
3-24	남북연락사무소 소장, 북한 천도교인 초청 관련 대북 전통문	7	6
3-25	남북연락사무소 소장 : 북한 천도교인 초청 거부 대남 전통문	9	-6
4-7	최고인민회의 :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채택	8	-1
4-20	통일관계장관회의 제10차 회의 :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반대	10	-16
5-9~10	두만강지역개발 계획관리위원회(평양) : 경제기획원 관계자 등 9 명 방북	7	6
5-11	유엔안보리,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재고 촉구 결의	9	-6
5-20	국무총리,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고위급회담 대표접촉 제의	7	6
5-24	김영삼 대통령, "남북연합단계 통한 점진적 ·평화적 통일추진의사 표명"	8	-1
5-25	정무원 총리, 특사교환 제의	7	6
5-31	정무원 총리, 특사교환 방문을 위한 실무접촉 제의	7	6
6-2~11	북미 제1단계 제1차 고위급회담	8	-1
6-3	김영삼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 핵을 갖고 있는 상대와는 약수할 수 없음"	10	-16
6-4	북미제1단계제2차고위급회담	7	6
6-9	국무총리, 핵문제와 특사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 제의	7	6
6-10	북미 제1단계 제3차 고위급회담	7	6
6-11	북미, 북한 NPT탈퇴보류 관련 공동성명 발표	6	10
6-26	정무원 총리, 특사교환 제의 무산관련 대남비난 담화 발표	9	-6
6-26	정부대변인 담화 "핵문제 해결없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은 불가 능하며, 우리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음"	9	-6
7-14~19	북미제2단계제1차~제3차고위급회담(제네바) -IAEA·북한간협상조기재개및남북대화조속재개등합의문발표	8	-1



8-4	남북고위급회담 수석대표, 상호핵사찰 실시를 위한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 개최 제의	7	6
8-9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 재개 거부 답화	9	-6
8-14	남북고위급회담 대변인, 남북회담재개 촉구 대북성명	7	6
8-15	김영삼 대통령, 8.15경축사에서 "북한에 핵무기개발 의혹 해소 촉구"	9	-6
8-18	통일관계장관회의 제12차 회의 : 회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핵문제 등 현안을 북한과 협의	7	6
8-26	IAEA, 북한과의 핵사찰 협상재개 공식 발표	6	10
9-1	남북고위급회담 대변인, 특사교환 및 비핵화문제 우선 논의 제안	7	6
9-2	남북고위급회담 대변인, 특사교환 실무대표접촉 제의	7	6
9-6	남북고위급회담 수석대표, 핵전쟁연습중지 및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 제의	9	-6
9-8	남북고위급회담 수석대표, 조건없이 실무대표접촉에 나갈 것임을 통보	9	-6
9-9	남북고위급회담 수석대표, 핵전쟁연습중지에 대한 입장표명을 전제로 특사교환 실무대표 접촉 주장	9	-6
9-17	남북고위급회담 대변인, 무조건 특사교환 실무대표접촉에 호응해 줄 것을 촉구	9	-6
10-1	IAEA정기총회,대북한결의채택 - 북한이 IAEA와 즉각 협조할 것을 촉구	10	-18
10-5	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제1차 실무대표접촉(관문점)	7	6
10-15	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제2차 실무대표 접촉	7	6
10-24~25	동아시아경기대회 협의회 제7차 회의(평양) : 체육계 인사 등 6명 방북	7	6
10-25	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제3차 실무대표접촉	7	6
11-3	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제4차 실무대표접촉 거부	9	-6
11-7~8	일본의 전후문제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인사 2명 방북	7	6
11-8~10	두만강지역개발계획제2차전문가회의(서울) -북한의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관계자등3명참가	7	6
11-9	94년 팀스프리트훈련을 중지하지 않기로 한 사실 비난	9	-6
12-29	북한 핵사찰 동의	8	-1

## 부록 3-6

### 1994년 남북관계 지수

날짜	사건 개요	사건 범주	사건 척도
1-1	김일성, 신년사, 북한 핵문제는 북미간 해결해야 하며, 문민정부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다'고 비난	10	-18
1-26~27	북미, 미군유해 송환관련 실무회의 개최	7	6
2-22~25	북미 뉴욕실무접촉 개최	7	6
2-23	IAEA, 북한 핵문제 토의 후 '의장요약' 발표	10	-18
2-25	김영삼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제조업·농업·건설·에너지분야'에서 남북 경제공동개발용의 표명	7	6
3-3	제4차 실무대표접촉 개최	7	6
3-3	국방부, '94년 틱스프리트훈련 조건부 중단 발표	5	14
3-9	제5차 실무대표접촉 개최	7	6
3-12	제6차 실무대표접촉 개최	7	6
3-16	제7차 실무대표접촉 개최	7	6
3-16	IAEA 사무총장, 영변 7개 신고시설에 대한 사찰결과 발표	10	-18
3-19	부총리, 특사교환 실무대표접촉결렬관련성명 : 북한측이 회담을 결렬시킨 데 대한 유감표명, 핵무제의 평화적 해결 입장 재확인	9	-6
3-21	특사교환 실무대표단 성명 : "북미3단계회담을 방해하기 위해 특사교환 이용" 비난	9	-6
3-21	IAEA 특별이사회, 북한 핵문제의 UN안보리 회부 채택	10	-18
3-22	한미 고위안보회의, 패트리엇 4월 한국배치 결정	11	-29
3-31	UN안보리, 북한 핵문제에 대한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10	-18
4-15	정부, '4.15조치' 발표 - 특사교환 불추진 및 북한 벌목공 입국 허용	9	-6
4-28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 실무접촉	7	6
4-28	군사정전위원회 일방 철수 통보	10	-18
5-9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 실무접촉	7	6
5-9	대한적십자사 총재,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재개 촉구'	7	6
5-13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북한벌목공문제는 제3국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	8	-1
5-21	조평통'서기국, 귀순벌목공송환요구	9	-6
6-8	대통령주재국가안전보장회의 - UN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따른 군사적 경제적 대비태세 점검	10	-18
6-10	IAEA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10	-18
6-13	IAEA 탈퇴 성명	10	-18
6-16~17	지미 카터 미국 전대통령, 김일성 회담	7	6

6-18	김영삼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개최 제의 수락	7	6
6-28	남북정상회담예비접촉개최 - '남북정상회담개최를위한합의서' 채택 - '94.7.25~27 평양 개최	6	10
7-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7	6
7-11	김일성 사망(7.9)으로 남북정상회담 연기 통보	8	-1
7-18	국무총리, 김일성 조문논쟁 관련 정부입장 발표	10	-18
7-23	북한강성산총리사위귀순기자회견 - 북한은 현재 최소한 5개의 핵무기를 보유	11	-29
8-2	김영삼 대통령, 남북 억류자 조속 송환 노력 지시	9	-6
8-5	미북 3단계 고위급회담 재개(제네바)	7	6
8-26	통일부총리 관훈클럽 토론회, "김정일 체제 안정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됨" 연설	7	6
9-1	중국, 군정위 철수결정 통보	9	-6
9-10	북미베를린전문가회담 -경수로지원문제등협의	7	6
9-13	6.25실종 미군 유해 14구 인도	7	6
9-30	북한단군릉복구위원회대변인담화 - 남한 인사의 평양방문 환영	7	6
10-3	대한적십자사총재,북한지역콜레라공동방역조치제의	7	6
10-5	남측의 콜레라 공동방역 조치 제의 거부 논평	8	-1
10-21	한미 국방장관회담, '94 팀스프리트 훈련 중단 합의	5	14
10-21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 발표	5	14
11-7	김영삼 대통령, '핵-경협연계정책' 해체 방침 표명	7	6
11-9	정부,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발표	7	6
11-10	조평통 대변인 담화, "남북경협안 거부"	9	-6
11-18	KEDO 구성 운영 문제 관련 한미일 실무협의	7	6
11-24	미북 경수로 전문가 회담 개시(베이징)	7	6
12-10	정부, 남북경협활성화조치에 따라 국내기업 방북 승인	7	6
12-15~16	KEDO설립 관련 한미일 고위협의	7	6

# 부록 3-7

## 1995년 남북관계 지수

날짜	사건 개요	사건 범주	사건 척도
1-9~12	KEDO 설립 관련 한미일 실무협의	7	6
1-12	국내기업방북추가승인	7	6
1-19~20	KEDO 설립 관련 한미일 실무협의	7	6
1-20	미 국무부,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 발표	5	14
1-30~2-4	연락사무소 개설 관련 미북 전문가 회담	6	10
2-6	한미 외무장관 합의 : 남북대화 재개를 연락사무소 개설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기로 함.	6	10
2-25	국방부 대변인, '95년 팀스프릿훈련 중단 발표	5	14
2-28	비무장지대 중립국감독위원회 폴란드 대표단, 북한 강요로 철수	10	-18
3-7	김영삼 대통령, 대북 곡물·원자재제공용의천명	7	6
3-9	KEDO 공식 발족	6	10
3-10	김영삼 대통령, 대북 물자지원 제의 거부	8	-1
3-11	외교부 대변인, 한국형 경수로 수용 거부 및 KEDO와의 협상거부 입장 표명	9	-6
3-13	국내기업방북추가승인	7	6
4-1	남북기독교인, 광복절 판문점 공동예배 합의	8	1
4-10	북미 직통전화 개설	6	10
4-12~20	경수로 제공문제 관련 북미 전문가 회담	7	6
4-22	외교부 대변인, 북미 베를린 전문가회담 결렬 관련 기자회견	9	-6
5-3	판문점 대표부, 중립국감독위원회 사무실 폐쇄 성명	10	-18
5-15	김영삼 대통령, 북한에 곡물·물자 제공 용의 표명	7	6
5-19~6-12	북미 준고위급회담 개최	6	10
5-30	국방부, '제86 우성호' 북한에 의해 나포 발표	11	-29
6-1	남북직교역 확대 추진 방침 표명	7	6
6-15	대한적십자사총재, '우성호 선원 촉구' 대북 성명 발표	7	6
6-17	대북 쌀 제공 문제 관련 남북 차관급 회담(베이징)	7	6
6-25	대북 쌀 제공 2천톤 선적 '씨아팩스호' 출항(동해항)	7	6
6-29	정부, '씨아팩스호' 인공기 계양사건 관련 북한 당국의 공식사과 없으면 쌀지원 중단 결정	10	-18
7-1	북한 당국, '씨아팩스호' 인공기 계양사건 관련 공식사과	6	10
7-3	정부, 대북쌀지원재개발표	7	6
7-13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관련 실무접촉	7	6
8-2	쌀 수송선 '삼선비너스호' 선원, 청진항 사진촬영 사건 발상	11	-29
8-4~6	남북한·해외역사·고고학자참석국제학술포럼개최	7	6
8-12	재정경제원차관, 북의쌀수송선억류관련대북전문	7	6
8-13	삼선비너스호 및 선원 귀한 합의	7	6
8-15~22	KEDO 경수로 부지조사단 방북	7	6
9-4	유엔인도적지원국(DHA), 북한 50만명 이재민 발생 발표	8	-1
9-14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대북수해지원 5만불 지원 언급	8	-1
9-21	정부, 한국무역협회의 대규모투자사절단 방북 추진에 불허 표명	8	-1
9-25~29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관련 전문가 회담	6	10
9-27~30	제3차 남북간 북경회담	7	6
10-2	남북간 북경회담 북측 수석대표, 한반도내에서의 남북대화 거부	9	-6
10-24	무장간첩 2명 남파	11	-29
11월	특이동향 없음	8	-1
12-15	KEDO·북한, 경수로공급협정타결	5	14

## 부록 3-8

### 1996년 남북관계 지수

날짜	사건 개요	사건 범주	사건 척도
1-5	KEDO·한국전력, 대북경수로건설상업용역계약체결	8	-1
1-18	WFP, 대북식량지원 참여 호소	8	-1
1-30	IAEA대변인, '북한 주요 핵시설 사찰 계속 거부' 발표	10	-18
2-1	통일부총리, 이산가족상봉 최우선추진 천명	7	6
2-14	국방부, '96 티스프리트 훈련 중지 발표	5	14
2-22	북 외교부 대변인,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보장을 위한 잠정협정 체결' 제의	8	-1
2-23	미국, 북한 여행경고국 지정 해제	8	-1
3-1	김영삼 대통령, 남북대화 조속재개 촉구	7	6
3-5	북한 화물선 '염분진호' 선원 관문점 통해 송환	7	6
3-22	국제적십자연맹, 북한의 식량원조요청 발표	8	-1
3-29	인민무력부, 비무장지대에서의 모종조치 위협 대남담화	10	-18
4-4	조선인민군 관문점대표부 대변인, 비무장지대 불인정 담화 발표	10	-18
4-5~7	관문점 공동구역 내 무장병력 투입(3차레)	12	-44
4-11	유엔 안보리, 북한의 DMZ 도발 관련 의장 언론발표문 채택	10	-18
4-16	한미정상회담, '한반도 4자회담' 제의	7	6
4-18	외교부 대변인, 4자회담 관련 '현실성 검토중' 언급	8	-1
4-20	국방부, 북한 해군 경비정 2척 경계선 침범 발표	12	-44
4-27	통일원, 3개 업체 대북협력사업자 승인	7	6
4-29	(주)대우, 북한 남포공단에서 첫 합영공장 설립 발표	7	6
5-1	미 국무부, 북한을 테러활동지원국으로 발표	9	-6
5-7	외교부 대변인, 미국에게 4자회담 구체적 설명 요구	7	6
5-16	대한적십자사, 북한에 식용유 18만리터 지원	4	27
5-17	무장군인 7명 중부전선 군사분계선 침범	12	-44
5-23	고속경비정 5척 서해 침범	12	-44
5-24	미국, 북한의 미사일 수출 관련 대북한 경제제재 발표	11	-29
5-26~28	리처드슨 미 하원의원 방북 : 미군유해 송환문제 협의	8	-1
6-6	유엔, 제2차 대북식량지원계획 발표 및 국제지원 호소	8	-1
6-11	대북 300만달러 상당 식량지원 방침 발표	4	27
6-13	북한 경비정 3척 경계선 침범	12	-44
6-14	대한적십자사, 제5차 대북 수재민지원계획 발표	7	6
7-8	김영삼 대통령, 북한에 4자회담 호응 촉구	7	6
7-17	중국, 4자회담 지지 발언	8	1
7-24	북미 4자회담 관련 실무접촉	8	1
7-30	UNDP에 수해지역 점검 요청	8	-1
8-2	12월부터 외국항공기에 영공개방 방침 발표	8	-1
8-5~7	한국어 언어학자 국제학술회의 개최(장춘)	7	6
8-12	대한적십자사 총재, 북한 수해 관련 남북적십자 총재 회담 제의	7	6
8-15	김영삼 대통령, 4자회담 실천방향 제시	7	6
8-29	대우, 북한 남포공단에 직원 첫 상주	7	6
9-8	북한, 유엔에 식량원조 공식 요청	8	-1
9-8	김영삼 대통령, 대북수해 복구비 35만달러 지원 표명	7	6
9-9	대한적십자사, 제8차 대북수해 물자지원	4	27
9-13	남북한, 북한영공 한국민항기에도 개방키로 합의	5	14

9-18	잠수함 이용 무장간첩 26명 동해상 침투	12	-44
10-1	국방부, 텀스프릿 훈련 재개방침 표명	11	-29
10-9	한미연합사, '독수리연습' 실시 발표	11	-29
10-18	통일원, 대남정책변화전 대북지원 불가 발표	10	-18
10-21	두만강개발계획 5개국위원회 2차 회의 개막	8	-1
10-30	아태경제이사회 각료회의, 남북한 철도복원 노력키로 합의	8	-1
11-8	김영삼 대통령, 잠수함 침투 사고전 대북경수로 지원 불가 언명	9	-6
11-15	중앙통신, 경수로사업 지연관련 제네바합의 파기 위협	10	-18
11-20	판문점 북측 연락사무소 잠정 폐쇄	10	-18
11-27	김영삼 대통령, '4자회담에서 북한이 잠수함 침투 사과시 수용' 의사표명	8	-1
12-3	유엔사·북한군정위비서장급접촉	8	-1
12-13	통일원 대변인,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5주년 즈음 이행촉구 대북성명	7	6
12-21	김영삼 대통령, 잠수함 사건에 대해 북한의 분명한 사과 및 재발방지 않은 한 대북지원 불가 강조	8	-1
12-29	외교부 대변인, 잠수함 침투사건 사과성명 발표	6	10

## 부록 3-9

### 1997년 남북관계 지수

날짜	사건 개요	사건 법주	사건 척도
1-8	KEDO-북한 대북경수로 제공을 위한 서비스의정서와 부지의정서 서명	7	6
1-16	종교인협회, 남한 종교단체에 수해복구문제 논의 제의	7	6
2-2	통일원장관, 북한 당국 요청시 대북식량지원 검토 용의	6	10
2-12	노동당 국제담당비서 황장엽 망명	11	-29
2-13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서명 거부	10	-18
2-20	통일원 대변인,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대북식량지원 참여 언급	6	10
3-5	4자회담 공동설명회 개최	7	6
3-6	97년도 팀스프릿 훈련 취소 발표	5	14
3-7	연락사무소 개설 등 관련 북미 준고위급 회담	8	-1
3-19	미 국무부, 4자회담 성사 전제로 미국내 북한자산 동결해제 검토 언급	8	-1
3-31	민간단체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	7	6
4-9~15	의정서 이행관련 제1차 KEDO-북한 실무협상	8	-1
4-11	김영삼 대통령, 북한에 4자회담 수용 촉구	7	6
4-18	대한적십자사, 북한에 식량지원 협의 위해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제의	7	6
4-30	대한적십자사, 제18차 북한 수재민 구호물자 전달	4	27
5-3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베이징)	7	6
5-22	IAEA사무총장, 북한에 핵관련 정보 미공개 비난	10	-18
5-26	남북적십자간 대북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 채택	7	6
5-29	4자회담3자(한·미·일)실무접촉	7	6
6-12	IAEA, 북한의 핵안전협정 준수 촉구	9	-6
6-18	4자회담 관련 3자 실무접촉	7	6
6-24	김영삼 대통령, 비무장지대 보존 남북한 협력 제의	6	10
6-28~30	4자회담 관련 실무접촉, 예비회담 8.5 개최 합의	7	6
7-2	KEDO-북한 경수로사업 추진 실무협상 타결	7	6
7-12	평양방송, 조선일보사에 보복위협	9	-6
7-22	경수로지원사업 관련 남북한 우편물교환 시행	5	14
7-25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제2차 구호물자전달 관련 합의서 타결	7	6
8-4	대북경수로 관련 남북간 통신 개통	5	14
8-5	4자회담 제1차 예비회담 개최	7	6
8-14	통일원 대변인, 대북지원 식량 투명성 의혹 관련 논평	9	-6
8-19	KEDO, 신포 금호지구 경수로 부지공사 착공식 개최	8	-1
8-23	통일부 대변인, 대북추가지원(1천만달러) 발표	4	27
9-9	북일, 북송일본인 처 일본방문 합의	8	-1

9-24	외무장관, 한반도유사시 한일간 협의체 구성 제의	9	-6
9-25	KEDO 집행이사회, 북한 위기사태시 파견인원 신변안전 결의	8	-1
10-1	김영삼 대통령, 북한의 대남적화전락 고수 경계촉구	8	-1
10-7~10	남북한 비행정보구역 통신·통과항공 노선 개설을 위한 남북한 당사자회의 개최 -"대구/평양항공교통관제소간관계협정"서명	5	14
10-8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 공식 추대	8	-1
10-14	통일원, 토지개발공사 등 5개사 협력사업자 승인	7	6
10-27	대한적십자사, 북한적십자사에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제의	7	6
11-7	제4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제의	7	6
11-8	대한적십자사 총재, 북한에 구호물자에 대한 분배결과 확인보장 요청	7	6
11-17	대북 수해복구장비 복송	4	27
11-19	남북한 항로관제소간 직통전화 개통	5	14
11-20	국가안전기획부, 남과 부부간첩 및 고영복간첩사건 발표	11	-29
11-21~22	4자회담 제3차 예비회담 개최	7	6
12-8	대한적십자사 총재, 남북적십자 대표접촉(12.22, 베이징) 수정 제의	7	6
12-9~10	제1차 4자회담 개최(제네바)	7	6
12-11	북한적십자회, 제4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동의	7	6
12-19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남북정상회담 제의	7	6
12-23~25	대북구호물자 지원절차 협의를 위한 제4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개최	7	6



## 부록 3-10

### 1998년 남북관계 지수

날짜	사건 개요	사건 범주	사건 척도
1-7	대한적십자사 앞으로 비전향장기수 송환 요구	9	-6
1-17	KBS의 '진달래꽃 필때까지' 방영 보복 경고	9	-6
1-20~24	KEDO-북한 고위전문가회의 개최	8	-1
2-12	유엔, 4억불 규모의 제4차 대북지원 계획 발표	8	-1
2-17	남북한간 관제 통신망 개통	5	14
2-25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특사교환 제의	6	10
3-9	WFP를 통한 옥수수 5만톤 식량지원 발표	4	27
3-16~21	4자회담 제2차 본회담 개최(제네바)	7	6
3-18	정부,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 발표	7	6
3-25~27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3차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 채택	7	6
4-4	적십자회, 비료지원 요청을 위한 남북 당국대표회담 제의	7	6
4-11~17	남북당국대표회담 개최(베이징)	7	6
4-23	대구/평양 비행정보구역 통과 항로 이용개시	5	14
4-30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발표	7	6
5-2~12	리틀엔젤스 예술단, 평양 공연	7	6
5-5~9	KEDO-북한 고위전문가회의 개최	8	-1
6-16	정주영 현대명예회장, 한우 500두 대북지원	7	6
6-22	합동참모본부, 북한 잠수정 1척 동해안에서 예인 발표	12	-44
6-23	관문점 장성급 회담	7	6
6-30	관문점 장성급 회담	7	6
7-12	목호에서 북한 무장간첩 시신 발견	12	-44
7-15	국가안전보장회의, 잠수정 및 무장간첩 침투사건에 대한 시인 및 사과, 재발방지 등 촉구	10	-18
7-29	통일부, 남북기본합의서 유효입장 재확인 발표	7	6
8-15	김대중 대통령, 815 경축사 : 분야별 공동위원회 가동 촉구, 대통령 특사 평양 파견 용의	7	6
8-20	조평통, 8.15경축사에 대한 공개질문장을 통해 사실상 거부	8	-1
8-21~9-5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	8	-1
9-7	현대상선, 현대건설, 금강개발 협력사업 승인	7	6
9-10	북미, 제네바합의 이행 관련 합의	8	-1
9-10	대구 비행정보구역 통과 일본-북한간 직항로 운영 개시	5	14
9-18	정부, 한적을 통한 민간단체 개별 지원 허용	7	6
10-21~24	4자회담 제3차 본회담 개최	7	6
10-27	정주영 현대명예회장, 한우 501두 대북지원	7	6

11-17	금강산 관광지원을 위한 통신망 개통	5	14
11-18	현대 금강산 관광선 첫 출항	7	6
12-1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대북결의안채택 -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상봉촉구 - 핵의혹 지하시설 즉각적인 현장사찰수용 촉구	8	-1
12-13	통일부대변인 남북기본합의서채택7주년논평 -남북기본합의서이행촉구	8	-1

# 부록 3-11

## 1999년 남북관계 지수

날짜	사건 개요	사건 범주	사건 척도
1-15	정부, 현대의 금강산개발계획 승인	7	6
1-16~24	북미 금창리핵의혹시설 관련 제3차 협상(제네바)	8	-1
1-19~22	제4차 4자회담 개최(제네바)	7	6
1-30~2-6	국제옥수수재단 김순권 박사 방북	7	6
2-3	정당,단체연합회의,고위급정치회담제의 - 선행 조건으로 외세와의 공조 파기,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국가보안법 철폐 요구	9	-6
2-10	대북지원 창구 다원화 조치 발표	7	6
2-11	판문점 제4차 장성급회담 개최	7	6
3-9~11	정주영 현대명예회장 북한 방북	7	6
3-9	판문점 제5차 장성급회담 개최	7	6
3-16	북미 금창리핵의혹시설 관련 제4차 협상 타결(뉴욕)	8	-1
3-25	외교통상부 장관,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내 인권문제 제기	9	-6
3-30	대한적십자사, 대북비료 5천톤 지원 계획 발표	4	27
4-10	금강산 솔잎혹파리 방제 관련 남북 수목전문가 접촉	7	6
4-24~27	제5차 4자회담 개최(제네바)	7	6
4-26	김대중대통령, 6자회담 성사 찬성 언급	7	6
4-28~5-4	민주노총 대표단 방북	7	6
5-28	미 국무부 대변인, 북한 금창리 핵의혹시설 조사 결과, '94년 제 네바 합의 위반혐의 미발견 발표]	6	10
5-31	통일부, 이산가족의 북한주민접촉 신고절차 간소화	7	6
6-8~15	경비정 6척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	12	-44
6-15	남북간해군서해상에서교전	13	-50
6-16	북 조평통 대변인, 남한 인사의 평양방문 제한 발표	10	-18
6-20	금강산관광객1명억류 *6.25석방,6.22금강산관광중단	11	-29
6-22	제1차 남북차관급회담 개최(베이징)	7	6
6-25	정부, 금강산 관광 관련 '선 안전보장 후 관광재개' 방침 발표	9	-6
6-28	현대, 아태측과 금강산관광객 안전보장협의 착수	7	6
7-1~3	제2차 남북차관급회담 개최	7	6
7-2	판문점 제8차 장성급 회담 개최	7	6
7-9	현대 장전항 건설 인력 108명 방북	7	6
7-21	판문점 제9차 장성급회담 개최	7	6
8-1	통일부, 금강산 관광 8.5일부터 재개 허용 발표	7	6
8-5~9	제6차 4자회담 개최	7	6

8-9~14	민주노총 축구선수단, 남북노동자 축구대회 참가자 방북	7	6
8-11	정부, 임진강 수계의 남북공동수해방지 추진 제안	7	6
8-17	판문점 제10차 장성급회담 개최	7	6
9-1	판문점 제11차 장성급회담 개최	7	6
9-2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서해 북방한계선 무효화 선언	12	-44
9-7~12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 및 타결(베를린)	7	6
9-17	미국, 대북경제제재 해제 발표	7	6
9-22	남북 임업전문가 회의 개최	7	6
9-27	백남순 외상,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언급	8	-1
9-28~10-2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북한 방북	7	6
10-1	IAEA, 북한에 핵안전협정이행 촉구 결의안 채택	8	-1
10-14~17	한국수목보호연구회 방북, 금강산지역 솔잎혹파리 방제약 효과 조사	7	6
10-19	김대중 대통령,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남북 민족 경제공동체 건설 피력	7	6
10-22	통일부, 북한위성TV 방송시청 허용 -통일교육원, 북한자료센터시청가능	7	6
10-26~27	남북한·해외학자통일회의제5차회의개최	7	6
10-29	담배인삼공사-광명성총회사 담배 공동생산 판매 합의 발표	7	6
11-1~20	서해공단후보지조사단16명방북 -신의주,해주,남포지역시찰	6	10
11-6	미국, 대북 중유 50만톤 지원 완료	8	-1
11-15~19	정몽준대한축구협회장방북 -국제축구대회남북단일팀구성원칙적합의	7	6
11-24	대한적십자사, 대화를 통한 인도적 문제 해결제안 서한 발송	7	6
12-1~3	일본 초당파 의원대표단 방북	8	-1
12-14	일본, '98년 미사일발사 이후 취했던 대북제제조치 해제	8	-1
12-15	KEDO, 한전과 경수로 주계약 체결	8	-1

## 부록 3-12

### 2000년 남북관계 지수

날짜	사건 개요	사건 범주	사건 척도
1-5	국가안전보장회의, 2000년대북정책3대방향결정 -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추진, 냉전종식을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6	10
1-12	한국담배인삼공사, 남북합작담배 '한마음' 남북 동시판매(3.1) 발표	7	6
2-22~25	KEDO-북, 고위 전문가회의 개최(평북 향산)	8	-1
3-9	김대중대통령, '베를린선언' 발표 - 북한경제회복 지원,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정착 추구, 이산가족문제 해결	6	10
3-17~4-8	남북특사접촉, 남북정상회담개최합의 *개최발표(4.10)	7	6
3-23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 서해해상군사분계선 회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5개접 통항질서' 발표	9	-6
4-22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제1차 회담(판문점)	7	6
4-27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제2차 회담(판문점)	7	6
5-3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제3차 회담(판문점)	7	6
5-7	이헌재 재경부장관, ADB총회에서 회원국에 북한의 가입 협조 요청	6	10
5-8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제4차 회담	7	6
5-13	남북정상회담제1차통신·보도실무자접촉	7	6
5-16	남북정상회담의전·경호실무자접촉	7	6
5-17	남북정상회담제2차통신·보도실무자접촉	7	6
5-18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제5차 회담	7	6
5-24~30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 방문, 공연	7	6
5-29~31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 방문	8	-1
5-29~6-10	평양교예단 서울 방문, 공연	7	6
6-13~15	남북정상회담개최 -6.15남북공동선언채택	5	14
6-27~30	남북적십자 회담 개최(금강산)	7	6
7-26	남북 외무장관회담(태국 방콕)	7	6
7-29~31	제1차 남북 장관급 회담	7	6
8-5~12	언론사 사장단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7	6
8-8	정몽헌 현대아산회장, 소 500마리와 함께 방북	7	6
8-14	남북 연락사무소 업무 재개	6	10
8-15~18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서울, 평양)	7	6
08-18~24	조선국립교향악단 서울 방문, 합동 공연	7	6
8-22	현대-북한, 개성공단 개발 합의서에 서명	6	10
8-29~9-1	제2차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	7	6

9-2	비전향 장기수 63명 송환	7	6
9-11~14	북한 김용순 특사 남한 방문	7	6
9-15	남북선수단, 시드니 올림픽 개최식 공동입장	7	6
9-18	경의선 기공식(임진각)	5	14
9-20~24	제2차 남북적십자 회담	7	6
9-25~26	제1차남북국방장관회담(제주도) 제1차남북경협실무접촉(서울)	7	6
9-27~30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제주도)	7	6
10-4	한국수출입은행과 조선무역은행간 '차관계약서' 체결	4	27
10-9~12	북한조명록특사,방미 * 북미 공동선언 발표(10.12)	8	-1
10-9~14	남측 방문단, 노동당 창건 55주년 행사 참관	7	6
10-23~25	올브라이트미국무장관방북 *김정일국방위원장과두차례회담,미사일문제등협의	8	-1
11-7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북한에 손수레 1만대 지원	4	27
11-8~11	제2차남북경협실무접촉 - 투자보장 등 4개 합의서 가서명	4	27
11-16	북-유엔사장군급회담 - 비무장지대 관리권 한국에 이양 합의	4	27
11-21	현대-북한, 서울-평양 민간 직통전화 개설	5	14
11-28	제1차남북군사실무회담 - 경의선·도로연결공사협의	7	6
11-30~12-2	제2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7	6
12-5	제2차 남북군사실무회담	7	6
12-11~14	민주노총, 남북노동자 통일토론회 개최	7	6
12-12~16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7	6
12-21	제3차 남북군사실무회담	7	6
12-27~30	제1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7	6

## 부록 3-13

### 2001년 남북관계 지수

날짜	사건 개요	사건 범주	사건 척도
1-15~2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 방문	8	-1
1-29~31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7	6
1-31	제4차 남북군사실무회담	7	6
2-1	남한 창극단 '춘향전' 평양 공연	7	6
2-1	남북경협추진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합의서체결	5	14
2-8	제5차 남북군사실무회담	7	6
2-8~10	남북전력협력실무협의회의 제1차 회의	7	6
2-21~24	남북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의 제1차 회의	7	6
2-23	제2차이산가족생사·주소확인작업결과통보	7	6
2-26~28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상호 교환방문	7	6
3-3	남북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의 제2차 회의	7	6
3-10~14	김한길문화관광부장관방북,문화·체육교류관련협의	6	10
3-10~20	MBC 방북 취재	6	10
3-13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연기 요청	9	-6
3-15	남북 이산가족 서신교환	7	6
3-24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북측 조문과, 서울 방문	7	6
4-13	남북, 제3차 적십자회담시 합의한 서신 300톤 전달결과 통보	7	6
4-19	조선적십자사, 비료 20만톤 지원 요청(대남 전화통지문)	5	14
4-26	대북 비료지원 발표	4	27
5-1	민주노총·한국노총·북직총,노동자대회개최	7	6
5-14	북한-EU 외교관계 수립 계획 발표	8	-1
5-19~7-10	KBS 방북 취재	6	10
6-6	부시 미 대통령, 북한과 대화재개 선언 발표	8	-1
6-14	6.15선언 1주년 기념, 남북공동사진전시회 개막	7	6
6-15~16	민족통일대토론회', 남북공동행사로 개최	7	6
6-20	한국관광공사, 금강산 관광사업 참여 발표	5	14
6-25	대한광업진흥공사, 남북합작 북한 광산 개발 발표	5	14
7-18~19	남북농민통일대회개최	7	6
7-26~8-18	김정일 국방위원장, 러시아 방문	8	-1
8-8	조선아태위원회, 금강산관광사업관련 대미 비난 성명 발표	9	-6
8-15~21	[8.15 남북공동행사'에 남측 방문단 400여명 참가	7	6
9-3~5	장쩌민 중국 주석, 북한 방문	8	-1
9-15~18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6	10

9-21	IAEA총회, 북한의 핵 비확산 의무 이행 촉구 결의	9	-6
10-3~5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 개최	7	6
10-12	조평통 대변인, 제4차 이산가족 상봉단 교환 연기	10	-16
10-15	원산지역 수해 발표	8	-1
10-19	부산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북한 올림픽위원회에 부산 아시안게임 초청장 발송	7	6
11-3	외무성 대변인, '반테러 협약들'에 가입키로 결정 발표	8	-1
11-9~14	제6차 남북장관급 회담 개최	6	10
11-19	대한적십자사, 동해상에서 표류중 예인된 북한 선박 및 선원 송환	7	6
11-27	합동참모본부, 북한군 비무장지대에서 아군 초소 사격 발표	12	-44
11-29	국방부 대변인,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총격사건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으로 확인, 비서장급 접촉 제의하였으나 북측 무반응	9	-6
12-17	조평통 대변인, 남한의 비상경계조치 지속 비난 담화 발표	9	-6
12-20	통일부 대변인, '조건 없는 남북대화 재개 촉구' 논평 발표	7	6



## 부록 3-14

### 2002년 남북관계 지수

날짜	사건 개요	사건 범주	사건 척도
1-11	합참, 동해상에서 표류중인 북한주민 3명 구조 및 송환	7	6
1-23	정부, 금강산관광 지원방향 발표	4	27
1-29	부시 미대통령,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	9	-6
2-19~21	한미정상회담개최 - 미국은 한국의 대북화해협력정책 지지 발표	7	6
2-27	남측 통일연대의 불참을 이유로 '2002년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행사 불가 통보	9	-6
3-14	탈북자 25명, 주중 스페인대사관 진입 망명 요구	8	-1
3-21	제9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금강산 관광 경비지원방안 확정 발표	4	27
4-3~6	임동원대통령특보, 특사자격으로 방북, 김정일 위원장 면담 - 남북공동보도문(6개항) 동시 발표	6	10
4-6	(주)평화자동차(사장 박상권) 남포시 항구구역에서 '평화자동차 종합 공장' 준공식 개최	7	6
4-11	민통선 내 경의선 도라산역 개통식	5	14
4-19	대한적십자사 총재, 북한 적십자사에 비료 20만톤 지원계획 통보	4	27
4-28~5-3	제4차 이산가족 상봉(금강산)	7	6
5-3	정부, 금강산댐 안전대책 발표	8	-1
5-6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대표단, 외교통상부 장관의 미국 발언을 이유로 회의 무산 성명 발표	10	-18
5-7	국토환경보호성 대변인, 금강산댐 붕괴설 관련 규탄답화 발표	8	-1
5-10~15	제주도민 255명 방북	7	6
5-19~24	북경수로·항공관계자 10명 남한방문	7	6
5-21	미국,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9	-6
5-24	남북합작 농기계수리소 평양에서 준공	7	6
6-12	남북한 최초의 합작대학 '평양과학기술대학' 착공	7	6
6-14	통일부장관, 남북대화재개 대북서한 전달	7	6
6-14~15	6.15 남북공동선언 2주년 통일대축전 개최	7	6
6-14~18	기독교인 평양에서 예배 개최	7	6
6-18	한미일, 북에 IAEA 핵사찰 전면 협력 촉구	8	-1
6-29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 남북교전	13	-50
7-12~14	대학생 통일탐구단 320명 금강산 방문	7	6
7-25	서해교전 관련 유감표명 및 당국간 회담 제의	6	10
8-6	UN아동기금, 북한과 '어린이 영양실태 개선을 위한 공동조사' 실시 합의	8	-1
8-12~14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6	10
8-14~17	8.15 민족통일행사 개최	7	6
8-20~23	북러 정상회담 개최	8	-1
8-27~30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서울)	7	6
9-5	부산아시아경기대회성화백두산·한라산동시채화	7	6
9-6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7	6
9-11~14	MBC, 서울-평양(조선중앙TV)을 위성으로 연결, 생방송 실시	6	10
9-12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채택	8	-1
9-13~17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1차회의	7	6
9-13~18	제5차 이산가족 상봉	7	6

9-14	제6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	7	6
9-16	한국수출입은행, 대북 식량(쌀 40만톤) 차관 계약 체결	4	27
9-16~22	KBS,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 개최(평양)	7	6
9-17	제7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	7	6
9-18	경의선·동해선철도·도로연결착공식	5	14
9-24	남북 군 당국간 직통전화 개통	5	14
9-25~30	MBC, 평양 특별공연	6	10
9-29~10-14	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북측 선수단 및 응원단 700여명 참가	7	6
10-12~14	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제1차회의	7	6
10-13~14	남북해의 청년학생 통일대회 개최	7	6
10-16~17	남북여성 통일대회 개최	7	6
10-17	북, 농축우라늄 개발 시인 관련 한미일 공동 발표	9	-6
10-19~22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평양)	6	10
10-26~11-3	박남기·장성택등경제시찰단18명방문	6	10
10-30~11-2	개성공단건설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평양)	7	6
11-6~9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6	10
11-16	부시미대통령,대북성명발표 -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으며, 핵무기 계획의 완전하고 가시적인 제거를 촉구	9	-6
11-18~20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2차회의 해운협력실무접촉1차회의	7	6
11-25, 2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발표 - 금강산관광지구 지정 및 법 채택, 개성공업지구 지정 및 법 채택	6	10
11-26, 29	동해선,경의선철도·도로연결공동측량완료	7	6
12-6~8	개성공단건설 2차 실무접촉	7	6
12-12	핵 동결 해제 및 핵시설 재가동 선언	12	-44
12-14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비무장지대 남북관리구역 지뢰 제거 완료	5	14
12-15~17	제2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7	6
12-15~17	제3차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개최	7	6
12-23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 개최	7	6
12-25~28	제2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개최(평양)	7	6
12-31	북한당국IAEA사찰관2명추방	10	-18

## 부록 3-15

### 2003년 남북관계 지수

날짜	사건 개요	사건 범주	사건 척도
1-10	NPT 탈퇴 선언	12	-44
1-21~24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6	10
1-21~25	남북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개최	7	6
1-27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	7	6
1-27~29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 특사자격으로 방북	6	10
2-1	제5차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개막식 남북한 공동 입장	7	6
2-2	김석수 국무총리, 북핵문제와 남북경협 병행추진 입장 표명	6	10
2-12	IAEA특별이사회, 북핵문제 안보리 보고 결의안 채택	9	-6
2-11~14	제4차 남북경추위 개최(서울)	6	10
2-20~25	제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7	6
2-23	금강산 육로관광 실시	7	6
2-24	미사일 1기 동해상 발사	12	-44
3-1~2	3.1절 민족공동 통일행사(서울)	7	6
3-4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남한에서 특검제 도입시 남북관계 동결 경고	8	-1
3-10	동해안으로 지대함 미사일 발사	12	-44
3-20	통일부 대변인, 북한에 핵문제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국제사회 요구 수용 촉구	8	-1
4-12	외무성 대변인, 북핵문제 관련 다자회담 수용 가능성 시사	8	-1
4-15	노무현 대통령, 정상회담보다 북핵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언급	8	-1
4-27~29	제10차 남북장관급 회담(평양)	6	10
4-27	통일부, WHO 통해 말라리아 치료약 대북지원	4	27
5-5	미 국무성이 북한을 테러국으로 재지정한 것을 비난	8	-1
5-17	남북한철도·도로연결을위한노반공사완료	5	14
5-23	제5차남북경추위	7	6
5-26	국방부, 북한 어선 6척 서해 NLL 침범 발표	9	-6
5-29	아태 대변인, 사스(SARS)로 인해 임시 중단된 금강산관광 6월 재개 발표	7	6
6-5~6-7	제5차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7	6
6-14	군사분계선 남북 경의선-동해선 연결 행사	5	14
6-27	제7차이산가족상봉행사	7	6
7-2~4	남북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개최	7	6
7-9~12	제11차 남북장관급 회담(서울)	6	10
7-17	연천 DMZ에서 총격, 우리군도 대응 사격	12	-44
8-1	러시아 외무부, 북한 6자회담 수용의사 발표	7	6
8-20	남북 4개 경협합의서 발효	4	27

8-27~28	제1차 6자회담 개최	8	-1
8-26~28	제6차 남북경추위 개최	6	10
8-20~9-1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북한 선수단 참가	7	6
9-17	제8차남북군사실무회담	7	6
9-20	제8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7	6
9-26	서울지법,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대북송금에 대해 통치행위성 부인, 사법심사 대상으로서 위법하다고 판결'	8	-1
10-2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주장	8	-1
10-8	정부, 경의선·동해선 북측 구간철도·도로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를 차관으로 지원하기로 결정	4	27
10-14~17	제12차 남북장관급 회담(평양)	6	10
10-20	부시 미대통령, 다자틀 내에서의 대북 안전보장 제의	7	6
10-23~27	민족평화축전(제주도) 북한 참가	7	6
11-4~6	제5차 남북적십자 회담 개최	7	6
11-7	남북경추위 남측 대표단, 대북 식량차관 분배 투명성 확인을 위해 방북	6	10
11-5~8	제7차 남북경추위 개최	7	6
11-21	KEDO, 대북 경수로 사업 12월 1일부터 1년간 잠정 중단 결정	9	-6
11-29	노동신문, 대북 경수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미국에 위약금 지불 주장	8	-1
12-9	제8차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7	6
12-23	제9차 군사실무회담 개최	7	6
12-24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 개소	5	14

## 부록 3-16

### 2004년 남북관계 지수

날짜	사건 개요	사건 법주	사건 척도
1-2	통일부장관, 지속되고 일관된 평화변영정책 추진 제시	6	10
1-11	노동신문, 남북경협은 민족간 협력사업으로 미국 간섭 배제를 주장	6	10
1-29	제1차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접촉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 합의서 채택	5	14
2-25~28	제2차 6자회담	8	-1
2-26	남북 철도도로 연결 실무접촉 및 해운협력 실무접촉	7	6
3-2~5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제8차회의	6	10
3-6	통일문예인협회' 출범	7	6
3-14	남한 정세를 이유로 제3차 남북청산결제 회담장소 변경 요구	9	-6
3-29~4-3	제9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	7	6
4-8	남북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제4차회의 및 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 의회 제3차회의 개최	7	6
4-13	한국토지공사-개성공업지구 개발지도중국간 개성공단 건설 1단계 1백만평 토지임차료 계약 체결	7	6
4-15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9	-6
4-22	평북 용천역 폭발사고 발생	8	-1
4-23	통일부장관, 용천역 폭발사고 재해복구 지원 발표	4	27
5-1	남북 노동자 5.1절 통일대회 개최(평양)	7	6
5-4~7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평양)	6	10
5-22	북일 정상회담	8	-1
5-24	제4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	7	6
5-26	제1차 장성급군사회담, 서해상 우발적 무력충돌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	7	6
6-2~5	제9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6	10
6-3~4	제2차 장성급군사회담 개최,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선전활동 중지 합의	6	10
6-9	민족화해협의회, 통일운동단체 탄압 비난 성명 발표	8	-1
6-14	남북경비정, 서해 NLL 인근 해상 5개 구역에서 국제 공용 주파수 로 무선 교신	7	6
6-17	남북국회의원 공동세미나' 거부	9	-6
6-23~26	제3차 6자회담	8	-1
6-30	개성공단시범단지2만8천평준공식	7	6
7-2	제10차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7	6
7-9	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연기 일방통보	10	-18
7-11	제10차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 개최	7	6
7-19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제3차 실무대표회담 북한의 무응답으로 무산	10	-18

7-20	대북식량차관(쌀 40만톤) 중 10만톤 북으로 수송	4	27
7-27~28	동남아시아체류탈북자400여명입국 *북한조평통계획적인유인납치라비난	10	-18
7-31	노무현 대통령, 경협사업과 민간교류 일관된 추진을 표명	6	10
8-14	남북, 2004 아테네 올림픽 공동입장	7	6
8-25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 채택	6	10
8-31	남북경추위 제10차 회의 연기 관련 북에 유감 표명	9	-6
9-11	고구려유적 세계문화유산등록기념 남북공동사진전시회 및 학술토론회 개최	7	6
9-23	경비정 1척 서해 연평도 부근 NLL 침범	12	-44
10-1	조평통, 한미동맹 비난 진상공개장 발표	9	-6
10-1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개성공업지구보험규정' 및 '금강산관광지구부동산규정' 채택	6	10
10-20	제네바 합의 파기 선언	10	-18
10-22	외무성 대변인, 6자회담 재개 3대조건 명시	9	-6
10-29	대한적십자사, 북한에 추가 비료지원 계획 통보	4	27
11-1	경비정 3척 서해 소청도 및 연평도 인근 NLL 침범	12	-44
11-16	남측군사분계선까지장갑차를끌어들이는도발행위	12	-44
11-25~27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관련 실무협의 개최	7	6
12-7	경비정 1척 서해 NLL 침범	12	-44
12-8	통일부차관, 남북경협과 북핵해결 병행 추진 강조	6	10
12-15	개성공단 첫 제품 생산 기념식 개최	7	6
12-26	노무현대통령,정상회담의시기·장소불고려표명	6	10
12-27	조평통, '참여정부 2년간 반통일행위 결산서' 발표	9	-6
12-31	남북군함 서해 NLL서 1시간 대치	12	-44

## 부록 3-17

### 2005년 남북관계 지수

날짜	사건 개요	사건 범주	사건 척도
1-13	남한에 비료 50만톤 지원 요청	5	14
1-25~26	한전-북한 특구충국, 개성공단전력공급 실무협약	7	6
2-10	외무성 성명, '핵무기 보유, 6자회담 무기 중단' 선언	10	-18
2-19~21	거래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위“ 출범식	7	6
2-20	평양방송, 남북대화 중단 책임을 남한측에 전가	8	-1
3-27	2~3개 닭공장에서 조류독감 발생	8	-1
3-29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조류독감 확산 방지를 위한 약품·기술 지원용 의 표명	7	6
4-22	조류독감 방역지원 관련 실무접촉	7	6
4-25	금강산 임시도로 CIQ 개설	5	14
4-27~28	개성공단 본단지 전력공급 부속합의서 협의	5	14
5-16~19	남북차관급 회담	7	6
5-20	대북지원 비료 20만톤 전달 시작	4	27
6-14~17	6.15통일대축전 참가 대표단 방북	7	6
6-17	통일부장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하여 김정일 위원장 면담	6	10
6-21~24	제15차 남북장관급 회담	6	10
6-29	대북 비료지원 15만톤 수송 시작	4	27
7-9~12	제10차 남북경추위 회의	6	10
7-12	정동영 통일부 장관,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제안' 발표	6	10
7-20	제3차 장성급 군사회담 제3차 실무대표회담	7	6
7-25~27	제1차 남북수산업협력실무협의회 개최	7	6
7-26~8-7	대북식량차관 차관계약서 합의(7.25) 및 육로 첫 수송 시작	4	27
8-8~10	제5차 남북해운실무접촉	7	6
8-10	남북통신연락소(도라산 군 상황실~개성시) 개통	5	14
8-12	남북장성급 회담 제4차 실무대표회담	7	6
8-14~17	8.15 남북공동행사	7	6
8-15	이산가족 화상상봉 시범실시	7	6

8-18~20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회의	7	6
8-23~25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	7	6
8-24~27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제1차 실무협의	7	6
8-26~31	제11차 이산가족상봉	7	6
8-26	제1차 개성 시범관광 실시	7	6
8-28	한미 을지 훈련 및 백악관 대북 인권특사 임명 비난	9	-6
8-30	금강산 관광객 절반으로 축소 일방 통보	9	-6
9-1~4	아시아 육상선수권 대회(인천), 북한 선수단 참가	7	6
9-13~16	제16차남북장관급회담	6	10
9-13~19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개최, 6개항 공동성명 발표	7	6
9-19	미국,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을 통해 위조달러 유통한다고 발표	10	-18
9-20	방코델타아시아은행 북한과 거래 잠정 중단 선언	10	-18
9-20~30	남북해운협력협의회의 제1차 회의	7	6
10-28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소(개성)	6	10
10-28	제11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	6	10
11-5~10	제12차 이산가족상봉행사	7	6
11-9~11	제5차6자회담	8	-1
11-21~22	KEDO 집행이사회(뉴욕), 경수로 건설사업 종료에 합의	8	-1
11-22	안중근 의사 유해 공동발굴 및 봉환 남북실무접촉	7	6
11-23~24	제2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7	6
12-8~9	제3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7	6
12-13~16	제17차 남북장관급 회담	6	10
12-28	문산전화국-개성전화국-개성공단 간 통신개통 : 분단이후 최초로 남북간 상업용 통신망 연결	4	27



## 부록 3-18

### 2006년 남북관계 지수

날짜	사건 개요	사건 법주	사건 척도
1-5	남북합작 '경기-평양미' 첫 반입	7	6
1-8	KEDO 및 현장잔류인원 최종 철수	9	-6
1-19~20	제2차 남북경추위 위원급 실무접촉	7	6
2-3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접촉	7	6
2-11	토리노동계울리픽 남북공동 입장	7	6
2-18	재외공관장 99명 개성공단 방문	7	6
2-21~23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	7	6
2-27~28	제11차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7	6
2-27~28	제4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7	6
3-1	북관대첩비인도·인수행사	7	6
3-2~3	제3차 남북장성급회담	7	6
3-3	남북아이스하키 친선전	7	6
3-15	경의선·동해선도로남북출입시설준공	5	14
3-20~25	제13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7	6
3-20	주한 미대사관 직원 개성공단 첫 방문	8	-1
4-21	2006 남북공동 나무심기 행사	7	6
4-21~24	제18차 남북장관급 회담	6	10
4-27	남북 첫 합작 정촌 흑연광산 준공	7	6
5-3~4	제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	7	6
5-12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 승인 절차에 관한 특례 개정	6	10
5-15	대북 추가 20만톤 비료지원 시작	4	27
5-16~18	제4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7	6
5-24	열차시험운행 일방 취소	9	-6
6-3~6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체결	6	10
6-4	금강산 가극단 첫 남한 단독 공연	7	6
6-14~17	6.15 통일대축전	7	6
6-19~30	제4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7	6
7-6	대포동 1기를 포함한 미사일 7기 발사	12	-44
7-7	정부,북미사일관련'팔·비료제공유보'발표	10	-18

7-11~13	제19차 남북장관급 회담	6	10
7-15	유엔안보리, '미사일 수출 차단 대북 결의문' 채택	10	-18
7-19	이산가족상봉 중단 선언	9	-6
7-20	금강산 면회소 건설인력 철수 일방 통보	11	-29
8-1	8.15 민족대축전' 수해로 취소 불가피 통보	8	-1
8-20	북한 수해복구를 위해 쌀 10만톤 등 2,210억원 지원 발표	4	27
8-31	개성공단 출입 승인절차 간소화	6	10
9-1	정부, 민간단체에 대북비난 전단 살포 중단 촉구	7	6
10-2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	7	6
10-9	핵실험	13	-50
10-13	유엔안보리, 북한 핵실험 관련 결의안 1718호 채택	10	-18
10-13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 정부보조금 중단 결정	10	-18
11-16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정부 첫 찬성투표	9	-6
11-22	정부,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 남북공동입장' 북한의 제의 수락	7	6
12-5~6	이종석 통일부장관, 금강산 방문	7	6
12-8	이종석 통일부장관, 개성공단 방문	7	6
12-18~22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8	-1
12-21	개성공단 남북간 송전선로 연결	5	14

## 부록 3-19

### 2007년 남북관계 지수

날짜	사건 개요	사건 범주	사건 척도
1-30~31	베이징에서 북미 금융실무협의 개최, 방코델타아시아 제재 해제 문제 논의	8	-1
2-8~13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	8	-1
2-13	2008베이징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4차 남북체육회담 개최	7	6
2-27~3-2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6	10
3-20~4-20	북한 청소년축구팀 방남, 전지훈련	7	6
3-21	이산가족면회소 공사 재개	7	6
3-27	비료 30만톤 대북지원 착수	4	27
3-27~29	제5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7	6
4-6~9	북한 장웅 국제태권도연맹 총재 겸 IOC 위원, 태권도시범단 방남	7	6
4-10~13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7	6
4-18~22	제13차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6	10
4-27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정	6	10
5-8~11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7	6
5-9~14	제15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7	6
5-17	남북 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문산-개성, 제진-금강산)	5	14
5-25	개성공업지구지원법 제정	6	10
5-26	개성공단 전력공급 시작	4	27
5-29~6-1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	6	10
6-1	금강산 내금강 관광 개시	7	6
6-8	제29차남북군사실무회담	7	6
6-30	식량차관 40만톤 대북지원 착수	4	27
7-10	제30차 남북군사실무회담	7	6
7-12	2.13합의' 이행에 따른 대북 중유 5만톤 지원 착수	4	27
7-24~26	제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7	6
7-25	경공업 원자재 대북지원 착수	4	27
8-7~11	제1차 기술지원단 북한 경공업 현장방문 및 기술지도	7	6
8-8	국가안전보장회의, '2007 남북정상회담' 개최 의결	6	10
8-13~14	제6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7	6
8-18	남북정상회담 개최 연기 발표	8	-1
8-23	대북 수해복구 긴급구호물자 및 자재장비 지원 착수	4	27
9-18~21	남북정상회담 제1차 선발대 방북	7	6
9-27~10-1	남북정상회담 제2차 선발대 방북	7	6
10-2~10-4	남북정상회담	5	14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발표		
10-16	개성공단 1단계 기반시설 준공	7	6
10-17~22	제16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7	6
10-23~27	제2차 기술지원단 북한 경공업 현장방문 및 기술지원	7	6
11-3~7	남북 조선협력단지 제1차 현장실사(남포-안변)	7	6
11-12	제32차 남북군사실무회담	7	6
11-14~15	제7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7	6
11-14~16	제1차 남북총리회담	6	10
11-27~29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6	10
11-28~29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	7	6
11-27~12-1	백두산 관광 사전답사	6	10
11-27~12-1	남북농업협력 사업 사전답사	6	10
11-29~12-1	김양건 통전부장 외 6명 방북	6	10
12-4~6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6	10
12-4~8	제2차 기술지원단 북한 경공업 현장방문 및 기술지원	7	6
12-5	개성관광 개시	7	6
12-7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사무소 준공식	6	10
12-10	경의선 물류센터 준공식	6	10
12-11	문산-봉동간 남북 화물열차 정기운행 개시	5	14
12-11~13	개성-평양간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제1차 남북 공동 현지조사	6	10
12-12~14	제7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7	6
12-12~18	개성-신의주 구간 철도 개보수 제1차 현지조사	6	10
12-14	경공업원자재 대북차관 1차 상환광물 인천항 도착	7	6
12-15~18	남북 조선협력단지 제2차 현장실사	6	10
12-20~26	북한 단천지역 지하자원 공동 조사	6	10
12-21~27	개성-평양간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제2차 남북 공동 현지조사	6	10
12-28~29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7	6

## 부록 3-20

### 2008년 남북관계 지수

날짜	사건 개요	사건 법주	사건 척도
1-25	제36차 남북군사실무회담	7	6
1-22~27	경공업원자재 기술지원을 위한 방북	7	6
2-5	남북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 합의서 체결	6	10
2-19~23	남북당국간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북한 현지 실태조사	6	10
2-25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에서 남북정상회담 의지 표명	6	10
3-24	개성공단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남한 당국 인원 철수 요구	11	-29
3-27~28	남북장성급회담 북한 단장 명의 통지문, 남북대화 중단 선언	10	-18
4-1	남한 단장 명의 통지문, 긴장조성 행위 중단 촉구	8	-1
4-10	금강산 공사현장 남한 조달청 직원 추방	10	-18
4-27~28	북핵 관련 대북 에너지 설비 자재 대북수송	4	27
4-24~28	아시아유도 선수권 대회 참석차 북한 선수단 방남	8	-1
5-12	옥수수 5만톤 대북지원 제안	5	14
5-13~20	중앙일보 취재단 18명, '제11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전시회' 참가	6	10
5-29~30	남북교육자대표회의 개최	7	6
6-10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에서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제기	6	10
6-15~16	6.15공동선언 발표 8돌 기념 민족통일대회	7	6
6-14~26	남북체육교류협회, 유소년 축구팀 평양 방문 경기	7	6
6-27	영변 냉각탑 폭파	7	6
6-30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 옥수수 지원 제안	6	10
7-11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북한 초병 총격으로 사망	13	-50
7-12	금강산 관광 잠정 중단, 진상규명 촉구 대북통지문(북한 접수 거부)	9	-6
7-15	조사단 현지 파견 촉구 대북 전통문 전달(북한 수령 거부)	9	-6
7-24	남북 노동자 3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 조직직업 총동맹) 실무접촉	7	6
8-1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정부합동조사단, 모의실험 결과 발표	8	-1
8-3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 특별담화 발표	9	-6
8-3	통일부 대변인 성명, 진상조사 호응 촉구	8	-1
8-9	8.10부터 금강산지구 남측인원 추방 통보	11	-29
8-15	이명박 대통령, 전면적 대화 촉구	6	10
8-26	외무성 대변인, 핵불능화 중단 발표	12	-44
9-22	이명박 대통령, 남북간 전면적 대화 필요성을 표명	6	10

9-23~27	6.15 남측위 관계자 50여명 평양 방북	7	6
10-2	제37차 남북군사실무회담	7	6
10-8~18	남북체육교류협회, 유소년 축구팀 평양 방문 경기	7	6
10-11	미국,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7	6
10-16	노동신문, '남북관계' 전면차단 경고	9	-6
10-28	장성급 군사회담 대표단 대변인, '빠라살포' 등에 대한 경고	9	-6
11-12	장성급 군사회담 대표단 대변인, 12.1부터 육로 통행 제한 경고	9	-6
11-18	대북 민간지원단체의 금강산 방북 허용	7	6
11-26	금강산 남한 체류인원 50% 축소 통보	11	-29
12-1	12.1 육로통행 제한조치' 실행	11	-29
12-5	이명박 대통령, 남북간 대화의지 표명	6	10

## 부록 3-21

### 2009년 남북관계 지수

날짜	사건 개요	사건 범주	사건 척도
1-2	이명박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북한에 협력의 자세로 나올 것을 촉구"	7	6
1-17	군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대통령의 발언을 공공연한 대결선언이라고 비난"	9	-6
1-30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 남북기본합의서 폐기 주장"	10	-18
2-15	통일부 대변인 논평 "대북전단살포 자제 촉구"	8	-1
2-24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 "광명성 2호 발사준비"	11	-29
3-1	이명박 대통령, 3.1절 기념사에서 조건없는 남북대화 제의	6	10
3-9	키리졸브 훈련 비난 및 남북 군통신 차단 발표	10	-18
3-9~20	개성공단 육로통행 제한	11	-29
3-21	군통신 및 육로통행 전면 허용	8	-1
3-30	개성공단 우리측 근로자 억류	12	-44
3-30	PSI 참가시 선전포고 간주 발표	11	-29
4-5	장거리미사일발사	12	-44
4-13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9	-6
4-25	외무성 대변인,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 착수 발표	10	-18
5-15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통지문, "개성공단 기존 계약 무효화 선언"	11	-29
5-25	제2차 핵실험 성공 보도	13	-50
5-26	정부, PSI 전면참여 발표	11	-29
6-5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개성공단 관련 실무접촉 제의	7	6
6-11	개성공단 관련 남북당국간 제1차 실무회담	7	6
6-13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874호 채택	9	-6
6-19	개성공단 관련 남북당국간 제2차 실무회담	7	6
7-2	개성공단 관련 남북당국간 제3차 실무회담	7	6
7-10	남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개성공업지구 실무접촉 결렬 위기 비난	8	-1
7-30	800 연안호' NLL 월선 및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	12	-44
8-10~17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방북, 김정일 위원장 면담	6	10
8-13	개성공단 억류 근로자 송환	7	6
8-15	이명박 대통령, '한반도 새로운 평화구상' 천명	7	6
8-19	김대중 전대통령 서거, 조문단 파견 의사 통지	7	6
8-20	12.1 통행제한조치 해제 통보	5	14
8-21~23	북한 특사조의방문단 방남, 이명박 대통령 예방	6	10
8-26~28	남북적십자회담	7	6

8-29	800 연안호' 선박 및 선원 송환	7	6
9-6	북한의 임진강 상류 황강댐 무단방류로 민간인 6명 사망	9	-6
9-16	개성공단관리위원회-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간 월 임금 5% 인상 합의	7	6
9-21	이명박 대통령, '그랜드 바젠' 제안	6	10
9-26~10-1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7	6
10-12	동해상 단거리 미사일 발사	12	-44
10-1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	7	6
10-26	대한적십자사, 옥수수 1만톤 지원계획 통보	5	14
10-28	군 통신선로 개선공사 재차장비 전달 시작	4	27
11-3	폐연료봉 8,000개 8월말 재처리 완료 주장	12	-44
11-10	북한 경비정 서해 NLL해상 침범, 퇴거 조치(대청 해전)	13	-50
11-12	대청해전 관련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주장	10	-18
11-27	이명박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관련 장소문제 '융통성' 표명	6	10
12-12	남북 해외공단 공동시찰(12.12~22)	7	6
12-18	신종플루 치료제 지원	4	27
12-21	해군사령부 대변인 성명,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북측 수역을 해상 사격구역으로 선포	10	-18
12-23	서해상 표류한 북한 주민 7명 북한으로 송환	7	6



## 부록 3-22

### 2010년 남북관계 지수

날짜	사건 개요	사건 범주	사건 척도
1-11	외무성대변인성명, 정전협정당사국에 평화협정 개최를 제의 - 모든 대화와 협상에서 남한 당국 제외	8	-1
1-15	국방위대변인성명, 급변사태대비 비상통치 계획 완성 비난	10	-18
2-1	개성공단 제4차 실무회담 개최	7	6
2-8	금강산·개성관광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 개최	7	6
2-23	신종플루 관련 손소독제 20만개 지원	4	27
3-1	이명박 대통령, 북한에 국제사회에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촉구	8	-1
3-2	개성공단 3통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실무 접촉 개최	7	6
3-4	아태평화위 대변인 담화, 남한당국의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방 해시 관련 계약 합의 파기 위협	9	-6
3-18	아태위, 3.25부터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부동산 조사 실시 통보	9	-6
3-25~31	금강산지구 부동산 조사 실시	9	-6
3-26	천안함 피격사건 발생	8	-1
4-8	금강산지구내 우리정부 부동산 동결 및 관리인원 추방 발표	11	-29
4-22~23	국방위 정책국장 등 10여명 금강산 민간소유 부동산 조사	9	-6
5-1	대풍국제투자그룹 총재, 중국 투자자와 개성공단 방문	9	-6
5-20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12	-44
5-24	대통령 담화문 발표, 북한에 대한 제재 발표	11	-29
5-25	북남관계 전면폐쇄 선언	10	-18

## Abstract

#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Inter-Korean Trade

– Focused on general trade and consigned  
processing trade–

Hee-kyung Song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researches the influencing factors of inter-Korean trade centered on general trade and consigned processing trade, the commercial trade carried ou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rom January 1989 to May 2010. The influencing factors of inter-Korean trade includes political, economic and legal factors.

Political factors include the degree of upsurge or alleviation of tension in inter-Korean relations from January 1989 to May 2010. Economic factors include business fluctuations in South Korea during the same period. For legal/institutional factors, it can be assumed that fluctuations in shipping/entry system related with the transport of goods between

the two Koreas influences general trade and consigned processing trade.

The political events that took place during the research period were classified into 15 types by using the COPDAB scale and occurrence frequency was calculated. The business fluctuations of South Korea were measured by using the economic growth rate and consumer price fluctuation rate of South Korea announced by the Bank of Korea. For legal/institutional factors, this study reviewed the revision of 「Announcement on transfer・entry approved goods and approval procedure」 that regulates the approval of transfer・entry approval of goods.

In addition to the 3 independent variables, this study also considered the economic sanctions implemented by Japan on North Korea in October 2006 and the changes in economic policy, thus the 2002.7.1 initiative for improving economic administration and the 2009 currency reform as control variables that can influence inter-Korean trade.

By conducting regression analysis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monthly trade volume and number of trade items,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entry amount of general trade were presented as inter-Korean political events, Japan's economic sanctions toward North Korea, North Korea's 7.1 initiative for improving economic administration and currency reform.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no factors that influenced the transfer amount of general trade. This is stipulated to be due to the fact that general trade was centered on goods delivered from South Korea. Factors that influence the number of transferred items of general trade include South Korea's economic growth rate, consumer price fluctuation rate, Japan's sanctions toward North Korea and North Korea's 7.1 Initiative. Thus, the legal/institutional factors do not influence general trade.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exert partial influence. In particular, the factors related with Japan and North Korea presented significant influence as control

variables.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entry volume in consigned processing trade include South Korea's economic growth rate and consumer price fluctuation rate, Japan's economic sanctions toward North Korea and North Korea's 7.1 initiative for improving economic administration. The number of carry-in items in consigned processing trade included political events, economic growth rate, consumer price fluctuation rate, Japan's economic sanction toward North Korea and North Korea's 7.1 initiative for improving economic administration and currency reform. The number of transferred items in consigned processing trade included political events, economic growth rate, revision of carry-in/transfer regulations, Japan's economic sanctions toward North Korea and currency reform. Although political, economic and legal/institutional factors all influenced consigned processing trade, economic factors presented the greatest influence. Furthermore, influence was also exerted by factors related with Japan and North Korea.

In conclusion, this research clarified that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s interacted with one another to influence general trade and consigned processing trade during the inter-Korean trade period. In the domestic aspect, the alleviation of political tension between the two Koreas partially influences inter-Korean trade and other influencing factors include domestic business fluctuations and legal/institutional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aspect, inter-Korean trade is transformed by changes in trade environment surrounding North Korea and changes in North Korean economic policy. Thus, to re-start general trade and consigned processing trade between the two Koreas, which are temporarily suspended in the present day, it is essential to design a system for activating inter-Korean trade in consideration of these aspects.

Key Words: inter-Korean trade, general trade, consigned  
processing trade, inter-Korean relations, business  
fluctuations, legal system

Student Number: 2004-22843